

최민자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로마사 논고』에 나타난
공화주의적 시민성 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임유선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로마사 논고』에 나타난
공화주의적 시민성 연구

최민자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임 유 선

인 준 서

임유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印

심사위원_____ 印

심사위원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로마사 논고(Discorsi sopra la prima deca ki Tito Livio)』(1531)를 중심으로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고찰하고 한국 정치 토양에서 그것이 갖는 정치사상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내적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 개념에서 초래된 개개인들의 권리 만능주의와 정치에의 무관심 현상 또한 팽배하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가 활성화 되는 데에도 원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동력과 지지기반이 되는 조건인 시민의 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선을 지향하는 고전적 공화주의, 특히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적 시민성 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근대 정치철학자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며, 그의 저서 『로마사 논고』는 공화주의 사상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평가받는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적 덕성(civil virtue)을 실천하는 정치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무와 연대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탈리아의 현실 정치 상황을 로마 공화정과 대비하여 정치가 활성화되거나 쇠퇴하는 조건을 논하고 있는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통해 현재 한국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

하는 데 있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학계와 현실 정치의 시민성 담론에서는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적 시민성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공화주의에서의 시민은 공공선과 법에 의한 통치(rule of law)를 중시한다. 특히 마키아벨리는 자유 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함에 있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임을 로마 건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국가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지도자와 시민 모두가 비르투(virtue)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고, 시민적 덕성을 시민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동시에 그러한 참여를 통해 함양되는 양면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법체계 안에서의 자유를 따르되, 공동체의 활동에 무관심한 시민이 아니라 자유를 중시하며 활발하게 참여하는 시민의 덕목을 의미한다. 자신의 자유 혹은 다른 시민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억압받게 될 경우,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공동체의 영역에 참여하고 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강조했던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한국 사회의 내적 갈등과 극단적 개인주의의 문제 그리고 공공선 합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기존연구의 동향 및 과제	10
3. 연구 범위 및 방법	15
II. 로마사 논고의 집필 배경과 정치사상적 의미	18
1. 15-16세기 이탈리아 국내의 사회정치 상황	18
1) 국내 사회정치 상황	23
① 정치적 분열과 위기	23
② 상업자본주의 경제의 성장	25
③ 르네상스 문화 및 예술	27
2) 국외 사회정치상황 : 절대 군주제의 확립	30
2. 마키아벨리의 정치철학	33
1) 이중적 인간관	33
2) 공리주의적 종교관	35
3) 현실주의 정치사상	38
3. 로마사 논고의 정치사상적 의미	43

1) 로마 공화정 분석	43
2) 이탈리아 현실정치 비판	46
Ⅲ. 『로마사 논고』 에 나타난 공화주의 원리	48
1. 로마공화정의 혼합정체성	48
1) 운명(fortuna)과 인간의 자유의지	56
2) 군주정과 공화정 요소의 상호보완성	62
① 계급 갈등의 필연성	62
② 입헌적 질서 확립	70
③ 군주와 인민의 덕성(virtu) 결합	75
2.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등장 배경과 의미	86
1)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기원과 전개과정	86
2)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의미	95
3.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특징과 의의	99
1)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특징	99
① 공공선 중시	99
② 법에 의한 통치 중시	101
③ 시민적 덕성 함양 중시	105
2)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의의	110
4. 공화주의 시민성 담론의 한계	112

IV.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한국정치적 함의	114
1. 공화주의 시민성의 필요성	114
1) 한국의 정치상황적 한계	114
2) 공화주의적 대안의 효용성	118
2. 다문화주의 사회에서의 공화주의적 대안	121
1) 열린사회와 시민적 합리성	121
2) 공화주의적 제도 구축	126
3. 공화주의적 시민 교육으로의 전환	131
1)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한계	131
2) 공화주의적 시민성 함양 교육	135
V. 결론	139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차】

<표 1> 국내 공화주의적 시민성 관련 학술지 및 단행본 수(1990-2011년)	11
<표 2> 국내 공화주의적 시민성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수(1990-2011년)	13
<표 3>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치 분류	41

【지도 목차】

<지도 1> 르네상스기(1500년 무렵) 이탈리아 지도	21
--------------------------------------	----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우리 국민에게 매우 익숙하다. 국가의 정체성을 정의하거나 발전방향을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 ‘Republic of Korea’의 ‘Republic(공화국)’은 공화주의의 실현체라는 의미이므로 역시 공화주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공화주의 원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화주의는 참된 인간성 실현의 계기를 찾는 정치이념으로서 공적 이해를 사적 이해보다 우선시 하는 공공성, 덕성, 활발하고 적극적인 정치참여, 평등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 다수의 자의적 의지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 삼권 분립에 기초한 정부 형태 등을 특징으로 한다.¹⁾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정치 공동체 내부에 있는 각각의 사회 부문들이 정치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제도 또는 개인이나 가족적 유대를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민적 덕성(civil virtue)을 강조하는 전통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다.²⁾

1) 양해림, “한국사회에서 공화주의의 이념은 부활할 수 있는가?,” 『시대와 철학』 제19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8), p. 10.

2) 하지만 공화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해오고 있는 정치사상사적 전통이기 때문이다. 삶을 해석하고 영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정치적 원칙을 바라보는 정치사상사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사회는 공화주의의 정치적 원칙과 제도적 표현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세실 라보르드-존 메이너 저, 곽준혁·조계원·홍승현 역,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서울: 까치, 2009), p. 11-12 참고.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구 각국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금권주의, 대중영합주의 등으로 나타나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인식하며 제3의 길로서 공화주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³⁾ 그 논의 과정에서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된다.

로버트 달(Robert A. Dahl)은 그의 저서 『On Democracy』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적 조건으로 1) 효과적 참여 2) 투표의 평등 3) 계몽적 이해 4) 의제의 통제 5) 성인들의 수용이라는 다섯 가지 민주적 절차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정치에의 적극적 참여와 정치적 권리의 평등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계몽적 이해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이상적 조건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주의는 공공선(common good)과 여러 사람들의 자의에 종속되지 않을 자유와 정치적 권리로서의 평등, 법치의 엄격한 준수, 시민적 덕성을 필요로 하는 정치이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들 중 하나인 ‘시민적 덕성’을 고전적 공화주의를 완성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의 『티투스 리비우스의 첫 10권에 대한 논고』(Discorsi sopra la prima deca ki Tito Livio, 1513)를 기반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⁴⁾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20세기 중반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겪었던 시기이다. 당시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당면 과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87년 6.29선언 이후 성공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수립하였다.⁵⁾ 1970년대까지만 해

3) “공화주의, 제3의 길인가,” 『동아일보』 (2006년 9월 12일자) 참고.

4) 이하 『로마사 논고』로 약칭. 『로마사 논고』의 영문 번역서 제목은 “Discourses on the First Decade of Livy”이고, 이에 대한 한글 번역은 “리비우스 논고”, “리비우스론”, “로마사론”, “정략론”, “공화국론”, “초기 로마사 논고”, “논고” 등으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용어인 “로마사 논고”를 택하였다.

도 정치참여 및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던 한국은 그 이후로 민주주의의 내적인 측면에서도 점차 합당한 면모를 갖추어 왔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를 거치면서 외적 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노정되었다.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부작용으로 내부 적대감이 팽배해진 것이다. 한국사회는 다원화된 가치를 효과적으로 조율하지 못한 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시민들은 부동산과 사교육 문제 등에서 절제 없는 욕망을 표출시키고 있다.⁶⁾

위와 같은 현대 사회의 한계적 정치 상황은 시민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배경이 되었고, 공화주의적 시민성이 문제 해결의 유익한 단서 중의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선을 지향하는 공화주의의 정신을 되살려 현대 정치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부 갈등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공화주의적 시민성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정치사상적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를 기조로 하는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개인의 영역과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극단적 개인주의와 소비주의가 만연하게 되었고, 공동체와 개인이 분리되어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이 양산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들은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공적 삶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매우 어렵게 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구 각국의 학계 및 정계에서 공공선과

5) 6월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6·29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대통령 직선제가 수립되고, 대중적인 정당도 출현하게 되었다. 김용직, “신국가혁신론과 정치개혁-이론과 과제,” 『사회과학논총』 15집(성신여대 사회과학연구소, 2002), p. 52 참고.

6) “시민적 공화주의를 위하여,” 『한겨레』 (2007년 2월 13일자) 참고.

개인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뤄지게 되었다. 예컨대 스킨너(Quentin Skinner)는 소극적 자유 개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로마적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⁷⁾ 로마적 자유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체계모니를 극복할 수 있고,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가 그 원천이라는 것이다.⁸⁾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 제1권의 제1장, 2장을 통해 로마는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채 자유로운 도시로 출발했고, 처음부터 그 자신의 의지에 의해 통치된 도시이기 때문에 자유도시라고 보았고,⁹⁾ 건국 당시의 법률 제정으로 800년간이나 존속했던 스파르타도 자유로운 도시라고 언급했다.¹⁰⁾ 한편, 알렉산드리아와 마키아벨리의 조국 피렌체는 그 반대의 예로 들고 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명성을 드높이는 데서 자유롭지 않았고, 피렌체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영토 확장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¹¹⁾

또한, 좋은 정체에서는 인민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를 타인의 외재적인 필요에 의해 강제되어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내재적인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았다.¹²⁾

7) 퀴텐 스킨너 저·조승래 역, 『퀴틴 스킨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서울: 푸른역사, 2007), pp. 62-63 참고.

8) 김소영, “마키아벨리의 로마공화정에 대한 평가: 리비우스의 『로마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p. 5에서 재인용; Q. Skinner, “The Republican Idea of Political Liberty,” in *Machiavelli and Republican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293-309.

9) Niccolo Machiavelli, (tr. by Harvey C. Mansfield and Nathan Tarcov), *Discourses on Liv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I-1-5, p. 9. (이하 *Discourses on Livy*로 약칭); 니콜로 마키아벨리 저, 강정인·안선재 역, 『로마사 논고』(서울: 한길사, 2003), p. 75. (이하 『로마사 논고』로 약칭).

10) 마키아벨리의 언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I shall speak of those that had a beginning far from all external servitude and were at once governed by their own will, either as a republic or as a principality. ... One sees that Sparta observed them for more than eight hundred years without corrupting them or without any dangerous tumult.” *Discourses on Livy*, 1-2-1, pp. 10-11.; 『로마사 논고』, p. 76.

11) *Discourses on Livy*, I-1-3, p. 8.; 『로마사 논고』, p. 71.

12) 이는 마키아벨리의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The builders of cities are

이렇듯 공화주의에서 자유의 개념은 단순한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자의적 ‘지배의 부재’를 의미한다. 즉 타인의 자의적 지배를 막기 위한 간섭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화국의 시민들은 늘 깨어있어야 한다. 이는 소아병적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대의가 우리를 선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한다는 자기 확신을 내면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유의 개념은 대의를 침해하는 세력에 맞설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세력이 등장할 수 없도록 시민 군을 조직하고 재산 소유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¹³⁾ 이러한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정치공동체 발전의 동력과 지지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19세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¹⁴⁾

둘째,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연구는 법과 제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적 덕성이 계발되지 않으면 법과 제도가 순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 또한 구현될 수 없다.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위기에 처한 공동체와 도덕적 유대, 동료 시민들에 대한 의무감, 공공선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는 정신, 그리고 공동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숙고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현대 미국을 대표하는 공화주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그의 저서 『민주주의의 불만-미국의 공공철학 모색』에서 미국의 극단적

free when peoples, either under a prince or by themselves, are constrained by disease, hunger, or war to abandon the ancestral country and to seek for themselves a new seat.” *Discourses on Livy*, I-1-4, p. 8.; 『로마사 논고』, p. 71.

13) 첫 번째 의미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바뤼흐 스피노자(Baruch Spinoza)에 의해 이뤄졌고, 리처드 프라이스(Richard Price)와 토머스 스펜스(Thomas Spence)는 두 번째 의미에 대한 실천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공화주의의 형성과정과 핵심사상』 (서울: 길, 2010), pp. 9-10 참고.

14) 본래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세력을 키워가던 시민들이 군주제의 독재 경향을 제어하고자 공화주의적 사고를 하며 시작된 공화주의는 현대 미국 사회에서 시민들이 원자화되고 고립된 무연고적 존재로 전락하자 그러한 파편화 현상을 극복하려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공고화를 위한 시도로 다시금 주창되고 있는 것이다. 김경희, 『공화주의』 (서울: 책세상, 2009), p. 12 참고.

개인주의의 폐해를 개인의 무연고성과 중립성을 상징하는 자유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적하며, 시민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성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회복하는 것은 “연대와 참여를 통해 공동의 이익이 실현되는 공화국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¹⁵⁾

공화주의에는 평등의 법체계를 세우고, 법률상의 평등과 사실상의 평등간의 괴리를 해소하여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시민적 덕성을 실천함으로써 정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¹⁶⁾

위와 같은 원리와 목표가 내재된 공화주의는 정치학의 오랜 화두인 자유·정의·복지 등의 개념을 보다 구체성과 현실성을 띤 개념으로 활성화 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해 왔다. 따라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현 정치상황에서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고찰하고 그것의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셋째,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에 나타난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연구는 공화주의 사상의 주요한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정치사상사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아레테(arete, 德性)는 시민적 탁월성을 의미했다. 로마 공화정 시대의 정치가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가 이를 계승하여 진행방향을 알 수 없는 운으로부터의 구체책으로 ‘비르투스’(virtus, 德)를 제시하였다. 이후 ‘비르투스’ 개념은 용기와 합리적 지혜의 계발, 감정의 통제, 공공적 의무에 대한 헌신으로 이해되었다.¹⁷⁾

15) 조승래, 앞의 책, pp. 8-9.

16) 김경희, 앞의 책, p. 12.

17) 키케로는 그의 저서 『투스쿨룸의 대화』(Tusculanae Disputationes)에서 이상적인 교육에 대

마키아벨리는 중세에는 죽어 있던 위와 같은 ‘비르투스’ 개념을 부활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고유한 사상과 접목시켜 절제와 자유를 강조하는 그리스의 공화주의 윤리가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는 시민들 사이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쟁과 갈등의 문제가 항상 주요 문제가 제기되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문제를 한 국가 또는 공동체의 ‘비르투’(Virtù) 문제, 시민들의 자질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하였다. 즉, 시민들이 공공이익과 사적 이해관계 가운데 어떤 쪽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마키아벨리에게는 그가 공공정신의 붕괴로 이야기하는 부패 문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제는 『로마사 논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¹⁸⁾

그는 『로마사 논고』 제1권 제17장에서 “부패한 인민은 자유를 얻더라도 자유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¹⁹⁾고 말한다.

질료가 부패하지 않은 곳에서 봉기나 기타 소동은 해롭지 않다. 그러나 질료가 부패한 곳에서는 한 인물이 그들의 법을 제정하고 최대한 강력하게 그것에 대한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인민을 선하게 만들지 않는 한 잘 계획된 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 만약 질료의 부패로 인해 쇠퇴하게 된 어떤 도시가 다시 부흥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법을 유지시키는 대중의 ‘비르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살고 있는 한 인물의 ‘비르투’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²⁰⁾

해 논의하면서 교육의 목적은 단지 일정 정도의 기술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무색하게 하는 단일 ‘비르투스’를 개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모든 교육의 기본 목적은 지혜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곧 시민으로서의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 조승래, 앞의 책, p. 5에서 재인용; Howard R. Patch, *The Goddess Fortuna in Medieval Literatur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4), p. 13.

18) 박상섭, “Virtù(‘비르투’)의 개념을 중심으로 본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세계정치』 제22권 1호(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1998), p. 12.

19) *Discourses on Livy*, p. 47.; 『로마사 논고』, p. 138.

그리고 그는 『로마사 논고』 제3권 첫 장에서 제도가 부패할 경우에 그 부패는 국가를 파멸시키기 마련이므로 시초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²¹⁾ 종교와 공화국 및 왕국의 모든 시초는 최초의 명성과 성장을 가져온 모종의 선(善)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부패를 막고 원리를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시민적 덕성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이와 같은 마키아벨리의 관점은 현재의 한국 상황에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국 또한 공적 이익을 희생시켜 사적 이득을 챙기는 부정부패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타락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80%가 한국 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 20대와 30대의 절반이 이민을 갈 수 있다면 떠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조사²³⁾ 결과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시대를 초월한 현실 파악력으로 현대까지 뛰어난 정치가로 인정받는 사상가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부분적으로 인용하며 위와 같이 한국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0)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at where the matter is not corrupt, tumults and other scandals do not hurt; where it is corrupt, well-ordered laws do not help unless indeed they have been put in motion by one individual who with an extreme force ensures their observance so that the matter becomes good. ... that if a city that has fallen into decline through corruption of matter ever happens to rise, it happens through the virtue of one man who is alive then, not through the virtue of the collectivity that sustains good orders.” *Discourses on Livy*, I-17-3, p. 48.; 『로마사 논고』, pp. 140-141.

21) 마키아벨리의 해당 언급은 다음과 같다. “If One Wishes a Sect or a Republic to Live Long, It Is Necessary to Draw It Back Often toward Its Beginning.” *Discourses on Livy*, III-1. p. 209.; 『로마사 논고』, p. 411.

22) 콕차섭, “공화주의와 우리의 마키아벨리언 모멘트,” 『철학과 현실』 제89호(철학문화연구소, 2011), pp. 174-175.

23) “20, 30대 절반이 이민 가겠다고,” 『한국일보』 (2003년 4월 24일자) 참고.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마키아벨리의 대표 저작인 『로마사 논고』를 통하여 공화주의적 시민성이 지속가능한 정치공동체 구현에 기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로마사 논고』는 1513년부터 1519까지 7년여에 걸쳐 집필되었고, 저자 사후 4년이 지난 1531년에 출간되었다. 『로마사 논고』는 로마 역사가 티투스 리비우스(Titus Livius)의 저서 『로마사』(Ab Urbe Condita)²⁴⁾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정치 평론서이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의 첫 10권을 통해 로물루스가 로마를 세울 때부터 3차 삼니움 전쟁을 치를 때까지인 기원전 753년에서 기원전 293년까지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로마공화정으로 하여금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도록 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정치·군사·제도 및 대외정책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마키아벨리의 집필 의도는 서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고대 왕국과 공화국에서 일어난 가장 고결한 업적들이 기록된 역사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그것에서 진정한 지식을 얻지 못한 결과 ... 군주와 공화국 모두 고대의 선례를 참고하지 않고 있다. ...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로부터 벗어나길 바라며 ... 나는 그 시대의 악의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아 온 티투스 리비우스의 모든 저작에서 고대와 현대의 지식을 더 훌륭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추려내어 집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²⁵⁾

24) 로마가 건설될 때부터 로마에서 공화정이 전성기를 이룰 때까지의 역사를 다룬 중요한 역사서이다. 총 142권으로 저술된 티투스 리비우스의 『로마사』 중에서 현존하는 것은 1-10, 21-45권까지의 총 35권이다.

25) 제1권 서문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that the most virtuous works the histories show us, which have been done by ancient kingdoms and republics ... not having a true knowledge of histories ... neither prince nor republic may be found that has recourse to the examples of the ancients. ... Wishing, therefore, to turn men from this error, I have judged it necessary to write on all those books of Titus Livy that have not been intercepted by the malignity of the times whatever I shall judge necessary for their greater understanding, according to knowledge of ancient and modern things ...” *Discourses on Livy*, pp. 5-6.; 『로마사 논고』, pp. 67-69.

또한 『로마사 논고』는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사상이 함축적으로 녹아 있는 저서라고 정평이 나 있다. 공화주의 정치철학자 모리치오 비롤리(Maurizio Viroli)는 근대 공화주의의 진정한 입안자인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의 정치사상가들 중 단연 특출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한 바 있다.²⁶⁾ 본 연구에서 『로마사 논고』를 중심으로 시민적 덕성을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공화국에 필요한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의미와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기존 연구동향 및 과제

공화주의적 시민성 개념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적 정치상황에서 발전된 정치사상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비르투스’(virtus)에서 비롯되었다.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의 인문주의 학자들은 이를 복원하여 사용하였다. ‘덕’이나 ‘역량’으로 번역되는 이탈리아어 ‘virtù’, 영어 ‘virtue’, 프랑스어 ‘vertue’는 라틴어 ‘virtus’에서 유래한 것이다. 남성을 의미하는 ‘vir’가 어원인 ‘비르투스’(virtus)는 고대 로마 공동체의 안전과 방어를 책임진 시민군인 성인 남성의 덕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용맹, 남자다움, 역량 등을 의미했다.

그리고 로마 초기에는 수많은 전쟁에서 싸움에 이겨야 하는 군인이자 남성의 용맹, 능력 등을 지시하는 말이었다가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안정되고 그리스 철학을 수용하게 되면서 도덕적·윤리적 덕성까지 포괄하게 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웅과 군인의 덕목 외에 정치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함으로써 그 자신의 논의가 일정한 지적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26) 비롤리 저, 김정화·김동규 역, 『공화주의』 (서울: 인간사랑, 2006), p. 24.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²⁷⁾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사상은 현재 민주공화국에서도 현실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으며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시민성이 정치공동체에 기여하는 긍정적 의의에 대한 정치철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먼저 국내 학술지 및 단행본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 공화주의가 소개된 시기는 1980년대 이후이다. 그리고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관련 저서 편찬 및 학술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표 1> 국내 공화주의적 시민성 관련 학술지 및 단행본 수(1990-2011년)

분류 \ 수(편)	학술지	단행본	계
법학	1	1	2
사학	3	0	3
사회학	1	0	1
윤리학 / 교육학	5	1	6
정치학	8	21	29
계	18	23	41

1990년부터 2011년까지 국회도서관에 등록된 공화주의적 시민성 관련 국내 학술지는 총 18편이었고, 단행본으로는 총 23권의 저서가 있었다. 다른 어느 학문 분야에서보다도 정치학 분야의 단행본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공통된 특징으로는 이들 연구가 대부분 공화주의 사상을 철학적·정치사상적·정치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현실정치와 관련하여 공화주의적 실천 방안

27) 박상섭, 앞의 논문, p. 4 참고.

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국외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구 학계에서 공화주의가 부상된 이유는 ‘비지배’(non-domination) -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의 자유 - 라는 개념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오랜 논쟁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켄틴 스킨너(Quentin Skinner), 1990년대 초반 리처드 벨라미(Richard Bellamy), 1990년대 후반 필립 페티트(Philip Pettit)을 통해 비지배 자유라는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반집합적(anti-collective)이면서도 반원자적(anti-atomist)인 공화주의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구의 공화주의 부활은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의 시민성을 결합하려는 오랜 학문적 논의에서 비롯되었고,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공화주의 연구와 차이점을 보인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공화주의는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를 대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처럼 이상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미 어떤 사회적 신념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이념적 경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미흡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²⁸⁾ 따라서 국내 기존 연구의 경우 구체적인 원칙 제시의 측면에서 국외에 비해 다소 미진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과제로 남아 있다 .

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공화주의에 대한 서구 학계의 다양한 이론들이 대부분 소개되거나 분석되었고, 그것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 및 언론에서 새로운 이념적 대안으로까지 자주 언급되어 대중적 관심이 커진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 공화주의의 정치적 원칙과 제도적 구상에 대한 고민이 더해진다면 공화주의가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수사학적 표현으로 단지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을 뿐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28) 세실 라보르드-존 메이너 외 저, 앞의 책, p. 13.

것이다.

또한, 공화주의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학자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공화주의 이론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에서 그것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이뤄가야 하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표 2> 국내 공화주의적 시민성 관련 석·박사학위논문 수(1990-2011년)

분류 \ 수(편)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계
교육학	9	1	10
문학	1	1	2
법학	3	3	6
사학	5	6	11
사회학	2	0	2
정치학	5	7	12
철학	2	1	3
계	27	19	46

상기 도표와 같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공화주의’, ‘republicanism’, ‘공화주의적 시민성’,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라는 키워드로 국회도서관에 등록된 공화주의 시민성 관련 석사 및 박사 논문은 총 46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교육학·사학·정치학 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각각 10편, 11편, 12편으로 논문 편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정치학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키아벨리 공화주의의 관련 정치학 석·박사학위논문은 석사학위논문 5건, 박사학위논문 7건으로 총 12건에 그치고 있다. 그 중 본 연구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학위

논문은 6편이다. 더욱이 그 중 5편은 박사학위논문²⁹⁾이고 1편만이 석사학위 논문이다.³⁰⁾ 이처럼 석사학위논문에서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따라서 석사학위논문에서도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통해 시민적 덕성의 의미를 파악한 학위논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대 현실을 개괄하고, 공화주의적 시민 덕성의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 그리고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의의를 개인주의의 한계와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필요성에서 찾고 있다.³¹⁾

한편, 『로마사 논고』에 대한 정치학 분야 학위논문으로는 마키아벨리를 당대의 최고 정치평론가로 보고 『로마사 논고』를 정치평전으로 상정하여 마키아벨리의 평론에 대한 분석을 한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정치적 공론장에서 정치평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반정치적 방법의 유혹이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정치의 가능성을 발견해 내고 정치적 방법에 호소할 것을 설득해야 한다는 니콜로 다 우차노(Niccolò da Uzzanò)의 충고와 같은 관점에서 『로마사 논고』를 분석한 것이다.³²⁾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주제로

29)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를 연구한 박사학위논문은 다음의 5건이 있다. 박영철,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론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4). 이수석, “혼합정체의 정치사상사적 연구: 고대 혼합정체론의 전개와 부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7). 안정석,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지도력: 도덕혁명, 의무, 그리고 참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 김상현, “현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심승우, “다문화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소수자의 주체성과 통치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

30) 박진영,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

31) 윤리교육적 측면에서 마키아벨리의 준법에 근거한 시민을 특징짓는 석사학위논문으로 신호재, “마키아벨리의 준법에 근거한 공화주의적 시민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석사학위논문(2008)이 있다. 이 논문은 시민의 자유 증진, 공동체의 영속, 로마인들의 준법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공화정에서 시민 덕성의 성격을 현실성을 갖춘 시민성, 건설적 갈등을 위한 시민적 에토스로 분석하고 있다. pp. 66-92, 97-127 참고.

32) 해당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영재, “마키아벨리의 정치평론: 리비우스 논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2003).

다른 국내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윤리교육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정치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논문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마사 논고』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을 통해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의미와 특징을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 원전은 이탈리아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하비 맨스필드(Harvey Mansfield)와 나산 타르코브(Nathan Tarcov)의 영어 번역본과 강정인·안선재의 한글 번역본을 1차 자료로 참고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강정인·김경희의 한글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2차 자료로서는 『로마사 논고』의 권위 있는 해석자로 꼽히는 켄틴 스키너(Quentin Skinner), 셸던 윌린(Sheldon S.Wolin), 한나 핏킨(Hanna Fenichel Pitkin), 하비 맨스필드(Harvey C. Mansfield) 등의 저서와 학술 논문을 부분적으로 참고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의 공화주의 정치철학자 김경희, 곽준혁, 곽차섭, 박명립 등의 저서와 학술논문 및 석·박사학위논문을 함께 살펴볼 것이며, 현재 한국 정치사회에서 논의되는 공화주의 관련 쟁점 및 인식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는 신문 기사도 참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모두 5장 - ‘서론’, ‘로마사 논고의 집필 배경과 정치사상적 의미’, ‘로마사 논고에 나타난 공화주의 원리’,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한국 정치적 함의’, ‘결론’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먼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밝히고, 기존 연구 동향

및 과제를 국내 학술지 및 단행본, 국외 학술지 및 단행본,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연구범위 및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로마사 논고의 집필 배경과 정치사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르네상스가 무르익어간 15-16세기 이탈리아의 정치상황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살펴보고, 2절에서는 로마 공화정을 분석하고, 이탈리아 현실정치를 비판한 『로마사 논고』의 정치사상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은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로마사 논고』에 나타난 공화주의 원리를 로마 혼합정과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로마 혼합정에 대해 고찰하고,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의미와 등장 배경과 더불어 그 특징과 의의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2절에서는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기원과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공공선과 법에 의한 통치 그리고 시민적 덕성 함양을 중시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공통된 특징을 알아보고, 그것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4절에서는 공화주의 시민성 담론의 한계점도 짚고 넘어갈 것이다.

제4장은 본 논문의 궁극적 목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부분으로 『로마사 논고』에서 찾을 수 있는 공화주의 사상이 가진 정치사상적 의의와 공화주의적 시민성이 한국 정치 사회에서 갖는 정치실천적 유용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먼저 1절에서는 한국의 정치상황적 한계점을 살펴보고, 공화주의적 대안 즉, 공화주의적 시민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다문화주의 사회에서의 공화주의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열린사회를 추구하며, 시민적 합리성을 기르고, 공화주의적 제도 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아울러 3절에서는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공화주의적 시민성 함양 교육에 대한 강조를 통해 공화주의 시민성의 정치실천적 차원의 의미에 대해 음미해보고자 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먼저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기원 및 정치실천적 함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요약 및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총체적인 정치사상적 접근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고, 그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며 마무리 짓고자 한다.

Ⅱ. 로마사 논고 집필 배경과

정치사상적 의미

1. 15-16세기 이탈리아 국내의 사회정치 상황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인 13세기말과 14세기 초, 이탈리아에는 중요한 초기 르네상스(proto-renaissance) 시기가 있었다.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 이래로 오랜 역사가 축적되어 온 곳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 혜택으로 이슬람 세계 및 비잔틴과의 접촉을 항상 유지하여, 이들과 서유럽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특히 11-12세기에 활발한 상업 활동과 십자군운동의 참여를 통해 도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12세기에는 중북부의 많은 도시가 자치 도시로 조직되었다. 이들 자치도시들은 주위의 농촌지대도 지배하여 도시국가의 형태를 취하였다.

한편 기존 봉건귀족층과 토지소유자계층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경제 활동과 정치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13세기 후반에는 사회계층의 변동이 심하여 상인의 현실적인 감각이 사회의 모든 면에 침투함으로써 이탈리아 특유의 시민문화를 형성하였다.³³⁾ 그러나 불행히도 1348년 흑사병의 창궐과 그에 뒤이은 여러 나라에서의 내란으로 인문주의와 자연주의에 대해 증가해가던 관심이 침체되었다. 르네상스 정신이 다시금 그 면모를 드러내게 되는 것은 15세기에 이르러서였다.³⁴⁾

3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25518>) 참고.

34)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저·지봉도 역,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야기』 (서울: 동서문화사, 2011), pp. 544-547.

중세 말기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신성 로마 제국은 정신적·물질적으로 통일되고 안정된 기반을 제공하지 못했고, 도시국가·국민 국가적 성격의 군주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아울러 민족 언어가 발전했으며, 낡은 봉건 구조가 붕괴되는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1490년대 초반에서 로마가 제국군대에 의해 약탈당한 1527년까지 약 37년 동안 유럽 문명의 꽃이라 불리는 전성기 르네상스(High Renaissance) 시기가 지속되었다.

르네상스란 용어는 본래 프랑스어로 ‘부활’, ‘재생’을 의미하고 ‘학문 또는 예술의 부흥’, ‘문화 부흥’ 등으로 번역된다. 이 시기에는 고전 학문과 그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또한 신대륙의 발견과 탐험, 지동설이 천동설을 대체하는 변화, 봉건제의 몰락, 상업의 성장, 종이·인쇄술·항해술·화약과 같은 혁신적인 신기술의 발명 및 응용이 이뤄졌다. 당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에게 르네상스는 장기간의 문화적 쇠퇴와 정체의 시기가 끝나고 고전 학문과 지식이 부활되는 시기로 여겨졌다.

르네상스 정신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지만 처음에는 인문주의라고 불린 지적 운동형태로 나타났다. 인문주의는 중세의 지적 활동을 주도하면서 스콜라 철학을 발전시킨 철학자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세속 문필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인문주의가 제일 먼저 시작되고 열매를 맺은 곳은 이탈리아에서였으며, 그 선구자는 단테 · 페트라르카 같은 사람이고, 주요 주창자로는 지아노초 마네티, 레오나르도 부르니, 마르실리오 피치노, 피코 델라 미란돌라, 로렌초 발라, 콜루치오 살루타티 등이 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인문주의 운동을 크게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방의 다수 학자들이 중요한 서적과 필사본, 그리고 그리스의 학문적 전통을 지니고 이탈리아로 피신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문주의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모든 다양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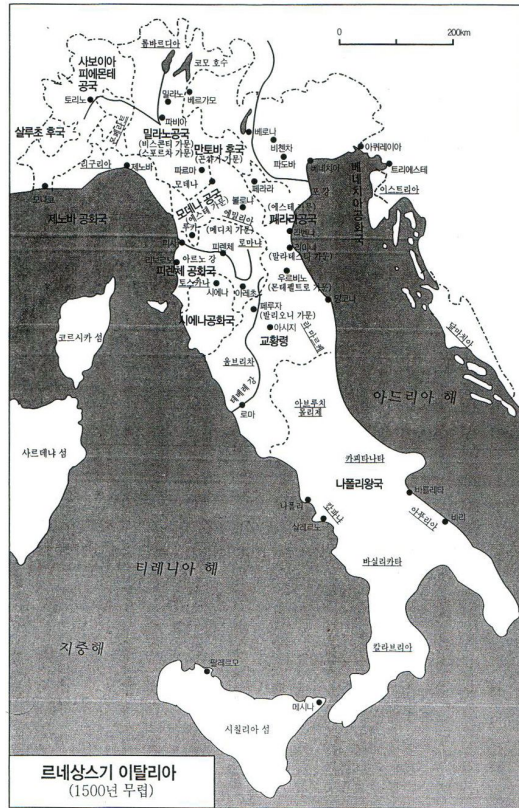
과 작품에서 인간의 본성을 그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철학·신학의 학파와 그 체계에 나타나는 진리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혼합주의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다.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의 활동에서 가장 고귀한 형태로 인식되던 속죄의 생활이라는 중세의 이상 대신 창조를 위한 투쟁과 자연의 정복에 대한 시도를 소중히 여겼다.

넷째, 인문주의는 상실된 인간 정신과 지혜의 부활을 고대했다. 인간정신과 지혜의 재생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문주의자들은 새로운 정신과 지식에 대한 전망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학문을 발달시키는 데 공헌했다. 인문주의는 전통적 종교 교리가 강요한 정신의 억압상태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력을 자극했으며, 또한 인간의 사고와 창의력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인문주의의 정신과 그것이 일으킨 르네상스는 인쇄술의 발명에 힘입은 바 크다. 인쇄술의 발명이 문자해독 계층을 증가시키고 고전 저작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는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에 걸쳐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를 선구적 지도자로 하여 프랑스·독일·영국 등 북유럽 지역에 전파되었다. 그리하여 교회로부터 독립되어 새롭게 인간 중심의 인간관·자연관을 추구함으로써 근대 유럽 문화를 태동시키는 기반이 되었다.³⁵⁾ 이처럼 르네상스를 ‘시대’로서 사고하는 것은 르네상스사(史) 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명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1860)를 집필한 야코프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의 영향이 크다.

35) 최민자, 『생태정치학: 근대의 초극을 위한 생태정치학적 대응』(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7), pp. 133-134.

<지도 1> 르네상스기(1500년 무렵) 이탈리아 지도³⁶⁾



<지도 1>에서 보이는 베네치아 공화국과 피렌체 공화국은 당시 이탈리아의 여러 발전된 도시국가들 중 유일하게 독립권을 유지한 곳으로 인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피렌체 공화국은 끊임없이 동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치아 공화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현대 역사가들이 세계 최초의 근대 국가라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번창했었다. 스위스의 문화사가 야코프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는 피렌체를 ‘예술품으로서의 국가’로 보고 ‘이탈리아인이 일찍부터 근대적 인간으로 성장한 가장 큰 이유’라 설명한 바 있다.³⁷⁾

36)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저, 앞의 책, p. 629.

최고의 정치의식과 풍부한 정치적 발전형식이 결합되어 있던 피렌체에서는 군주의 가족만 하는 일을 국민 전체가 했다. 이러한 정신은 준엄한 이성과 예술적 창조력으로 정치 및 사회를 끊임없이 변화시켰다. 그리하여 피렌체는 정치적 학설과 이론을 실험·비교하는 발상지가 되었으며, 베네치아와 더불어 통계학의 고향이 되었고, 세계 모든 나라보다 앞선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이는 마키아벨리의 업적에서와 같이 고대 로마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돌아보고 그 대표적인 역사가들에 대한 연구와 피렌체의 생활 및 정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집필했던 훌륭한 역사가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술적 통계에서 훌륭한 본보기를 세상에 남긴 역사가들로는 조반니 빌라니(Giovanni Villani)를 비롯한 디노 콤파니(Dino Compagni), 베네데토 바르키(Benedetto Varchi) 등이 있다.

피렌체는 마치 변화하는 세계 및 그 안의 여러 계급과 개개인의 관계를 반영하는 투명한 거울과 같았다. 피렌체 사람들은 정신적 완전함과 사건의 근본 원인을 다방면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점에서 다른 어느 나라 시민들보다도 훨씬 뛰어났다. 따라서 피렌체 시민들은 정신적 자유와 객관적 자세에 눈을 떴고, 이는 피렌체의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당시 피렌체사를 기록한 저서들은 공통적으로 귀족정치, 전제정치, 중산계급과 무산계급의 투쟁, 완전한 민주정치, 유명무실한 민주정치, 문벌정치, 사보나롤라를 포함한 신권정치 그리고 메디치 가문의 전제군주정치의 발판이 된 혼합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훌륭하게 기술하고 있다.

37) 위의 책, p. 558 참고.

1) 국내정치 상황

① 정치적 분열과 위기

15세기 후반, 통일된 중앙집권화를 이뤄가던 프랑스, 에스파냐, 영국 등과 달리 이탈리아는 대내적으로는 소국들 간의 정치적 분열에,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다. 당시 이탈리아에는 교회, 나폴리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밀라노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의 5개 도시가 오래도록 균형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도시가 자신들의 세력 강화 또는 방어를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기에 따라 에스파냐군, 프랑스군, 스위스와 독일의 보병부대 등이 빈번하게 침공하였고, 잔인한 살육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이탈리아가 정치적으로 분열된 끔찍한 정치적 상황 하에 있었다는 것은 단테(Dante)의 『신곡(The Divine Comedy)』 중 ‘지옥편’(inferno)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³⁸⁾

마키아벨리를 비롯한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이탈리아가 통일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외세 개입을 자주 요청했던 주된 원인으로 교회를 들고 있다. 교회는 이탈리아를 장악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세력이 장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탈리아 내에 강력한 세력이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빈번히 외세의 개입을 호소하는 패턴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결국 밀라노에서의 권력투쟁으로 침입한 프랑스 군대는 나폴리와 밀라노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체에 위협을 초래하였다. 프랑스의 군사력은 이탈리아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막강한 것이었고, 전쟁의 결과 또한 마키아벨리가 “부패한 도시에서 자유로운 정부를 수립 및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절망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³⁹⁾

38) D. F. M. Strauss, “The Transition from Greco-Roman and Medieval to Modern Political Theories,” *Politikon*, Vol. 34, No. 1, 2007, p. 60.

39) 마키아벨리의 언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I believe it is not beyond the purpose of nor

1454년 ‘로디평화조약’(Peace of Lodi)과 1455년 ‘이탈리아동맹’(Italian League)으로 세력균형을 이룬 이탈리아 반도는 약 20여 년 동안 대규모의 외침을 받지 않았으며, 이탈리아 각국 사이의 전쟁도 이른바 ‘컵 속의 태풍’⁴⁰⁾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적 전쟁이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다수의 왕실근위병과 가스코니(Gascony) 출신 병사들로 편성된 프랑스 최정예병사 6천여 명의 군대, 이탈리아인이 지금까지 구경한 적도 없는 공성에 탁월한 위력을 발휘한 여러 문의 포를 동원했다.

사실 근대적 기준으로 볼 경우 스위스 출신 용병을 주력부대로 편성한 프랑스군의 위력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탈리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군세였다. 이탈리아 각국은 소규모의 역내 전쟁밖에 경험하지 못했고, 더욱이 자국민 무장에 대한 지배층의 공포 때문에 시민군의 양성과 군비확장을 소홀히 해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전쟁을 용병에 의한 대리전 형식으로 치렀었다.

결국 시민군 중심의 군사체제가 발달되지 않았던 이탈리아는 밀라노·투스카나의 도시들 그리고 로마시를 함락당하고, 1495년 나폴리왕국이 정복될 때까지 프랑스군에 굴복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일 이외에는 거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⁴¹⁾

does it fail to conform to the discourse written above to consider whether in a corrupt city one can maintain a free state, if there is on, or, if it has been there, whether one can order it. On this thing I say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either the one or the other. ... I shall presuppose a very corrupt city, by which I shall the more increase such a difficulty, for neither laws nor orders can be found that are enough to check a universal corruption.” *Discourses on Livy*, I-18-1, p. 49.; 『로마사 논고』, pp. 141-142.

40) 진원숙, 『마키아벨리와 국가 이성』 (서울: 신서원, 1996), p. 29에서 재인용; 高階秀彌, 『ルネサンス夜話』 (平凡社, 1979), p. 74.

41) 위의 책, pp. 25-33 참고.

② 상업자본주의 경제의 성장

이탈리아는 동지중해 지역과 서유럽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11세기 이래 무역교류의 중계지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알프스 이북보다 상업경제가 더 발달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베네치아와 제노아 등은 십자군운동 이래 흑해와 소아시아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활발한 교역활동을 전개해왔다. 이탈리아의 상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도양으로부터 페르시아만이나 홍해를 거쳐 들어오는 동방물산을 입수했다. 그들은 레반트지역의 면화, 사탕, 향료 등과 함께 여러 동방물산을 북유럽으로 수출하고 모직물과 같은 유럽의 물산을 이들 지역에 중계 무역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에서는 1300년 이전에 이미 근대적 상업기술이 도입되었고 화폐경제가 발흥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1세기 반 동안 이탈리아는 초기 상업자본주의의 고전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같은 경제적 발전은 몇 가지의 변화를 수반했는데, 무엇보다도 이탈리아와 서구 사이에 새로운 교역로가 열리게 했다. 프랑스의 필립 4세(Philip the Fair)의 재정 정책 등으로 인해 상파뉴 정기시(fairs)가 쇠퇴하고 새로운 해상교역로가 개척된 것이다.

따라서 이탈리아 상인들은 유럽인과 물건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이탈리아인들은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을 발전시켜 갔고, 잉글랜드 양모, 플란더스의 미완성 의류 등을 직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의 상업과 기타의 산업은 1340년대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미증유의 발전을 구가했다. 1338년경의 피렌체는 매년 1만벌 이상의 의류를 수입했으나 피렌체 안에서도 8만벌 정도의 옷이 생산되었다.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들도 14세기에 이르면서 질 좋은 의류를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⁴²⁾

42) 위의 책, pp. 45-52.

대외교역은 위험이 따르는 만큼 큰 이익도 보장해 주었다. 그리하여 1300년 전후의 경제적 발전은 과학기술 및 기업 경영술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상업과 공업의 발전 및 금융업의 발전은 운송과 통신의 발전을 자극했고 운송과 통신의 발전은 다시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더불어 도시와 농촌 사이의 정치적 분할이 노동의 분할, 혹은 경제적 분할로 바뀌었다. 농촌이 식품과 원료의 제공지가 되고 도시가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로 변화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중세 말에는 이러한 급속한 경제 발전을 계기로 몇몇 도시들이 비약적으로 번창하게 되었고, 15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경제 계급으로 등장한 상업적 모험가들이 봉건적 경제에 의해 부과된 여러 제한들을 타파해가면서 르네상스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주요한 행위동기였던 자리(self-interest, 自利)는 인간의 보편적인 행위동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르네상스의 개인주의적 정신의 경제적 표현이었다.

르네상스의 사회적 배경이 된 경제적 발전의 주도세력이 그 당시의 상인계급이었으므로 르네상스 시대의 전형적인 인간상은 곧 당시의 상인계급의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시의 상인들은 실리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미지의 세계로의 모험을 서슴지 않는 대담한 정신의 소유자들이었다. 또한 모든 거래에 있어서 철저히 타산적이었고 내세의 축복보다는 현세의 실리를 따지면서 오늘을 즐기고 살아가는 현실주의자들이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상인들의 영리심과 타산심은 정당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었으며, 아울러 이성에 대한 개념이 상항 판단력과 타산능력의 뜻을 강하게 풍기는 것으로 변화되었다.⁴³⁾

43) 김비환, “마키아벨리 정치사상의 르네상스적 성격,” 『수선논집』 제10호(성균관대학교, 1986), pp. 229-231.

③ 르네상스 문화 및 예술

먼저 초기 르네상스 시기에는 성 프란키스쿠스(Franciscus)에게 영향을 받아 작품 활동을 하였고, 현대에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는 화가와 시인들이 있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이탈리아 화가로는 지오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 1267년경-1337), 시인으로는 단테 알리기에리(Durante degli Alighieri, 1265-1321)가 있으며, 라틴어 문학가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 역시 초기 르네상스의 작가이다.

이후 이탈리아의 예술은 한 세기 가량 흑사병과 내란으로 인한 침체기를 거쳤다. 하지만, 15세기에 이르러서는 르네상스 3대 거장 등의 위대한 미술가들이 활약하며 드디어 전성기 르네상스시기를 구가한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는 바로 르네상스인 그 자체였으며, 어떠한 연구 분야도 낯설게 여기지 않고 깊게 탐구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 1475-1564)는 인체의 감동적인 표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창조적인 힘을 마음껏 발산했다. 라파엘로 산치오(Raffaello Sanzio, 1483-1520)는 조화와 미, 잔잔함 등의 고전적 정신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당대에 미술은 학문의 한 분과로 간주되었을 정도였다. 우주 속 인간의 위상에 대한 통찰 및 신과 그 피조물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재능으로 인정받아 나름의 타당한 가치를 지닌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미술은 가시적인 세계에 대한 관찰에 바탕을 두고서 당시에 발달한 균형과 조화, 원근법 등의 수학적 원칙에 따라 행해졌다. 마사초(Masaccio, 1401.12.21-1428), 피에트로 로렌체티(Pietro Lorenzetti, 1280?-1348) 형제,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1387-1455),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5-1510), 피에트로 페루지노(Pietro Perugino, 1450-1523),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Piero della

Francesca, 1416-1492), 라파엘로 산치오(Raffaello Sanzio, 1483-1520), 티치아노 베첼리오(Tiziano Vecellio, 1488-1576) 등과 같은 화가들과 피사노(Niccolo Pisano, 1225-1278), 도나텔로(Donatello, 1386-1466),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Andrea del Verrocchio, 1436-1488), 로렌초 기베르티(Lorenzo Ghiberti, 1378-1455) 등과 같은 조각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1404-1472), 필리포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 1377-1446), 안드레아 팔라디오(Andrea Palladio, 1508-1580), 미켈로초 디바르톨롬메오(Michelozzo di Bartolommeo, 1396-1472), 필라레테(Filarete, 1400-1469) 등과 같은 건축가의 작품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15세기 초 무렵 이탈리아인들은 고대 유적이 많은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로마에서 건축을 부흥시키려 했다. 그러나 로마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대신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중심이 되었다.

아울러 중세건축은 고딕양식이 특징이었던 반면, 르네상스 건축은 선과 면을 바탕으로 하여 기둥, 반원형 아치, 원통형 볼트, 돔 양식을 발달시켰다. 1401년 피렌체 옛 예배당 정문 설계경기에서 낙선한 금속세공사 브루넬레스키는 르네상스 건축을 열었다. 1418년 중세 건축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피렌체 대성당 돔 설계경기에 당선된 그는 고딕식 내용의 구조이지만 드럼을 도입한 르네상스식 돔을 처음 만들었다.

피렌체의 독특한 상황은 미술의 발전에 안성맞춤이었다. 오르 산 미켈레로 알려진, 곡물거래소에 벽감 장식으로 기베르티와 도나텔로가 제작한 도시의 수호성인 조각상과 고대에 세워진 피렌체 대성당에 브루넬레스키가 건축한 거대한 돔은 피렌체 시민들의 자랑이 되었다. 궁전과 교회, 수도원 등을 건축하고 장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부유한 상인 가문들이 지불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문이 바로 메디치가였다.

메디치가는 유럽의 모든 주요도시를 상대로 무역을 했다. 북구 르네상스 미술의 최대 걸작 가운데 하나인 휘고 반 데르 구스(Hugo van der Goes, 1440-1482)의 작품 ‘포르티나리 제단화’는 메디치가의 대리인 톰마소 포르티나리(Tommaso Portinari, 1428-1501)의 의뢰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이 그림은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템페라 화법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매끄러운 표면에다 보석과 같은 색감을 내는 반투명 유화물감으로 채색된 작품이다.

초기 북구 르네상스 화가들은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과학적인 원근구도와 해부학에 관한 연구보다는 물체와 그 물체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재생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이탈리아 중부의 화가들은 1476년 ‘포르티나리 제단화’가 피렌체에 소개된 직후 유화 물감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통일된 역사의 한 기간으로서의 르네상스 시기는 1527년 로마의 몰락으로 끝났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고전 인문주의 사이의 팽팽한 긴장은 16세기 후반 마니에리스모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정신으로 생기를 얻은 위대한 예술작품들은 이탈리아 북부와 북유럽에서 계속 탄생했다.⁴⁴⁾

44)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저, 앞의 책, pp. 544-551.

2) 국외 정치상황 : 절대 군주제의 확립

15세기 후반은 중세적 질서의 관념이 와해되는 시기로 국가들이 개별민족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운명이 좌우될 수 있음을 각성해 가던 시기이다. 이어서 16세기에는 신대륙이 발견되고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무역과 상품유통이 지방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군주가 도맡게 되었다.

아울러 성직자와 같은 신과의 매개 등을 부정하고, 인간과 신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군주 권력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에 따라 권력분산체제인 봉건제도가 무너졌다. 이로 인해 서유럽 각국에서는 절대 군주정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관료제 및 상비군이, 이론적으로는 왕권신수설이 절대 군주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⁴⁵⁾

왕권신수설은 왕은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의회 등과 같은 지상의 권력이 왕의 행동을 견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설로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걸쳐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 각국에서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예컨대 영국에서의 왕권신수설 선두 제창자는 제임스 1세라고 볼 수 있고, 프랑스에서는 왕권신수설이 국왕인 태양왕 루이 14세로 대표되는 절대 왕정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었다.

중세 말부터 국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과 국가 통일을 이루기 시작한 서유럽 각국은 위와 같이 16~18세기에 절대주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 시대는 낡은 봉건 사회에서 새로운 시민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국왕은 신분제 의회와 봉건 귀족, 시민 계급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절대 권력을 행사 하

45) 강정인,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로마사 논고를 중심으로,” 『계간사상』 여름호(2001), pp. 220-225.

였다.

한편, 국왕은 관료제와 상비군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상주의 정책을 폈다. 이는 보호 관세로 수입을 억제하고, 식민지를 확보하여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려는 정책으로써 국가가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간섭하였다.

15세기 후반 에스파냐는 아라공과 카스티야의 통합으로 유럽에서 제일 먼저 절대 왕정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 신대륙의 식민지와 네덜란드 등을 영유하였고, 1571년에는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여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 기반이 취약했고, 가톨릭 중심의 강압적 종교정책으로 경제의 중심지인 네덜란드가 독립했을 뿐만 아니라 1588년 무적함대가 영국에게 패함으로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영국은 장미전쟁 이후 집권한 헨리 7세의 튜더 왕조에 의해 왕권 강화가 이루어졌다. 장미전쟁은 각각 붉은 장미와 흰 장미를 가문의 문장으로 하는 랭커스트 가문과 요크 가문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이다. 이는 귀족 간의 왕권 쟁탈전으로 결국 랭커스터가가 승리하고, 요크가의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임으로써 헨리 7세가 왕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귀족들이 사망했고, 결과적으로 귀족들의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었다. 또 다른 왕권견제 세력인 교회는 부패해 있었다. 이에 절대 왕정의 확립이 무리 없이 이루어졌다. 연이은 헨리 8세 또한 봉건주의제의 귀족 대표적 왕에서 전제군주제의 절대적 왕으로 변했던 대표적 예이다. 그는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해 스스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여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에서는 백년전쟁이 중세 귀족세력의 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틈을 타서 당시 유럽에서 가장 통일되고 중앙집권화된 절대군주정이 출현하였다. 16세기 말 부르봉 왕조를 세우고 위그노 전쟁을 종식시킨 앙리 4

세가 절대 왕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어 루이 13세 시대에는 재상 리슐리외가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여 절대주의를 확립하였고,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에 개입해 신교도를 지원함으로써 프랑스의 이익을 증가시켰다.

다음으로 루이 14세 시기에는 재상 마자랭이 리슐리외의 정책을 계승하여 프롱드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 하였다. 마자랭 사후(1661)에 친정을 시작한 루이 14세는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며 중앙기구를 정비하고 강력한 상비군을 양성하였다. 한편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증대와 식민지 확장에 주력하는 등 중상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었다. 또한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는 등 문화를 꽃피게 하여 ‘태양왕’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짐이 곧 국가’라고 한 그의 말에서 강력한 왕의 권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마키아벨리의 정치철학

1) 이중적 인간관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에 관한 견해,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와 목표는 무엇인지에 관한 견해는 모든 정치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룬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정치철학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키아벨리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기본 전제는 성악설이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인간은 애초에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이고 염치를 모르고 신변의 위협을 피하려고 하며 물욕에 눈이 어둡다.” 또한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은혜의 인연에 얽힌 애정과 같은 것은 자기의 이해에 반하는 기회가 생기면 당장에라도 끊어 버린다.”

더군다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⁴⁶⁾ 마음속으로 언제나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 언제나 실망한다.⁴⁷⁾

결국 마키아벨리에게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무한히 확장하는 욕구의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의 무한성과 충족수단의 유한성으로부터 결국 공격적인 경쟁과 분배 투쟁을 수반하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⁴⁸⁾ 이처럼 마키아벨리는 부정적 인간관으로부터 자신의 정치사상을 도출해내고 있다.

한편 마키아벨리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인간본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마키아벨리의 인간관에 따르면

46) 그 이유는 인간이 모든 것을 바라는 힘과 욕망을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았으나 운명으로부터는 욕망을 성취할 힘을 적게만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47) *Discourses on Livy*, p. 125.; 『로마사 논고』, pp. 264-265.

48) 이진우, 『마키아벨리의 부정적 인간관과 정치기술』 (서울: 민음사, 1993), p. 238 참고.

인간은 주어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⁴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표출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강력한 국가에 의해 질서가 안정된 상황에서의 인간은 선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고대 로마를 자신의 이상으로 삼으면서 지배자가 존경을 받고 명예의 영광을 차지하며, 민중의 삶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는 사회를 꿈꾼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일정한 통제장치만 마련된다면 인간은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는 물론 베푼 은혜에 의해서도 유대가 강화되는 존재이다.⁵⁰⁾

청빈이 인간을 근면하게 만들고, 법은 인간을 선하게 만든다. 운 좋은 환경이 선을 가능하게 한다면, 법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부족하다면 법은 즉각 필요하다.⁵¹⁾ 그들(군주와 인민)의 행동에서의 차이는 본성에서의 차이 때문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은 동일하며, 만약 선에 대한 어떠한 차이가 있다면, 인민이 더 선하다) 그들이 개별적으로 지켜야하는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다.⁵²⁾

그렇다면, 마키아벨리 인간관의 실천적 결론은 인간의 보편적 욕망과 본성이 공공선을 지향하도록 ‘법과 제도의 확립’이라는 조건을 마련하고, 이 속에서 인간의 제2의 본성, 즉 공동체 전체의 복지와 선의 유지를 위한 공동적 삶

49) 위의 책, p. 240.

50) 마키아벨리 저·강정인 역, 『군주론』 (서울: 까치, 1994), p. 77. 이하 『군주론』으로 약칭.

51) *Discourse on Livy*, pp. 15-16.; 『로마사 논고』 pp. 85-86.

52) *Discourse on Livy*, p. 117.; 『로마사 논고』 p. 250.

의 영위라는 후천적 본성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⁵³⁾ 하여 마키아벨리는 확고부동한 민족국가를 건설함으로서 바람직한 제2의 인간 본성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현실주의적 정치사상도 이러한 목적 하에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방법론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공리주의적 종교관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자유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나 자신들의 사악한 정신에 따라 행동하려 하고, 부나 명예를 차지하기 위한 무절제한 욕망을 가지며, 커다란 야망과 탐욕을 가진 존재라고 언급한다.⁵⁴⁾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인민의 지나친 욕망과 귀족들의 지나친 지배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⁵⁵⁾ 특히 그는 야망에 가득 찬 인간을 불신한다.

야망이란 인간의 가슴속에 있는 매우 강력한 충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도 야망이 충족되는 경우란 결코 없는 법이다. 그 원인은 자연이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갈구하도록 만들어놓고도, 모든 것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갈망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능력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것에 불만을 느끼고, 그로부터 아주 작은 만족을 얻는 데 그친다.⁵⁶⁾

53) 정승현, “정치질서를 통한 인간본성의 馴致: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현대사회』 제28호(1987), p. 249.

54) *Discourses on Livy*, p. 15.; 『로마사 논고』, p. 84-85.

55) *Discourses on Livy*, p. 88.; 『로마사 논고』, p. 204.

56) *Discourses on Livy*, p. 78.; 『로마사 논고』, p. 189.

이러한 인간의 특성은 귀족과 인민 사이에 공통된 경향으로 안전, 명예, 지배, 그리고 부와 같은 욕망을 포함한다. 이는 선하기보다는 악하기 쉬워 인간은 본성상 덕스러울 수 없다. 인간의 이러한 경향은 개인이나 시민전체의 비르투를 약화시키는 결정적 이유이며,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쟁의 이유가 된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부패하기 쉬운 인간을 다시 선하게 만들어 공화정 유지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힘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근거한 강박, 즉 네체시타(necessita)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논고』 제1권 1장에서 “선택의 역할이 작은 경우에 보다 커다란 덕이 발현되게 마련이다. ... 척박한 땅을 선택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사람들을 근면하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며, 나아가 어려운 처지로 인해 서로 다툴 소지가 적기 때문에 더욱 단결하게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⁵⁷⁾

이러한 선택은 남을 지배하지 않고 자족만을 원할 때 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변으로의 확장을 원하거나 또는 주변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한다면 비옥한 땅의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람들을 착하고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그러한 네체시타(necessita)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이를 위해 법과 종교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⁵⁸⁾ 법의 역할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로마는 로물루스, 누마 등 다른 지도자들이 제정한 법률이 부과한 많은 필연성으로 인해 토지의 비옥함,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함, 거둬들이는 승리, 제국의 광대함 등 그 어떤 요소도 수백 년 동안 그 나라를 부패시킬 수 없었을

57) *Discourses on Livy*, p. 8.; 『로마사 논고』, p. 73.

58) 박상섭, 앞의 논문, p. 19.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필연성으로 인해 넘치는 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⁵⁹⁾

사람들은 필연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는 한 결코 좋은 일을 하려 하지 않으며, 많은 선택이 있고 과도한 자유가 허용되면 만사가 순식간에 혼란과 무질서에 빠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굶주림과 빈곤은 사람들을 근면하게 만들고, 법률은 사람들을 선량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다.⁶⁰⁾

한편, 가톨릭교회의 부패는 당대의 인간의 이기심과 사악함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가톨릭교회는 정신적·도덕적 교화보다는 중부 이탈리아의 주권을 보유하겠다는 현실적이며 보다 세속적인 야심으로 충만해 있었다. 또한 교황의 실정으로 이탈리아에 외세가 침입하게 됨으로써 이탈리아가 피폐해지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탈리아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적 가치관과 윤리관을 배척토록 함으로써 사회의 비도덕화에 기여하였다.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에 의하면 마키아벨리는 당대에 획기적으로 자연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구분하고, 정치적 가치가 그리스도교 윤리와 다를 뿐 아니라 원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공리주의적 종교관이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사안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불신을 받게 되었다.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지배하는 법칙은 종교나 개인적 도덕을 지배하는 법칙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성공하고 싶은 정치가는 국가의 운영을 지배하는 법칙을 숙지하고 선보다 악에 더 가까운 본성을 깨닫고 목적을 위해서는 백성을 속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키아벨리의 기여는 인간에게 종교적 신화적 쇠사슬을 풀어주었다는 것이다.⁶¹⁾

59) *Discourses on Livy*, p. 9.; 『로마사 논고』, p. 75.

60) *Discourses on Livy*, p. 15.; 『로마사 논고』, p. 85.

3) 현실주의 정치사상

피렌체의 정치철학자였던 마키아벨리는 기본적으로 전성기 르네상스적 특징을 그의 모든 저서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의 저서 『피렌체사』를 보면 마키아벨리가 본인의 조국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그 발전 경로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근대인 가운데 이런 해석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피렌체 사람들이 많은 위대한 분야에서 이탈리아 및 모든 근대 유럽인의 본보기요 최초의 전형이었듯 마키아벨리 또한 그러하였다.⁶²⁾

먼저 마키아벨리의 부정적 인간관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치사상을 살펴보면 다음의 두 가지와 같다. 첫째, 군주가 한없이 선할 수만은 없으며, 때로는 부도덕한 정치기술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역사 속에서 수많은 평화조약과 협정이 신의 없는 군주들에 의해서 파기되고 무효화되어 왔다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⁶³⁾ 그리고 악한 자들만이 존재하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군주가 선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미움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⁶⁴⁾ 국가를 파멸의 길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를 건설하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악하고 또 그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항상 악한 본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고 본다.⁶⁵⁾

둘째,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공격적 본성을 제압할 수 있는 ‘외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질서와 이성인 국가라는

61) 이사야 벌린은 서양 정치사상의 역사에서 세 가지 주요 전환점을 지적했다. 첫째 전환점은 기원전 4세기 말,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뒤부터 스토아 학파가 생겨날 때까지의 짧은 기간이며, 둘째 전환점은 마키아벨로 시작된다. 그리고 셋째 전환점은 18세기 말 독일에서 일기 시작한 낭만주의이다. “생각의 전환점들,” 『아시아투데이』 (2011년 6월 22일자) 참고.

62)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앞의 책, pp. 70-99.

63) 『군주론』, pp. 121~122.

64) 『군주론』, pp. 133~134.

65) *Discourses on Livy*, p. 15.; 『로마사 논고』, p. 84.

‘외적 통제장치’를 전제하는 것이며, 좋은 정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한계를 설정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과 권력을 확립하는 정치이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부정적 본성에 근본적 의미와 실체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국가·법·권력·정치의 강제권을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마키아벨리가 서양근대정치사상의 시조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는 정치영역을 윤리·도덕·종교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해 냈다.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정치영역에는 치열한 투쟁이 있는 현실만이 존재하였다. 하여 정치현상을 종교적 가치나 윤리적 고려를 배제한 채 순수하게 권력의 획득, 유지, 팽창의 차원에서 조망하였으며, 다른 어떤 제도나 가치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국가 그 자체를 고려하였다.

고전적 정치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목적과 공공선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었다면, 마키아벨리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국가권력을 다시 확고부동한 토대 위에 정립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전의 도덕철학자나 정치철학자들이 이제껏 전적으로 가상의 공화국이나 군주정에 관해서만 논의했을 뿐, 군주가 실제로 활동해야 하는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철저히 현실에 기반한 정치사상을 전개하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나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유용한 것을 쓰고자 하기 때문에 이론이나 사변보다는 사물의 실제적인 진실에 관심을 경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 결코 존재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목격된 적이 없는 공화국이나 군주국을 상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바를 행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를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잃기 십상이다.⁶⁶⁾

66) 『군주론』, pp. 106-107.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권력국가 자체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통일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로마공화정과 같이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공화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한 마키아벨리의 주장은 『로마사 논고』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이 저서에서 좋은 정체의 조건으로 인민의 자유 보장과 법의 지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법의 지배가 자의의 지배로 변질되는 것, 즉 부패(corruption)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인간은 악하며, 자유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나 자신들의 사악한 정신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 그는 로마의 자유와 위대성이 부패한 시민이나 특별히 뛰어난 개인에 의해 위협당했던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공화정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혼합정체(mixed government)에서는 한 국가 안에 군주정·귀족정·민주정의 요소들이 함께 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하나가 권력을 독차지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지배가 가장 잘 지켜진다는 것이다.

이는 왕정(principality)은 얼마 못가서 왕의 자의적 지배로 변질되고, 귀족정(aristocracy)은 귀족의 자의적 지배로 변질되며, 민주정(democracy)은 평민의 자의적 지배로 쉽게 변질되는데, 로마는 혼합정체라는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일 내에 부국강병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폴리비우스(Polybius)의 역사관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합정에 대한 폴리비우스의 정치사상은 고대 아테네의 경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양한 종류의 정치체제를 소개한다. 그가 정치체제를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통치자의 수인데, 이는 통치자가 1인 인가, 소수인가, 다수인

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통치의 목적으로, 이것은 통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인가에 따른 구분이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의 <표 3>에서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 6가지로 정치체제를 분류하고, 군주정, 귀족정, 혼합정을 올바른 정치체제로 보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익을 염두에 두지 않는 군주정은 참주정으로,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그리고 혼합정은 민주정의 형태로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혼합정을 최상의 정부 체제로 보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사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치 분류⁶⁷⁾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공공의 이익	자기 자신의 이익
통치자의 수	1인	군주정	참주정
	소수	귀족정	과두정
	다수	혼합정 (최상)	민주정
		올바른 형태	타락한 형태

더불어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이 군주국보다 좋은 이유에 대하여 군주국에 비교하여 공화국은 자국 내에 존재하는 시민들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시대적 조건의 다양성에 스스로를 훨씬 잘 적응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주국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하며 행운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다고 역설한다.

마키아벨리는 자연주의적 경험주의적 방법을 사용했으며 실제로 일어나는

67) 테렌스 볼리처드 대거 저, 정승현 외 5인 역, 『현대 정치사상의 파노라마』(서울: 아카넷, 2011), p. 52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인간행위에 초점을 두었고, 증명을 위하여 권위를 인용하는 방법과 선험적 서색, 윤리적 훈계방식을 포기했다. 자연법 사상을 포기하고, 대신 주권의사에 의해 선언되고 물리적 강제력으로 뒷받침된 실증적 규제를 현대적 법 개념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팽창주의적 제국주의에 관한 일방적 강조는 유럽제국의 국가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로 인해 유럽정치발전의 특징인 국제적 경쟁과 갈등, 거대한 식민지 경영사업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전제적 정치이론의 형태도 한계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너무 과장되었고, 인간성에 대한 과도한 냉소, 불변의 인간성이란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경향과 이상과 가치 및 사회조건의 역할 등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한 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폭넓은 정치적 관찰과 정치사에 대한 독서로 생겨난 경험적인 사상이었으며, 정치·치국의 수완·전쟁의 기술 등에 관한 그의 사상이 이탈리아의 정치현실을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키아벨리 정치사상의 현대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현실의 권력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국가와 권력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⁶⁸⁾

68) 박준혁, “갈등, 혼합정체, 그리고 리더십: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9집 2호(2003), pp. 171-194.

3. 『로마사 논고』의 정치사상적 의미

1) 로마 공화정 분석

로마는 폴리비우스가 최고의 정체라고 극찬한 혼합정체를 이룩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어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로마의 혼합정부 형태는 처음부터 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평민들이 분리운동을 전개하여 귀족과 평민간의 신분투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호민관직이 창설되어 로마는 콘술, 원로원, 호민관으로 구성된 완벽한 정부 형태에 도달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로마는 귀족과 평민의 신분투쟁을 통해 여러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그 투쟁이 내전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잘 훈련된 시민군과 군대의 용맹함으로 정복전쟁을 훌륭히 수행하여 위대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로마가 최고의 정부형태인 혼합정체를 정비하게 된 것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정된 모든 법률은, 최초의 입법가나 여러 왕들이 만든 법률 덕분이 아니라 귀족과 평민의 신분투쟁의 결과이며, 그들의 대립으로 인해 로마가 위대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로마가 귀족과 평민의 대립 없이 계속 평온만을 유지했다라도 그들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만일 로마가 계속 평온만을 유지했다면,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과 팽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생성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로마는 훨씬 일찍 쇠망을 맞았을 것이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로마처럼 팽창하기를 원한다면, 국가를 로마처럼 조직하여야 하고, 귀족과 평민 사이에 발생한 신분투쟁들을 감당해야 하며, 그와 같은 위대함을 성취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유는 위대성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자유는 국가의 권력이 균형을 이

루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대성은 권력의 균형을 파괴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위대성은 자유를 짓밟고 결국엔 파멸의 길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자유를 위해서는 로마와 같이 정치제도와 법률을 정비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국가를 팽창시키기 위해서는 귀족과 평민간의 신분투쟁과 같은 소동이 필요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 공화국에서는 평민과 귀족이 정체에서 동등한 권위를 갖고 정치적 공론장에서 서로 대립·경쟁하였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호민관 제도의 성립이었다. 이로서 로마의 정체는 비로소 혼합정체의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원로원과 호민관이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법의 지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한 법의 지배 아래 로마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로마 공화국의 위대한 업적은 평민과 귀족이 정치적 공론장에서 공정한 법에 따라 벌인 경쟁, 즉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며 로마 공화국의 쇠퇴는 공론장에서 평민과 귀족의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변질 또는 왜곡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로마사 논고』 제1권 제40장에서 마키아벨리는 자유에 대한 인민의 지나친 욕심과 귀족들의 지나친 지배욕을 보여준 아피우스의 사례를 들어 두 계층이 저지른 과오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마가 위대해 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마키아벨리가 설명하는 내용은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유를 위해서는 공공선과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신분투쟁이 내전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자유를 빼앗으려는 적의 침략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고, 위대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력과 책략을 사용하여 정복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 스트라우스(Leo Strauss)는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로마적 위대성의 실체는 개인들의 자유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소영의 석사학위논문에서는 마키아벨리가 조언하는 자유와 위대성을 획득하는 방법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다고 결론지으며, 로마의 성공요인으로 중도적 방법과 극단적 방법의 적용을 통한 자유의 유지와 위대성의 획득을 들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자유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과 같은 중도적 방법을 적용하여 국가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고, 위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책략과 기만책을 사용한 무자비한 정복전쟁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적용하여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보여준다. 로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자유와 위대성을 평형저울의 양측에 올려놓고, 어느 것 하나가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도적 방법과 극단적 방법들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형저울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시간과 방법을 사용하였다. 중도적 방법들을 적용하여 자유를 획득하나, 부패로 인해 자유의 저울이 가벼워져 균형을 잃게 된다면, 극단적 방법들을 가차 없이 사용하여 자유를 회복하고 위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즉 마키아벨리는 로마는 이러한 자유와 위대성을 양측으로 하여 위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탈리아 현실정치 비판

『로마사 논고』는 총 3권(14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공동체와 관련된 사건들을 크게 ‘공동의 지혜에 의한 것과 개인의 지혜에 의한 것’, 그리고 ‘정치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과 정치공동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였다. 이 두 개의 기준을 조합하여 제1권에서는 정치공동체 내부에서 공동의 지혜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을, 제2권에서는 정치공동체 외부에서 공동의 지혜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을, 제3권에서는 정치공동체 내부와 외부에서 개인의 지혜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그는 이 구분을 엄밀하게 따르고 있지는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 제1권 제17장, 18장 등에서 인민의 정신이 부패한 곳에서는 자유로운 공화국이 성립되고 유지되기 매우 어렵다고 보았다. 그는 ‘부패’ 개념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개별적인 언급들을 통해 추론해 볼 때, 자유에 대한 의지의 상실 혹은 약화, 또는 자유보다는 다른 가치 - 예컨대 부(富)나 쾌락 등 - 를 우선시하기에 후자가 충족되면 전자가 억압되더라도 만족하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부패한 인민은 자유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예속 상태를 받아들인다. 이들은 법을 어기는 특권층에 대해서도 분개할 줄 모르며 외국의 내정 간섭이나 지배에 대해서도 저항할 줄 모른다. 또한 공공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사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법을 어기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은 군주국의 예속적인 신민(subjects, 臣民)이 될 수는 있어도 공화국의 자율적 시민(citizens)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부패가 나폴리 왕국을 비롯해 로마 지방, 로마냐, 그리고 롬바르디아 등 이탈리아에 만연하다고 보았는데, 특히 밀라노 공국과 나폴

리 왕국은 전체적으로 부패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비해 피렌체, 시에나, 루카 공화국이 위치한 토스카나와 베네치아 공화국은 인민의 부패 정도가 덜하다고 보았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이탈리아 내부에서의 차이는 특권 계급과 영주의 존재 여부, 즉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이들 특권 계급과 영주들이 자유로운 시민의 정치에 정면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자유로운 공화국이 성립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⁶⁹⁾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주변국인 프랑스와 스페인 왕국의 부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독일 지방의 도시 공화국들이 부패하지 않고 선한 마음과 종교심을 유지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격찬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로마사 논고』는 이탈리아 현실정치에 대한 정치평론서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아울러 마키아벨리는 정치 사상가로서 한 명의 공화주의자이기 이전에 정치를 활성화시키고 정치가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대의 정치 현실에 관해 비평한 한 명의 정치 평론가임을 알 수 있다.⁷⁰⁾

69) 로베르토 리돌피 저·곽차섭 역, 『마키아벨리 평전』 (서울: 아카넷, 2000), pp. 55-65.

70) 이영재, 앞의 논문, pp. 79-85.

Ⅲ. 『로마사 논고』에 나타난

공화주의 원리

1. 로마 공화정의 혼합정체성

『로마사 논고』는 마키아벨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이득을 가져온다고 믿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로마사에 대해 비평한 저서이다.⁷¹⁾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의 제1권 첫 장에서 도시 일반의 기원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모세(Moses)와 아이네아스(Aeneas)의 경우를 들어 자유로운 도시의 건설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저술을 시작한다.⁷²⁾ 그는 로마가 이방인들에 의해 건설된 도시라고 보는 견해와, 그곳의 토착인들에 의해 건설된 도시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두 견해 모두 로마가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도시로 출발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 제1권 1장, 11장, 19장 등에서 무질서 상태에서 새로운 질서와 제도를 세운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Romulus)와 누마(Numa)에 대해 지속적으로 존경을 표하고 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제정한 법률이 부과한 많은 필연성으로 인해 토지의 비옥함,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함, 거듭되는 승리, 제국의 광대함 등 그 어떤 요소도 수백 년 동안 그 나라를 부패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필연성으로 인해 넘치는

71) *Discourses on Livy*, p. 5.; 『로마사 논고』, p. 67.

72) *Discourses on Livy*, p. 8.; 『로마사 논고』, p. 72.

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이 점에서 어떤 다른 도시나 공화국도 로마를 능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⁷³⁾ 고대 로마에서는 건국이 권위를 갖고 사회통합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동했다.⁷⁴⁾

특히 마키아벨리는 건국, 즉 새롭게 공화국을 창건하거나 구제도를 혁파하여 공화국을 쇄신하는 일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⁷⁵⁾ 따라서 로마 건국자 로물루스가 자신의 동생 레무스(Remus)와 협력자 티투스 타티우스(Titus Tatius)를 살해한 행위는 비난이 아니라 용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⁷⁶⁾

비록 그 행위가 비난받을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용서받은 만한 것이라면 여하튼 적절한 것이다. 그러므로 로물루스의 경우처럼 그 결과가 좋다면, 그 결과는 항상 그를 용서할 것이다. 왜냐하면 복원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자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자가 비난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⁷⁷⁾

마키아벨리의 분석에 따르면 레물루스가 한 일은 그 자신의 야심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 행해진 일이었다. 왜냐하면 로물루스는 건국 후 즉각적으로 원로원을 창설하여 원로원과의 협의 하에 모든 것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전시군대통수권과 원로원 소집권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⁷⁸⁾

전권(全權)을 장악하여 공동선에 부합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던 현명한 건국자들의 예로는 모세와 솔론, 리쿠르고스, 클레오메네스 등을 들 수 있다.⁷⁹⁾

73) *Discourses on Livy*, p. 9.; 『로마사 논고』, p. 75.

74) 이동수, “민주화 이후 공화민주주의의 재발견,” 『동양정치사상사』 제6권 2호(2005), pp. 18-19.

75) *Discourses on Livy*, p. 28.; 『로마사 논고』, p. 107.

76) *Discourses on Livy*, p. 30.; 『로마사 논고』, p. 111.

77) *Discourses on Livy*, p. 29.; 『로마사 논고』, p. 108.

78) *Discourses on Livy*, pp. 29-30.; 『로마사 논고』, p. 109.

79) *Discourses on Livy*, pp. 29-30.; 『로마사 논고』, pp. 109-111.

마키아벨리의 고찰에 따르면 현명한 일인의 건국자가 도시에 만든 제도들은 참주정보다는 자유롭고 합법적인 정부에 훨씬 적합했고, 훌륭한 지도자는 인민의 사랑에 의해 방어되어 호위병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다.⁸⁰⁾

공화국에서 지도자가 된 자는 로마가 제국이 된 후 법률에 따라 훌륭한 군주로서 처신한 자들이 그 반대로 산 자들에 비해 얼마나 많은 칭송을 받는지 고찰해야 한다. 그리고 티투스(Titus), 네르바(Nerva), 트라야누스(Trajanus), 아드리아누스(Adrianus), 안토니우스(Antonius), 마르쿠스(Marcus) 등의 황제들이 근위병이나 대규모의 호위 군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품성, 인민의 선의, 원로원의 사랑이 그들을 방어했던 것이다.⁸¹⁾

여기에서 공화정을 지지하면서도 새로운 질서의 창조자로서의 군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마키아벨리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역사적으로 스키피오(Scipio), 나비스(Nabis), 팔라리스(Phalaris), 디오니시오스(Dionysios)와 같은 참주는 비난을 받기 마련이다. 마키아벨리는 사악한 품행이나 타락한 삶으로 인해 공화국에 위해를 가한 군주들의 사례를 살피고, 악행을 저지르려고 의도자한 자보다 실제 저지를 자가 더 비난을 받아야 하는 만큼 카이사르 시저(Caesar)는 훨씬 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참주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⁸²⁾

마키아벨리는 건국을 하기 위해서는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에서 법률을 통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군주가 모든 권한을 장악할 필요가 있지만,⁸³⁾ 건국 이후 질서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파괴하려는 군주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80) *Discourses on Livy*, pp. 29-30.; 『로마사 논고』, p. 109.

81) *Discourses on Livy*, pp. 31-32.; 『로마사 논고』, p. 113.

82) *Discourses on Livy*, pp. 31-32.; 『로마사 논고』, p. 112-113.

83) *Discourses on Livy*, p. 30.; 『로마사 논고』, p. 111.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로마가 로물루스, 누마, 툴루스와 같은 출중한 초기의 왕들에 의해 국가의 기본적 구조와 법제를 형성하였지만,⁸⁴⁾ 이들을 계승하는 모든 왕들이 선대 왕들과 같은 능력을 소유한 인물은 아니었다. 따라서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왕국은 국가의 성장과 활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군주와 같은 절대 권력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 결합이 국가의 대외적 위기 상황에 대한 강력한 적응력을 갖는다. 그러나 국가 안정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계급적 분화가 진행되면 군주정과 같은 정치체는 더 이상 활력을 갖고 성장하기가 어렵다.⁸⁵⁾ 마키아벨리는 먼저 다음과 같이 국가 안정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훌륭한 황제에 의해 통치된 시대에 그는 안전한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와 정의로 충만된 세계에서 군주가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그는 원로원이 권위를 가지고, 행정관이 명예를 누리며, 부유한 시민들이 그들의 부를 향유하고, 귀족과 덕이 찬양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 그는 모든 증오, 온갖 방종, 부패 및 야심이 일소된 것을 볼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변호할 수 있는 황금기를 목격할 것이다. 요컨대 그는 세계가 환호하고, 군주는 존경과 영광을 한 몸에 모으게 되고, 인민은 상호간의 사랑과 평화에 싸여 생활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키아벨리는 계급 분화 진행 이후 정치체가 타락해 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황제들의 시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그는 그들이 전쟁으로 인해 광포해지며, 폭동에 시달리고, 평상시의 전시를 막론하고 잔혹하다는 점

84) *Discourses on Livy*, p. 52.; 『로마사 논고』, p. 146.

85) *Discourses on Livy*, pp. 32-33.; 『로마사 논고』, pp. 114-115.

을 발견할 것이다. 칼날에 목숨을 잃은 많은 황제들, 설 새 없는 내란과 그치지 않는 외국과의 전쟁을 목격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는 황폐해지고 유례없는 불행에 시달리며, 도시는 파괴되고 약탈당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 그는 로마에서 수많은 잔혹 행위가 되풀이되는 한편, 고귀함, 부, 과거의 영광 그리고 무엇보다도 덕이 사형을 받게 되는 죄로 인식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⁸⁶⁾

따라서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군주정은 무질서와 혼란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는 건국시의 과도기적 정치체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군주는 로물루스처럼 형제를 살해하고, 체사레 보르자(Cesare Borgia)처럼 배신과 잔혹함의 통치를 하더라도, 인민의 안전과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면, 인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때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군주는 로물루스처럼 새로운 법과 질서를 만드는 창조자이거나 인민과 귀족 계급간의 갈등의 중재자이며, 갈등을 극복하는 구심점이다. 과도기적 정치체로서의 군주정은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당시의 혼란에 직면해서는 더욱 분명한 효용성을 갖는다. 포악하고 기만적인 군주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당시의 체사레 보르자는 그가 현실에서 만난 그 실례이다.

신생 군주국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군주는 다른 누구보다도 체사레 보르자의 행적에서 그 모범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적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 동맹을 맺는 것, 무력이나 기만으로 정복하는 것, 인민들로부터 충성과 두려움을 확보하는 것, 군대로부터의 복종과 두려움을 확보하는 일, 당신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수 있는 자들을 무력화시키거나 말살하는 일, 낡은 체도를 새로운 체도로 개혁하는 일, 엄격하면서도 친절하고 관대하면서도 관후한 처세, 불충한 군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는 일, 그리고 왕이나 다른 통치자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이 기꺼이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거나 해를 가

86) *Discourses on Livy*, pp. 32-33.; 『로마사 논고』, pp. 114-115.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재주를 공작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⁸⁷⁾

그러나 마키아벨리에게 이런 군주의 존재는 외부의 침략이나 인민 중심의 공화정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한 경우의 일시적 처방이다. 건국 이후 호국의 측면에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 구성원의 다양한 능력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합리적으로 구성될 때 보다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화정체는 이런 이유에서 로마가 자국의 안정적 틀을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이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모든 도시와 지방들은 매우 커다란 번영을 누린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혼이 사람들에게 보다 자유롭고 매력적인 것이 되고 각자 자신의 가산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게 되어 아이들을 기꺼이 낳아 키우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아이들이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통해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로운 국가 내에서는 농업과 산업으로부터 재부가 커다란 규모로 배가 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러한 재부를 기꺼이 증대시키고 또 획득한 재산을 자신들이 향유할 수 있다고 믿음에 따라 그러한 재화를 얻으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몰두하게 되며, 그 결과 두 종류의 이익이 경이적으로 증가하게 된다.⁸⁸⁾

스키너 역시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대해 평가하며 “자유를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염두에 둔 것은 위대함을 추구하는 국가라면 반드시 정체적인 예속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⁹⁾ 군주권의 세습은 다양한 인적 구

87) 『군주론』, pp. 56-57.

88) *Discourses on Livy*, p. 132.; 『로마사 논고』, p. 278.

89) 스키너 저 신현승 역, 『마키아벨리: 강권 정치론을 주장한 인문주의자』, pp. 90-91.

성원의 활용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마키아벨리의 지적처럼 군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치명적인 군주의 등장에 의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⁹⁰⁾

마키아벨리가 볼 때 로마의 공화정은 군주정이 가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계이다. 물론 로마의 공화정이 현대의 공화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마키아벨리가 공화정이라고 지칭하는 로마 공화정은 일종의 혼합정부 형태이다. 군주의 역할을 하는 집정관, 귀족의 의사 기구인 원로원, 인민의 대표 기관인 호민관이 행정, 입법, 사법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형태이다. 이 중에서 집정관은 군주, 원로원, 호민관 가운데에서 선출과 같은 합의 방식에 의해 그 역할을 맡는다.⁹¹⁾ 입법 기관과 행정 기관, 사법 기관의 독립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일시적이거나 집정관에게 군주의 역할을 부여하는 점, 귀족 계급의 실질적 세습을 인정하는 등 현재의 공화정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그러나 집정관이나 호민관과 같은 직위가 모든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우면 원로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의 대립을 일정한 정치체 안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주정이 갖지 못한 개방적인 정치체이다.

공화정도 군주정과 동일한 국가 운영의 목적을 갖는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국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계급적 이익을 조정하고자 하는 정치체이다. 그러나 공화정은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때로 군주정보다는 비효율적일 수 있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마키아벨리는 로마 공화정이 집정관 제도를 폐지하고 ‘10인 위원회가 어떤 잘못된 결과를 낳았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⁹²⁾ 만약 공화정

90) *Discourses on Livy*, p. 54.; 『로마사 논고』, p. 149.

91) *Discourses on Livy*, pp. 13-14, 54, 102-122.; 『로마사 논고』, pp. 82-83, 149, 225-256 참고.

92) 10인위원회가 참주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인민들을 속이고 자신의 독재적 지위를 구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비니인들과 볼스키인들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공화정의 10

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위험하고 취약한 방식으로 정치체를 유지한다면 국가의 구성원들은 국가라는 조직을 통하여 자신들의 어떤 계급적 이익도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자신들의 안전마저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⁹³⁾ 따라서 그는 공화정도 군주정이 행하는 통치기술을 근본적으로 함께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주정과 공화정의 근본적인 차이는 군주정이 군주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 국내외적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 공화정은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 특히 인민 계급의 구성원들이 통치에 함께 참여하여 국가적 과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마키아벨리가 공화정을 단순히 훌륭한 지도력을 갖춘 군주에 의해서 좋은 법률이 제도화된 다음에 도래하는 완전무결한 정치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다가오는 역사의 시련은 마키아벨리에게 이 두 정체간의 상호 보완과 발전적 종합의 양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⁹⁴⁾

마키아벨리는 제1권 2장에서 건국 당시부터 어떠한 대외적인 종속도 없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출발한 자유도시 스파르타의 예도 추가하며, 새로운 법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제로 깨닫게 되는 필연성은 으레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가가 새로운 질서가 완성되기도 전에 쉽게 파멸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1502년 아레초의 반란으로 인해 공화정이 재정비되었다가 1512년 프라토의 약탈로 체제 전복이 일어난 피렌체 공화정의 역사를 대조시키고 있다.⁹⁵⁾

인 위원회가 취약하였음에 대해 설명하며 공화정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사례를 들고 있다.

Discourses on Livy, pp. 83-92.; 『로마사 논고』, pp. 198-211

93) 로마 공화정에서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호민관과 귀족을 대표하면서 원로에서 선출되는 집정관을 귀족들은 호민관을 없애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에서, 인민은 집정관을 없애고자 하는 욕망에서 모든 관직을 폐지하는 잘못된 조치에 합의한 바 있음을 지적한다. *Discourses on Livy*, p. 89.; 『로마사 논고』, p. 207.

94) *Discourses on Livy*, pp. 11-13.; 『로마사 논고』, pp. 79-81.

95) *Discourses on Livy*, pp. 10-11.; 『로마사 논고』, pp. 76-77.

1) 운명(fortuna)과 인간의 자유 의지

마키아벨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외부적 힘, 즉 포르투나(fortuna, 운명)가 인간 삶의 영역에 깊숙이 개입한다고 본다.⁹⁶⁾ 어떻게 보면 운명은 한 인간의 개인적 삶이나 특정 국가의 집단적 안전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의 역사과정에서 인간의 의지와 그것에 적응하는 사회적 제도의 적응력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키아벨리에 있어서 운명은 인간의 의지와 신중함에 의해 극복되어야 하는 변덕스러운 여신으로 표현된다.

나는 운명의 여신을 위험한 강에 비유한다. 이 강은 노하면 평야를 덮치고, 나무나 집을 파괴하고, 이쪽 땅을 저쪽으로 옮겨 놓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 격류 앞에는 도망가며, 어떤 방법으로든 제지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이 평온할 때 인간이 제방과 둑을 쌓아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음에 강물이 불터라도 제방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방을 넘어와도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운명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운명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아무런 힘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 위력을 떨치며, 자신을 제지하기 위한 아무런 제방이나 둑이 없는 곳을 덮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격변의 근원이자 무대인 이탈리아를 살펴보면 당신은 이 나라가 바로 제방이나 방파제가 없는 들판인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나라가 독일, 스페인 및 프랑스처럼 적절한 방파제로 보호되어 있었다면, 홍수가 그렇게 커다란 격변을 초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홍수마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체로 이 정도면 일반적인 차원에서 운명에 대처하는 일에 관해서 충분히 말한 셈이다.⁹⁷⁾

96) *Discourses on Livy*, pp. 197-199.; 『로마사 논고』, pp. 389-393.

97) 『군주론』, pp. 171-172.

운명의 신은 여신이고 만약 당신이 그 여자를 손아귀에 넣고자 한다면, 그녀를 거칠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계산적인 사람보다는 과단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을 느낀다는 점은 명백하다. 운명은 여신이므로 그녀는 항상 젊은 사람들에게 이끌린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덜 신중하고, 보다 공격적이며,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다루기 때문이다.⁹⁸⁾

마키아벨리의 위와 같은 언급은 지극히 남성 중심적 사고이지만, 이는 당시 피렌체의 일반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운명의 여신은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인간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극복 가능한 것이 또한 운명이다.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적어도 인간 삶의 절반은 인간 자신의 자유 의지나 덕에 의해 결정되고, 절반은 운명의 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무릇 인간 만사는 끝없이 변천 유동하기 때문에 부침을 거듭한다. 이성이 인도하지 않은 많은 일이 필연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만약 공화국이 확장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스스로를 유지하는 데 적합하도록 세워져 있는데 필연에 의해 부득이 성장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국가의 토대가 흔들리고 순식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영향이 한데 섞여 또는 어느 한 원이 단독으로 그 나라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 간에 균형을 잘 잡거나 정확히 그 중간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어진다. 그러므로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필연에 의해 국가의 확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확장된 영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강구해두어야 할 것이다.⁹⁹⁾

운명과 그것에 맞서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신념에서 그가 한

98) 『군주론』, p. 175.

99) *Discourses on Livy*, pp. 22-23.; 『로마사 논고』, p. 97-98.

개인의 의지와 능력, 한 국가의 정치 체계와 조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읽어낼 수 있으며, 나아가 근대적 인간의 자율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시대 상황과 로마의 공화정을 고찰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확립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운명의 시련은 군주정에서 참주정으로, 귀족정으로, 과두정으로, 공화정으로, 무정부 상태로의 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정체가 군주정에서 참주정으로 변질되는 과정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있다.

후일 선출이 아니라 세습에 의한 군주정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상속자들은 조상과 달리 쉽사리 타락하게 되었고, 군주는 유덕한 행동을 소홀히 한 채 누구 못지않게 사치와 색욕 등 온갖 종류의 방탕에 탐닉한 나머지 그 밖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군주는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러한 미움을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당장 폭력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 즉각적인 결과가 참주정치였다.

다음으로 마키아벨리는 참주정으로부터 귀족정이 수립되는 과정과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귀족정이 소수에 의한 과두정으로 타락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로부터 파멸, 즉 군주에 대한 음모와 반란의 원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음모와 반란은 ... 다른 사람들보다 가문, 기백, 부 및 계급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군주의 수치스러운 생활 태도를 참을 수 없는 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렇게 되면 다중은 이 유력한 사람들의 지도에 따라 군주에 대항해 무기를 들었고, 군주가 타도되면 그들을 해방자로 맞이하여 복종하였다. 해방자들은 ... 처음에는 이전의 폭정을 생각하고 그들이 제정한 법률에 따라 처신하고, 그들 자신의 이득을 공동선

에 복종시키며, 아주 근면하게 공사(公私) 업무를 돌보고 처리했다.

그러다가 후일 통치 업무가 그들의 자식 대에 이전되었을 때, ... 그들이 탐욕, 야심, 여성들의 겁탈에 탐닉함으로써 최선자(最善者)들에 의한 통치는 소수에 의한 통치로 전락하게 되었다. ...

그리고 과두정을 전복시키고 공화정을 수립하지만, 결국 자유의 남용으로 무정부상태에 이르고, 무정부상태를 극복하고자 다시 군주정으로 되돌아가 다시 자유의 남용을 향해 흘러가는 정체의 순환성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들의 처신에 진절머리가 난 민중의 도움으로 그들을 타도하는 자가 순식간에 등장하게 되었다... 소수 지배체제를 전복시킨 자들은 ... 민중 정부에 주의를 돌려 유력한 소수나 1인의 군주가 통치권을 갖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를 조직했다. ... 그러나 오래지 않아, 특히 그 정치체제를 수립한 세대가 사라진 후, 그 체제는 자유의 남용으로 이르게 되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공공의 권위도 타인에 대한 존중도 사라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각 개인은 제멋대로 살게 되어 매일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러다가 필연에 강제되거나 어떤 훌륭한 사람의 제안에 따라, 또는 그러한 남용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군주정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미 설명한 방식대로 ... 자유의 남용을 향해 전개되었다.

이것이 모든 국가가 통치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순환이다.¹⁰⁰⁾

마키아벨리의 이런 판단은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에서 운명이 인간의 삶의 영역에, 특히 정치가나 정치체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한 군주를 단련시키기도 하고 파멸시

100) *Discourses on Livy*, pp. 11-13.; 『로마사 논고』, pp. 79-81.

키기도 하는 동시에 공화정과 같은 정치체에 심각한 시련을 가져오기도 한다.

마키아벨리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군주정과 공화정은 욕망에 가득 찬 인간들의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체이다. 이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로마의 경우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로마의 경우에는 ... 평민과 원로원 간의 불화 때문에 예상치 않았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 결과 입법자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연한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 ... 최초의 법률이 비록 결함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에 이르는 길로부터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 로물루스를 비롯한 여러 왕들이 많은 좋은 법률을 만들었고, 또한 그것들을 자유로운 사회에 적용시켰다. ... 왕을 몰아낸 자들은 왕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즉시 두 명의 집정관을 두었다. 그리하여 로마로부터 왕의 칭호를 박탈했지만, 왕의 권력에 해당하는 제도는 유지했다. 그 결과 국가기구에 집정관과 원로원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군주정과 귀족정의 혼합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키아벨리의 설명과 같이 군주정과 공화정은 로마 공화정이라는 현실적 혼합정체 안에서 공존하는 동시에 상호간의 정체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결합한다.

이제 정부 내에 민중의 역할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만 남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은, 로마 귀족이 횡포를 부리게 되었을 때 민중들이 그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키고, 급기야 귀족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민중들에게 그들의 몫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로원과 집정관은 공화국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권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호민관이라는 관직이 창설되었다.

그 후 세 유형의 모든 정부 형태가 자기 몫을 갖게 됨으로써 공화국의 조건은

더욱 견고해졌다. 게다가 운명은 로마에 호의를 베풀어, 위에서 논의한 경위와 이유에 따라 로마가 왕과 귀족의 정부에서 인민의 정부로 전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 왕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빼앗는 법도 없었고, 인민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 귀족들로부터 권위를 전적으로 박탈하는 일도 없었다.¹⁰¹⁾

이러한 상태에서 내부적 갈등과 외부적 침략 위협과 같은 운명의 극복을 위해 군주정적 요소가 부각되기도 하고 공화정적 요소가 부각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그가 남성적 군주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의 표본으로 칭찬하는 체사레 보르자가 바로 정치지도자로서의 운명을 가진 인물이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운명은 군주에게 있어서 인민의 호의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의 군주의 의지나 능력과 조우할 때, 그는 군주의 지위에 올라서게 된다. 체사레 보르자는 그의 아버지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그 자신의 거짓말과 속임수, 배신과 같은 정치적 술수에 과감한 정치적 행동으로 군주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¹⁰²⁾ 『로마사 논고』에서도 로마를 건국한 위대한 세 지도자 로물루스, 누마, 툴루스의 연이은 등장인 ‘로마의 행운’¹⁰³⁾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렇게 시대적 운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능력있는 군주의 등장에 힘입어 로마는 튼튼한 군사적, 종교적, 법률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명은 단지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운명의 신은 공화정과 같은 정치체에도 발전의 기회가 되는 어려운 시련을 가져온다. 그는 ‘운명과 군사제도야말로 로마가 강성해진 원천이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바로 내분과 불화라는 로마의 운명이 로마 공화정이라는 훌륭한 제도와 법률을 갖추게 했다고 주장한다.¹⁰⁴⁾ 이와 같이 운명은 어떤

101) *Discourses on Livy*, pp. 13-14.; 『로마사 논고』, pp. 82-83.

102) 『군주론』, pp. 48-58 참고.

103) *Discourses on Livy*, p. 52.; 『로마사 논고』, p. 146.

군주나 공화제 자체에 큰 위협이 된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운명의 개입은 정치가의 강력한 의지나 보다 발전적인 정치제의 적응력을 통해 로마 공화정과 같은 혼합 정치체를 발전시킨다. 위대한 개혁가로 하여금 공화국의 부패를 차단하게 하고, 공화국으로 하여금 참주의 등장을 막고 시민적 덕성과 자유를 향유하게 하면서 순환하고 종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볼 때 혼합 정치체로서의 로마 공화정은 이러한 운명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되어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군주정과 공화정이 각 시대 상황에 맞는 정치 체제로 변화하면서 순환하는 하나의 흐름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인간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운명에 대하여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에 나타난 마키아벨리의 주장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로마 공화국이라는 혼합 정체체 안에서 계급적 이익과 갈등, 제도와 법률의 제정과 시행 주체, 국가의 덕성으로 나타나는 군주와 시민의 덕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종합되어 가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

2) 군주정과 공화정 요소의 상호보완성

① 계급 갈등의 필연성

어떤 정체가 되었든 계급 갈등에 따른 내분은 정치체의 안전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온다. 그리고 계급 간의 갈등은 인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양상이다. 마키아벨리는 그가 살았던 이탈리아와 그가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

104) *Discourses on Livy*, p. 16.; 『로마사 논고』, p. 86.

던 로마 공화정 모두에서 계급적 분화와 충돌을 목격한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이런 계급 간의 갈등이 가져온 결과에 주목하면서, 계급 갈등의 효용성을 설파한다.¹⁰⁵⁾ 마키아벨리는 계급적 갈등이 국가 발전의 단일한 계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것이 국가 변화의 다양한 계기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체제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면서 보다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는 데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의 『군주론』에서 군주국의 전형으로 제시되는 것은 시민형 군주국인데, 그에 따르면 이 군주국의 인민 계급과 귀족 계급은 계급 갈등의 계기에 의해 군주를 옹립하여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

시민형 군주에 오르는 데에는 인민의 호의에 의한 방법과 귀족의 호의에 의한 방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모든 도시에는 인민과 귀족의 두 계급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 인민은 귀족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억압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귀족은 인민을 지배하고 억압하고자 하기 때문에 초래된다.¹⁰⁶⁾

마키아벨리의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국가의 내부적 갈등과 외부적 침략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군주의 존재는 인민과 귀족의 계급 갈등이라는 원인으로 부터 초래된 결과인 것이다. 다시 말해 군주는 인민과 귀족 계급 간 갈등의 중재자인 동시에 인민과 귀족을 하나라의 국가라는 조직으로 묶는 구심점이 된다. 물론 군주의 존재가 계급적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급 갈등의 표면적 중재자인 동시에 계급 갈등을 극복하는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는 존재로서 인민과 귀족의 계급적 이익을 보장해 준다. 나아가

105)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입장은 당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브루니(L. Bruni)와 포쥬(Poggio Braccolini) 등의 입장과는 정반대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도 피렌체와 로마를 포함한 시민들 간의 사적 이익을 위한 파당적 대립은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진원숙, 앞의 책, p. 396.

106) 『군주론』, pp. 67-68.

인민과 귀족, 모두의 삶의 바탕이 되는 국가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이 군주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또한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계급의 분화와 갈등은 로마를 오랫동안 번영하게 한 로마 공화정의 토대를 쌓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 제1권 3장과 4장에서 ‘로마를 더욱 완벽하게 만든 호민관이 창설하게 된 경위’와 ‘로마를 자유롭고 강력하게 만든 평민과 원로원의 대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좋은 관습이 결여된 곳에는 법률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그런즉 귀족들에게 겁을 주어 견제하던 타르퀴니우스 왕가가 사라진 연후에 로마는 일찍이 타르퀴니우스 왕가가 생존했을 때 가졌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를 창안해낼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평민과 귀족 간의 불화로부터 초래된 많은 혼란, 소동 및 내전의 위협을 거친 후에¹⁰⁷⁾ 사람들은 인민의 안전을 위해 호민관을 창설하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이 호민관에게 높은 권위와 명예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후 호민관은 항상 평민과 원로원을 중재하고, 귀족들의 거만함을 억제할 수 있었다.¹⁰⁸⁾

그토록 많은 명예로운 처신으로 가득 찬 공화국을 놓고 무질서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토록 좋은 모범적 처신은 좋은 교육에, 좋은 교육은 좋은 법류에, 좋은 법류는 많은 이들이 무분별하게 규탄하던 그러한 대립과 불화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 결과를 엄밀히 검토한 자라면 누구나 그러한 대립이 공동선에 유해한 추방이나 폭력보다는 공공의 자유에 도움이 되는 법

107) 카이사르 시저의 경우 폼페이우스와 다른 시민들도 처음에는 그의 역량을 찬양했지만, 얼마 안 있어 그 찬양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이에 관해 “폼페이수가 이제 와서 카이사르 시저에게 두려움을 느껴봤자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키케로의 말은 그 사정을 잘 보여준다.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 그들은 타개책을 찾았으나 그들이 사용한 타개책은 오히려 공화국의 파멸을 촉진시키는 데 지나지 않았다. *Discourses on Livy*, p. 72.; 『로마사 논고』, p. 180.

108) *Discourses on Livy*, p. 15.; 『로마사 논고』, p. 85.

률과 제도를 생산해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⁰⁹⁾

호민관이 로마를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그의 평가는 호민관이라는 지위를 통해 인민 계급이 정치권력에 참여를 하여 로마 공화정의 튼튼한 토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고, 평민과 원로원의 대립이 로마를 자유롭고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평민 계급과 귀족 계급의 지속적인 견제와 균형이 로마 공화정이라는 정치체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긴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계급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된 대립과 갈등이 로마 공화정의 기초를 쌓았고, 나아가 로마공화정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정치체가 되는 원동력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적 대립이 『군주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강력한 군주에 의한 국가 이성을 확립하게 하거나, 『로마사 논고』에서 논의된 것처럼 인민 다수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한다고 하더라도, 계급의 이익에 기초한 대립과 갈등이 군주정이나 공화정 가운데 어떤 하나의 정치체를 통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갈등이 어떤 한 정치체만을 유지하게 하거나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개선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계급 대립의 결과물로서의 두 정치체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¹¹⁰⁾

군주정은 계급적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동시에 참주가 탄생하여 인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박탈할 수 있고, 공화정은 특정 계급의 부패와 독점적 참여로 인해 국가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에 커다란 위협의 가능성을 내포함은 물론 심각한 분열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볼 때, 군주의 역할을 하는 집정관과 귀족 계급의 원로원, 그리고 호민관, 감찰관 등으로 구성된 혼합 정치체로서의 로마 공화정은

109) *Discourses on Livy*, p. 16.; 『로마사 논고』, p. 87.

110) *Discourses on Livy*, pp. 11-13.; 『로마사 논고』, pp. 79-81 참고.

이런 군주정과 공화정의 순환과 종합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정치체이다.¹¹¹⁾ 마키아벨리가 말한 혼합 정치체는 왕의 역할을 하는 집정관, 귀족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원로원, 인민 계급의 권리를 보호하는 호민관이라는 세 상징적 존재의 혼합이다. 결과적으로는 귀족 계급과 인민 계급의 대립 구도 하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군주의 공식적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로원이나 호민관 가운데에서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집정관의 자격으로 실질적인 군주의 역할을 할 때, 로마공화국이 당면한 내외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치체와 사회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전면적 전쟁이나 내부의 분열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임명하게 되는 임시독재 집정관¹¹²⁾과 같은 존재가 군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¹¹³⁾ 아울러 로마 공화정은 계급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혼합 정치체이다.

그러나 한편 혼합 정치체로서의 로마 공화정은 귀족과 인민 간의 계급적 갈등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마키아벨리는 혼합 정치체 내에서의 계급적 갈등과 이익의 충돌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그것이 극복될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로마 공화정의 10인 위원회의 구성과 폐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로마 공화국의 지속적인 팽창 전쟁은 인민 계급을 지

111) *Discourses on Livy*, p. 14.; 『로마사 논고』, p. 83 참고.

112) 로마인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40여 개에 달하는 부족들이 동맹조약을 맺자, 국가 존망의 위기에 대처하는 중대한 구제책으로 한 시민에게 최고 권력을 부여하는 임시 독재 집정관 제도를 창설하였다. 마키아벨리는 로마가 임시 독재 집정관 제도를 창설하여 단시일 내에 국력을 증강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온갖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러한 치유책이 없었더라면 직면했을 법한 수많은 해악을 피할 수 있었다고 역설한다. *Discourses on Livy*, pp. 71-73.; 『로마사 논고』, pp. 177-181.

113) 로마공화정 이후 정착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비롯된 황제정은 사실상의 군주정으로, 원로원은 하나의 형식적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되었고, 군주의 좋은 자질이 일시적으로 제국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기도 했으나, 군주정으로서의 정착은 군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군주들의 잇따른 등장으로 인해 로마를 쇠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pp. 133-144 참고.

치게 하였고, 인민들은 이러한 전쟁의 원인이 귀족들의 계급적 이익 추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인민 계급은 귀족 계급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던 중 인민과 귀족 간의 적대적 관계를 미봉적으로 해소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민 계급과 귀족 계급의 합의하에 집정관 제도를 폐지하고 10인 위원회를 창설한 것이다. 이 사건의 창설과정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로마의 자유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한 법의 제정을 둘러나고 인민과 귀족들이 많은 논쟁과 분쟁을 거듭한 후 두 당파는 ... 솔론의 아테네를 위한 법률 사본을 얻은 후, 그것을 연구하여 로마의 법을 기초하기로 합의했다. ... 그리하여 그들은 1년 임기로 10인의 시민을 임명했는데, 그 중에는 명석하지만 다소 음험한 구석이 있는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원들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새로운 법률을 기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로마의 모든 관직, 특히 호민관과 집정관 직위를 폐지하고, 인민을 소집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마저 없애버렸다.¹¹⁴⁾

이처럼 10인 위원회의 지배자로 등장한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Appius Claudius)는 자신의 지배가 평민들에게 많은 계급적 이익을 부여할 것이라는 선동과 계략으로 절대적 권력자가 될 수 있었고, 호민관과 집정관직을 폐지하고 인민의 동의라는 절차마저 폐지하였다. 마키아벨리는 이 사건을 두고 “자유에 대한 인민의 지나친 욕망과 귀족들의 지나친 지배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¹¹⁵⁾ 그리고 10인 위원회 창설 이후 경과에 대해 다음과

114) *Discourses on Livy*, p. 88.; 『로마사 논고』, p. 204.

115) 우리는 로마에서도 이러한 참주정을 수립하려는 악폐가 곧 자유에 대한 인민의 지나친 욕망과 귀족들의 지나친 지배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당파가 자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없어서 그 중 어느 한 당파가 어느 한 인물을 성급하게 지지하게 되면, 참주정이 재빨리 출현하게 된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Discourses on Livy*, p. 88.; 『로마사 논고』, p. 204.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위원회는 로마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었다. 그리고 인민들로부터 받은 지지에 힘입어 아피우스는 그 수중에 동료들의 모든 권한마저 장악하였다. ... 그러나 그 후 그가 잔인한 박해자로 군림하기 시작하자, 그가 어떻게 해서 돌연히 것처럼 새로운 성격과 기질을 지니게 되었는가에 대해 모두들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16)

이는 마키아벨리와 같은 공화주의자로서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로마 공화정에도 커다란 위기였다.

... 로마군은 집정관의 지휘하에서는 승승장구한 데 반해, 10인회의 지휘하에서는 항상 패전을 거듭했다. ... 10인회의 지휘하의 로마 군대는 예전과 같은 사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 117)

116) 10인회의 우두머리인 아피우스가 로마에 참주정을 수립하려다 실패하면서 저지른 많은 오류들이 있었다. 새로운 위원회는 로마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었다. 인민들로부터 받은 지지에 힘입어 아피우스는 그 수중에 동료들의 모든 권한마저 장악하였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는 모든 면에서 인민들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들 10인은 자유국가의 관리들처럼 분별 있게 처신했으며, 10인회 우두머리의 경호를 담당하는 릭토르 역시 12명을 넘지 않았다. 게다가 10인회는 최종적으로 법률이 확정되기 전에, 법률안을 10개의 동판에 써서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누구나 그것을 읽고 시비를 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결함이 발견되면, 확장 전에 수정하였다. 10인회를 재선출하자는 결정이 내려진 후 모든 귀족들이 앞 다투어 그 지위를 차지하고자 노력했는데, 아피우스가 앞장을 섰다. 그가 그 자리를 구하기 위해 평민들에게 너무나 정중하게 행동하자 동료들은 그를 의심했다. ... 차기 10인의 명단을 인민들에게 제출할 권한을 일임 받은 아피우스는 관행을 무시하고 자신을 제1인자로 지명함으로써 모든 귀족들의 경악과 분노를 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9인을 지명했는데, 모두 그가 선호하는 인물이었다. 돌연히 아피우스는 “부자연스러운 연기를 걷어치우고” 타고난 오만함을 과시하기 시작했고, 수일 내에 그의 동료들 역시 그의 습관에 감염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악스럽게도 그는 릭토르를 120명으로 증원했다. *Discourses on Livy*, pp. 85-89.; 『로마사 논고』, pp. 200-204.

117) *Discourses on Livy*, p. 91.; 『로마사 논고』, pp. 209.

이처럼 시민의 정치적 자질에 기초한 공화정 하에서 인민들의 계급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나친 기대는 새로운 참주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의 등장으로 오히려 축소되었고, 이것은 분명히 마키아벨리의 생각처럼 공화정이 가진 한계의 구체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마에 불어 닥친 전쟁이라는 운명으로 인하여 원로원의 소집과 평민들의 농성과정을 통해 참주를 제거하고 호민관 제도를 부활시키게 되었고, 모든 관직에 대한 인민의 동의 및 원로원의 역할이 재개되면서 로마의 혼합정체가 복원되었다. 마키아벨리는 그 복원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적고 있다.

... 비르기니아 사건으로 인해 로마의 평민들은 무장한 채 성산에 올라가 농성했다. 원로원은 사자를 보내 누구의 명령을 받아 관리들을 내버리고 산에 올라갔는지를 물었다. 원로원의 권위가 크게 존중 받은 데에다가 인민들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답변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 ... 비루기니우스는 이처럼 곤궁한 사정을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지침에 따라 평민들은 20인의 군사위원을 선출하였으며, 그 군사위원들이 원로원에 대한 회답과 협상의 임무를 떠맡았다. ... 평민들은 호민관 제도를 창설할 것과 모든 관직의 임명에 대해 인민의 동의를 거칠 것, 그리고 10인회 위원 모두를 산채로 화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대표인 발레리우스와 호라티우스는 인민들에게 10인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스스로 권위와 권력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되찾은 연후에 그들의 원을 풀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라고 조언했다.¹¹⁸⁾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역사적 사례에서 보듯 혼합 정체는 계급 대립의 과정에서 군주정으로 나아갈 수도 공화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유동적인 정치체

118) *Discourses on Livy*, pp. 84-92.; 『로마사 논고』, pp. 199-210.

인 동시에 두 요소 모두를 포함한 정치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민과 귀족의 계급적 이익과 갈등이 군주제적 모습을 통해 심화되거나 해소되기도 하고, 공화제적 체제를 통해 계급적 대립이 증폭되거나 해소되기도 하는 종합적 정부 유형이다. 이것은 혼합 정치체인 로마 공화정 안에서 군주정과 공화정이라는 상반된 정치체의 순환과 종합의 기능에 의해 계급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입헌적 질서 확립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혼합 정치체는 그것이 시작될 때부터 정형화된 정부의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다. 마키아벨리가 가장 좋은 정치체로 생각하는 로마 공화정도 마찬가지이다. 로마 공화정은 ‘견고한 법제도의 설립을 통해 국가 권력을 확립한 뛰어난 군주와 그 군주의 기본적 제도를 보다 확장시킨 인민들의 합작품이다.’

만약 군주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새로운 법제도를 설립하는데 우월하다면, 인민은 이미 조직된 사물을 보존하는 데 우월하여 의심할 여지 없이 공동체를 창립한 사람들만큼이나 영광스런 업적을 성취한다.¹¹⁹⁾

로마의 건국자인 로물루스와 누마, 스파르타의 리쿠르코스(Lycurgos)와 아테네의 솔론(Solon) 등이 바로 그러한 덕을 갖춘 군주로서 한 국가의 질서를 확립한 군주들이다. 이들은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추구하는 강력한 군주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볼 때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군주에 의해 지배되는 스파르타와 민중에 의해 지배되는 아테네는 로마처럼

119) *Discourses on Livy*, p. 118.; 『로마사 논고』, p. 252.

오랜 시간 영광스러운 제국을 형성하지 못했다. 로물루스와 누마로 시작되는 로마의 경우 초기 입법자들이 군주국을 확립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들에 대하여 인민의 자유와 참여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¹²⁰⁾ 로물루스와 같은 창조적 군주가 귀족으로 구성된 원로원과 같은 국가 기구를 확립한 뒤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인민을 대표하는 호민관직을 설치한 것이다. 이렇듯 군주와 인민 계급은 제도와 법률의 주체가 되어 순환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혼합 정치체가 발전적 형태로 나아갈 수 있었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군주는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확고한 정부의 바탕을 마련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시련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구질서 아래에서 이익을 보던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¹²¹⁾ 구질서로부터의 단절은 때로는 가혹하게 로물루스와 같은 군주에게 자신의 동생과 그의 협력자 티투스 타티우스와 같이 가까운 사람의 살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군주 자신의 사적 이익의 실현이 아니라, 국가 질서 확립, 공공선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정치적 과정이라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주장이다. 이는 군주가 국가적 안위를 위해서는 자신의 사적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존재로서의 군주여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다수의 인민 계급은 이러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현명한 입법자 로물루스가 원로원을 창설하고 원로원과의 협의 과정을 확립했으며, 자신은 군대통수권과 원로원의 소집권만 가짐으로서 이를 국가 질서로 만들어 놓았음을 지적한다.¹²²⁾ 여기에서 국가 질서를 새롭게 형성해야 하는 경우, 즉 건국 시에 반드시 군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 마키아벨리의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120) *Discourses on Livy*, p. 14.; 『로마사 논고』, p. 83.

121) 『군주론』, p. 204.

122) *Discourses on Livy*, p. 30.; 『로마사 논고』, p. 109.

이처럼 군주는 로마와 같은 한 국가의 ‘국가적 자유의 토대를 확립하는 존재’이다.¹²³⁾ 오로지 새로운 국가 질서와 제도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군주는 “인민과 존재의 상이한 영역에 속한다. 그것은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자신의 욕구의 만족이 아니며, 또한 그를 인도해야 할 자신의 열정의 완화도 아니며, 악덕과 덕이라는 도덕적 범주 너머에서”¹²⁴⁾ 국가 질서와 법률의 확립이라는 공공선을 달성할 수 있다면 로물루스처럼 행동하는 존재이다.¹²⁵⁾ 여기에서는 인민의 자유로운 삶의 확보와 인민의 다양한 자질을 국가적 차원으로 종합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군주정이 수반하는 필연적 한계이다.

마키아벨리의 생각처럼 군주에 의한 법과 제도는 인민의 자유로운 삶을 제한하고 인민의 정치적 참여를 차단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군주권의 세습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참주를 등장시키거나, 군주로서의 자질이 낮아서 인민보다도 판단력이 떨어지는 세습 군주의 출현으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는 군주정에 닥쳐온 시련이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초기의 로마 인민들은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굴하게 복종하지도 않았고 거만하게 군림하지도 않았다.

공화국이 아직 부패하지 않은 채 지속되는 동안 비굴하게 복종하지도 않고 거만하게 군림하지도 않은 로마 인민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부패된 경우와 달리 법률 및 행정관과 함께 로마 인민은 그 자리를 명예롭게 지켰던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인문들에게 저항할 필요가 있었을 때, 그들은 만리우스 사건, 10인회 사건

123) 우리는 마키아벨리가 자치나 자신의 법률은 공동체가 타세력에 필적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졌을 때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점을 경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도시국가의 자치를 타국에 대항하는 정치적 실존으로 인식했으므로 국가와 자유를 동일한 어조로 설명한다. 진원숙, 앞의 책, p. 382.

124) 부이 알튀세르 저, 오덕근·김정한 역, 『마키아벨리의 가면』 (서울: 이후, 2001), p. 161.

125) 스트라우스는 마키아벨리가 본 국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국가의 목적은 공동선으로서, 외세의 지배와 전체적 통치에서 벗어남, 법의 지배, 모든 시민의 생명, 재산, 명예의 보호, 계속 성장하는 부와 권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국의 영광이다.” 레오 스트라우스 저, 함규진 역, 『마키아벨리』 (서울: 구운몽, 2006), p. 339.

또는 그들을 탄압하려는 다른 인물들에 대해 취한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의연히
펼기했던 것이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임시 독재 집정관이나 집정관에게 복
종하는 것이 필요할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행동했다.¹²⁶⁾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국가가 작은 상태로 머물기를 원하면 스
파르타와 베네치아처럼 국가의 권력에 인민을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로마처럼 거대한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¹²⁷⁾ 로마는 인민 계급의 정치참여와 탄핵제도, 집회와 같은 공
화제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인민들의 다양한 능력을 국가 안으로 종합하고
자율적인 평민으로 조직된 강력한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다. 이는 계급간의
내부적 갈등을 정치체 내에서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의 자위력을 확보할 수 있
게 한다. 인민의 결속된 힘은 군사적인 미덕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자질과 공
익에 관심을 가진 인민이 민회에 법률을 제안하고 결의를 하기 전에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공화정의 확립은 마키아벨리의 주장처럼 로마가 위대
한 제국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또한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탄핵제도는
당파적 증오의 배출구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대한 반역 가능성을 일소시킨다.
마키아벨리의 이런 생각은 공화정에 대한 예찬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의 인민이 정신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을 때의 공화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인민들이 가난하고, 지속되는 전쟁의 상태에서 유능한 인물
을 필요로 할 때 공화정은 로마 인민들에게 좋은 정치체였다.¹²⁸⁾ 그러나 마키
아벨리는 로마 공화정이 안정되고 인민의 부가 증대되면서, 인민 계급이 공공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 방법상의 차이에 따른 공개적 비판이 아니라 마키
아벨리 당대의 피렌체처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증상이 팽배하면서 공화정이
가진 긍정적인 제도도 나쁜 제도로 타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곧 기

126) *Discourses on Livy*, p. 116.; 『로마사 논고』, p. 249.

127) *Discourses on Livy*, pp. 17-23.; 『로마사 논고』, p. 88-98 참고.

128) *Discourses on Livy*, p. 255.; 『로마사 논고』, p. 490.

본적 제도의 부패를 의미한다.¹²⁹⁾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스를 정복한 후 로마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가 완성되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인민들은 능력 있고 선량한 사람을 공화국의 수호자로 내세우기 보다는 권세 있는 사람을 지지함으로써 공화국의 파멸이라는 위기를 초래하였다.

마키아벨리가 볼 때 이런 역사적 운명에 맞서서 로마를 개혁할 수 있는 존재는 이미 정치적 건강함을 상실한 인민이 아니다. 그는 바로 강력한 개혁의지와 신중함, 과단성을 지닌 군주이다.¹³⁰⁾ 부패한 제도를 일시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시 로물루스와 같은 군주가 폭력이나 무력과 같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혼합 정치체 내에서의 무질서와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적 군주의 존재를 다시 요구하는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마키아벨리는 법률과 제도의 정착과 시행의 주체가 군주와 인민 계급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로마의 혼합정은 국가 이성의 행사 주체가 되는 이들 두 존재를 순환적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로마 공화정이라는 혼합정체 안에서 새로운 국가 질서의 확립이나 근본적 개혁의 역할을 하는 군주를 필요로 할 때는 강력한 군주가 등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동시에 참주에 저항하고 시민적 자유와 참여를 확장하고자 할 때는 공화정의 제도를 강화시킨다. 이처럼 정치 주체의 대립과 순환을 통해 내외부적 혼란을 극복하면서 혼합 정치체로서의 로마 공화정이 보다 발전적 단계로 나아간다는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다양한 통치권력의 주체가 가진 현실적 능력의 효용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현실적 효용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특정한 정치체에 이념적으로 경도되지 않고 정치체의 효용성을 결합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는 현실에 기초하여 정치사상을 형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129) *Discourses on Livy*, pp. 50-51.; 『로마사 논고』, pp. 143-144.

130) *Discourses on Livy*, pp. 50-52.; 『로마사 논고』, pp. 144-146.

③ 군주와 인민의 덕성(virtu) 결합

불확실성으로서의 포르투나(fortuna)는 군주의 탁월한 능력과 인민의 덕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비르투(virtu)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비르투는 운명에 맞서는 한 인간의 탁월한 능력을 의미하는 동시에 나아가 군주와 인민의 능력이 결합된 상태로서의 국가적 힘과 법률 제도, 그리고 그것이 결과하는 국가적 영광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동체에 닥쳐올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사려 깊은 법률 제도의 정착, 군주가 가진 남성적 결단력, 국가가 보유하는 군사력까지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모두 비르투라는 하나의 용어로 표현 가능하다.¹³¹⁾ 역사는 인민과 군주, 그들의 삶의 영역인 국가에 시련의 운명을 항상 마련하고 있으며, 이런 운명 앞에서 군주의 정치적 자질과 인민의 정치적 덕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국가의 덕성으로 나타난다.¹³²⁾ 따라서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는 군주의 자질과 인민의 자질, 그리고 혼합 정치체로서의 로마 공화정의 제도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좁혀서 군주의 비르투와 인민의 비르투가 갖는 본질적인 내용들이 혼합 정치체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국가적 비르투가 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는 군주정에 필수적인 군주의 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권력과 군사력의 독점적 집행기관으로서의 군주의 비르투를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로마사 논고』에서는 이미 『군주론』에서 다루고 있는 군주의 비르투를 확인하면서 개

131) 스키너, 앞의 책, pp. 100-109. 박상섭, 『국가와 폭력: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p. 209-219.

132) 마키아벨리는 비르투에 관한 핵심 개념을 분석하면서 『군주론』에서 이미 제시했던 구절들을 충실히 따랐다. ... 『군주론』에서는 이런 자질들을 오로지 위대한 지도자들과 군사령관들에게만 연관 지어 생각했었다. 하지만 『로마사 논고』에서는 만약 한 도시 국가가 위대함을 얻고자 한다면, 시민 전체가 그런 자질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키너, 앞의 책, pp. 93-94.

혁적 존재로서의 군주의 자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 이성의 주체로서의 군주는 남성적 강인함과 도덕에 얽매이지 않은 냉철한 정치적 판단을 하는 주체이다. 또 개혁적 존재로서의 군주는 부패한 질료로서의 인민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신중함과 과감함의 비르투를 갖추어야 하는 존재이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강조하고 있는 군주의 자질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 국가의 체도를 정착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법률, 군주에 대한 좋은 평가를 유지하는 능력, 자신의 통치를 보다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 신하를 통솔하는 기술이 그것이다. 『로마사 논고』에서는 이러한 자질에 더하여 호국적 측면에서 로마의 두 번째 왕 누마의 국가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종교적 경건함’¹³³⁾, ‘사적 관계로부터의 냉정함’¹³⁴⁾ 등을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이러한 자질들은 단지 군주의 비르투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민의 비르투와 만나 국가적 비르투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민의 비르투를 길러낸다. 군주의 이러한 비르투는 국가적 운명을 극복하는 탁월한 능력이다.

우선 마키아벨리의 의견에 따라 군주의 자질에 대하여 고찰하면, 군주는 오로지 “전쟁, 전술 및 훈련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일이든 목표로 삼거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며 ... 이러한 전술적 재능”¹³⁵⁾을 가진 자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에서 군대와 장군, 전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국가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힘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런 힘은 알키비아데스(Alcibiades), 파울루스 아이밀리우스(Paulus Aemilius), 안토니오 자코미니(Antonio Giacomini) 등의 훌륭한 장군들이 가진 개인적 능력이기도 하지만

133) *Discourses on Livy*, p. 35, pp. 285-287.; 『로마사 논고』, pp. 118, 538-540 참고.

134) *Discourses on Livy*, p. 214.; 『로마사 논고』, p. 420 참고.

135) 『군주론』, p. 102.

국가를 강력하게 하는 국가와 결합된 비르투라고도 할 수 있다.¹³⁶⁾ 법률이나 제도로서의 덕은 『군주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프랑스의 고등법원’(parlement)과¹³⁷⁾ 『로마사 논고』에서 로물루스가 확립한 원로원 제도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¹³⁸⁾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군주의 통치권을 정당화시켜준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군주의 비르투가 이렇게 제도로서도 구체화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그가 군주의 자의적인 통치권력을 정당화한다는 생각을 반박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주의 직접적 통치기술 또한 군주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 하나이다.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에서 마키아벨리는 신하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신하는 통치의 조력자로서 군주가 필요로 하는 조언을 하는 존재이며, 자신의 통치를 인민에게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존재이다. 이들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사자와 같은 용맹함과 여우와 같은 간교함’의 통치술을 구사해야 한다.¹³⁹⁾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거나 부패한 과거의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오로지 한 명의 군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에 기초해 검토해 볼 때 신하는 단지 군주의 절대적인 통치권력에 대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⁰⁾

군주의 자질은 또한 사랑, 관후함, 인자함, 온화함과 같은 전통적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탈도덕적 정치기술을 행사하는 존재이다.¹⁴¹⁾ 군주에게 필요한 것은 군주로서의 외양(appearance)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군주에 대한 경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운명의 여신

136) *Discourses on Livy*, pp. 258-259.; 『로마사 논고』, pp. 489-492.

137) 『군주론』, p. 127.

138) *Discourses on Livy*, pp. 29-30.; 『로마사 논고』, p. 109.

139) 『군주론』, pp. 123-124, 138 참고.

140) 『군주론』, pp. 160-161, 166, 546-549 참고.

141) 박상섭, 앞의 책, p. 209.

을 극복할 수 있는 용맹, 당당함, 판결의 단호함, 강건함의 남성성의 외양을 확보하는 것이 군주가 갖추어야 할 비르투이다.

마키아벨리는 정치권력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서슴지 않고 권력을 피력한 사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당대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그의 논의를 살펴보면 그가 사실 폭력의 절약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키아벨리적 폭력은 특별히 당시의 이탈리아가 무정부상태에의 절박한 위기에 있었다는 사실과 결부시킬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당대 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던 이기주의는 그 절정에 달하였는데 마키아벨리로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퇴폐가 시민정부를 불가능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⁴²⁾ 그리하여 이미 개인적 미덕 및 시민적 성실과 헌신이 쇠퇴해 버린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종교와 도덕에 호소함으로써 이러한 무질서 및 사회적 타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시의 이탈리아를 일단 무정부상태와 같다고 가정한다면 새로운 질서의 창조자는 법률과 도덕의 바깥에 존재하게 되며, 더구나 그는 인간이 본래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의 창조는 오로지 폭력에 의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구질서의 개혁 및 새로운 질서의 창조의 경우에 한하여 폭력은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는 완전히 자율적인 것이 된다.

그렇지만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폭력은 유용한 것만도 아니며 어느 때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폭력의 유용성은 근본적으로는 질서창조의 경우에 제한된다. 그리하여 새로운 질서가 이미 확립된 이후에는 폭력은 조심스럽게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것이 된다.

말하자면 폭력은 계산되어서 적용되어야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으로서, ‘폭

142) 김비환, 앞의 논문, p. 19에서 재인용; G. H. Sabine,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New York, Holt, Reinhart and Wistron Inc., 1961), p. 343.

력의 절약'이야말로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의도이자 그의 관심거리였던 것이다.¹⁴³⁾ 이제 마키아벨리적 폭력은 정치권력의 유지 및 공동선의 추구에 비추어서 제한되게 된다. 즉 폭력은 적시적소에 선택적으로 적용됨으로써만이 정치권력의 유지 및 공동선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해 행위는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한꺼번에 저질러야 한다. 그래야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를 두려워하거나 그에게 적의를 품은 자들에게 반감과 분노를 적게 야기한다. 반면에 현명한 군주는 더 오랫동안 효과가 있도록 시혜를 조금씩 베풀어야 한다.”¹⁴⁴⁾ 다시 말해 폭력은 의도적으로 다소 과격하게 일시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그 후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을 상황을 만들어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인자로운 평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마키아벨리에 있어 폭력에 의한 가혹한 지배는 국가의 통일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경우 폭력은 단 한 번의 가혹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계속됨으로써 폭력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폭력의 절약을 위하여 도리어 가혹한 폭력의 일시적인 사용은 바람직하기조차하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진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마키아벨리의 폭력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쓰인 폭력의 총합과 그 폭력사용의 결과로 얻어진 목적달성의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의 악덕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의 존망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는 오명과 같은 것도 상관치 말아야 한다. 그 까닭은 전반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비록

143) 김비환, 앞의 논문, p. 17에서 재인용. Sheldon, S. Wolin, *Politics and Vision*(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61), pp. 221-222.

144) 『군주론』, pp. 65-66.

미덕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행하여 가는 동안에 자기를 과멸로 몰아넣는 일이 있고, 한편 얼른 보아서 악덕과 같이 보이더라도 이것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안전과 번영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¹⁴⁵⁾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체사레 보르자는 그의 잔혹성이 로마니아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지방을 통일하여 평화와 충성을 약속받는 결과가 되었다. 여기에 잘 생각해보면, 피렌체 시민이 무도한 악명을 피하려고 끝내 피스토이아의 봉괴를 팔짱을 끼고 기다린 것에 비하여 보르자의 편이 훨씬 인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⁶⁾

마키아벨리의 위와 같은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아 미덕과 관대함으로 보이는 것이 장기적인 결과로 보면 악덕과 인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이며 가혹한 폭력이 단기적으로 보아 무자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자비롭다는 평을 들을 수가 있다. 여기에 마키아벨리 폭력론의 진수를 살펴볼 수 있다.

마키아벨리의 폭력론은 무절제적이며 무계획적인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최소의 양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주도면밀한 상인적 타산이 가해진 폭력인 것이다. 즉, 마키아벨리적 폭력은 무제한적으로 얼마든지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계산적 폭력’으로서 당시의 상인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 내지 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프루던스(사려, 思慮, prudence)라고 얘기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프루던스는 곧 계산능력으로서 흥망성쇠의 변화가 지배하는 동적인 세계에 대응하여 주어진 목적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실천

145) 『군주론』, p. 92.

146) 『군주론』, p. 95.

적 능력이다. 그리하여 마키아벨리는 사려 깊은 군주는 항상 변화하는 세계에 잘 대응하여 모든 환경적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폭력과 사기 및 책략 등은 사려에 종속되어 있는 수단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군주의 비르투는 분명히 국가를 건국하고 법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다. 그리고 국가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군주의 비르투가 인민의 비르투와 조화를 이루어 국가적 비르투가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로마사 논고』에서 마키아벨리가 ‘성체’¹⁴⁷⁾로 비유한 인민과의 단절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군주의 비르투는 군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비르투이다.

따라서 군주정을 확립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지만, 이미 확립된 국가에서 군주의 이런 비르투는 인민의 건강한 비르투가 국가 권력에 참여함을 제한하고 국가의 비르투를 저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민의 비르투에 기초한 공화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공화정의 대두가 군주의 비르투에 입각한 군주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공화정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인민의 비르투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우선 누마가 미친 종교적 경건성을 들 수 있다. 초기 로마인들은 종교적 경건성을 국가의 존엄성으로 환원하였기 때문에 매우 건강한 인민적 비르투를 갖출 수 있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런 종교적 경건성의 비르투는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용기의 정신을 가져온 근본적 비르투라고 할 수 있다.¹⁴⁸⁾

또한 마키아벨리는 청빈함과 용기, 자유, 정직성, 법률에 대한 복종이라는

147) 마키아벨리는 군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인민들의 호의가 필요하고, 적어도 신민들이 군주를 미워함으로써 인민과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Discourses on Livy*, pp. 185-190.; 『로마사 논고』, pp. 368-377, 『군주론』, pp. 76-77, 150-152 참고.

148) *Discourses on Livy*, pp. 34-35, 285-286.; 『로마사 논고』, pp. 118-119, 538-540 참고.

인민의 비르투를 제시한다. 청빈 혹은 가난함의 비르투는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로마공화국 팽창의 근본적인 이유이다. ‘국가는 부유하고 시민은 가난해야 한다’¹⁴⁹⁾고 주장하는 마키아벨리는 초기 로마의 예를 들면서, ‘가난이 로마 공화정의 명예와 승리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¹⁵⁰⁾

그는 초기 로마 인민들의 또 하나의 비르투로 용기를 들면서 그것을 로마 공화정이 거둔 전쟁에서의 승리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한다. 이런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면서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 제2권 17장 전체를 할애하여 당시 이탈리아의 군인들이 ‘대포와 같은 화기에 의존하여 용기를 상실하였음을 개탄’하고 있다.¹⁵¹⁾ 자유의 비르투는 로마가 위대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덕목이다. ‘인민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인민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의 영광이라는 비르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¹⁵²⁾

법률에 대한 복종 역시 중요한 인민의 비르투이다. 법에 명예롭게 복종하는 인민은 국가의 규율을 자랑스럽게 내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로마 인민들의 덕목은 국가적 질서를 확립하는 기초’가 된다.¹⁵³⁾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인민이 갖춘 비르투로 정직성의 덕목을 제시한다. 그는 ‘로마 초기 인민들과 당시 독일 인민들의 정직성이 부패로부터 나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⁵⁴⁾

이러한 다양한 인민의 비르투가 있었기에 로마의 공화정은 건강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마키아벨리의 이런 주장은 공화정 체제에서 인민의 비르투가 군주의 비르투를 극복하면서 국가적 영광, 즉 국가적 비르투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난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인

149) *Discourses on Livy*, pp. 78-79.; 『로마사 논고』, p. 190.

150) *Discourses on Livy*, pp. 271-272, 『로마사 논고』, pp. 515-517.

151) *Discourses on Livy*, pp. 160, 163-168.; 『로마사 논고』, pp. 325, 330-339.

152) *Discourses on Livy*, pp. 16-17, 46-47.; 『로마사 논고』, p. 87, 137-138.

153) *Discourses on Livy*, pp. 116-118.; 『로마사 논고』, pp. 248-250.

154) *Discourses on Livy*, pp. 109-111.; 『로마사 논고』, pp. 238-240.

민의 이러한 덕성들은 항상 처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 초기 공화정 체와는 달리, 전쟁에서의 지속적인 승리와 새로운 토지의 획득은 부를 특정 인민들에게 집중시켜 불평등을 초래하였고,¹⁵⁵⁾ 인민들은 이러한 불평등 아래에서 공화정의 가장 근본적인 비르투를 상실하게 된다.¹⁵⁶⁾ 그것은 곧 공화정의 부패와 타락으로 연결된다. 또한 기독교의 등장은 인민들의 인간적이고 능동적인 비르투를 수동적인 비르투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공화정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로마 공화정의 파멸을 가져왔다.¹⁵⁷⁾

군주의 비르투나 인민의 비르투는 분명히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들이 단절되어 있다면, 국가의 지속적이고 위대한 비르투는 존재할 수 없다. 오히려 국가의 비르투 안에서 두 요소가 상호결합하는 경우에 국가의 비르투는 더욱 확장될 수 있고, 군주와 인민의 비르투도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마키아벨리의 혼합 정치체에서는 두 상반된 비르투의 결합과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혼합 정치체로서의 국가의 비르투는 어떤 것이며, 그것이 군주와 인민의 비르투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비르투로 종합되는가에 대해 고찰해보자.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궁극적이고 결과적인 비르투로 국가적 영광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⁸⁾ 그가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의 비르투에 해당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삼았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내가 이전에 확장을 위한 체제정비와 현상유지를 위한 체제정비의 차이를 논했을 때 말한 바와 같이(제1권 제6장), 공화국이 그 좁은 경계 안에 멈추어 있으면

155) *Discourses on Livy*, pp. 19-20.; 『로마사 논고』, pp. 91-92.

156) 부패의 시작은 비르투의 상실이나 흩어짐이라고 할 수 있다. 스키너, 앞의 책, p. 98.

157) *Discourses on Livy*, pp. 129-133.; 『로마사 논고』, pp. 271-279 참고.

158) 스키너는 자유를 한 국가와 인민이 도달한 최고의 단계로 보고 있다. 스키너, 앞의 책, pp. 89-99.

서 자유를 누리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공화국이 다른 국가들을 괴롭히지 않더라도 괴롭힘을 당하게 마련이며, 이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데서 팽창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만약 공화국 외부에 적이 없다면, 위대한 국가들에서 늘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이듯, 국내에서 적을 발견하게 된다.¹⁵⁹⁾

위와 같은 마키아벨리의 주장은 지속적인 제국의 팽창을 통한 국가적 자유와 인민적 자유가 실현된 상태이다.¹⁶⁰⁾ 마키아벨리가 볼 때 혼합 정치체로서의 로마 공화정은 이런 단계에 도달한 역사적 현실이다. 그렇다면 로마 공화정이 가졌던 비르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현실 정치체로서의 로마 공화정의 비르투는 완벽한 도덕 정치체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그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현실적 인민으로부터 국가의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실적 인민들이 이익 추구의 존재라는 사실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로마 공화정이 도덕적이고 관념적 공동체로서의 완전성에 이른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로마 공화정은 그 스스로 욕망을 가진 하나의 조직체로 인민의 자유와 함께 국가적 자유를 지향하며 꾸준히 팽창하는 국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공화국도 불가피하게 속임수를 사용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점은 더욱 분명해 진다.¹⁶¹⁾

아울러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 폭력을 승인하고 있고, 나아가 공동체의 혁신을 위한 비합법적 폭력까지도 국가적 비르투로 인식하고 있다. 법에 의한 처형과 같은 합법적 폭력,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혁신과 개혁을 위한 인민의 봉기, 창조적이고 개혁적인 군주에 의한 비합법적 폭력까지도 국가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

159) *Discourses on Livy*, pp. 173-174.; 『로마사 논고』, pp. 347-348.

160) 스키너, 앞의 책, pp. 93-94.

161) *Discourses on Livy*, pp. 155-156.; 『로마사 논고』, pp. 317-318.

단으로 채택된다. 강력한 군사력, 두려움을 전제한 강력한 법률, 국가의 전략적 기만, 무질서와 잘못된 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물리적 폭력까지도 국가의 비르투로 여기고 있다.

혼합 정치체로서의 로마 공화정 안에서 군주적 비르투와 인민적 비르투가 만나서 충돌과 대립을 통해 종합되는 것이다. 군주적 비르투와 인민적 비르투가 각각 국가적 비르투와 결합하기도 하지만, 군주적 비르투와 인민적 비르투의 변증법적 결합 가능성은 혼합 정치체인 로마 공화정이 지향하는 비르투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보다 쉽게 열린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운명이 부여하는 다양한 역경을 극복하고 제국의 영광이라는 궁극적 비르투를 달성하기 위해 혼합 정치체로서의 로마 공화정은 군주의 비르투와 인민의 비르투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나아가 군사력, 법률 등과 같은 탈도덕적인 요소들이 그것에 가져오는 결과에 의해 비르투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군주와 인민의 상반된 비르투가 단순히 평행적인 대립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 상황에 따라 상호간의 비르투를 보완하면서 로마 공화정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2.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등장배경과 의미

1)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기원과 전개과정

공화주의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나 로마 공화정과 같은 자유국가(free state)를 이상향으로 하는 정치사상이다.¹⁶²⁾ 자유국가를 추구하는 고전적인 공화주의 이론은 내적 분열이나 외부로부터의 침략, 그리고 폭군에 의하여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유국가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¹⁶³⁾

공화주의적인 사상가들에게는 자유를 보전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덕성이 무엇이며 이와 더불어 공화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사회는 어떠한 구조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58개의 그리스 도시국가의 헌법을 연구하여 시민들 사이에 나타나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투쟁의 주요한 근원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의하면 당시 일부 도시는 부를 과점하고자 하는 이들이 억압적인 과두제를 옹호하고, 부의 균등한 분배를 원하는 이들이 가진 자의 부를 몰수하려 했던 관계로 외부의 침략에 쉽게 공략당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적인 자영농을 근간으로 하는 중산계층의 폭을 넓히고 과두정과 민주정이라는 극단을 피하게 되면 시민들 간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찬양하는 혼합 민주정이다.

2세기 무렵 로마에 온 그리스의 저술가 폴리비우스는 로마사를 기술하면서 로마의 헌법을 찬양하였다. 그는 기원전 2세기에 로마의 공화정이 성공한 것을 고려하여 혼합헌정에 대한 사고를 대중화시켰다. 그에 따르면 서로 다른

162) Margaret Canovan, "Republicanism," in Seymour Lipset(ed.), *The Encyclopedia of Democracy*(Washington, D. 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95), Vol. III, p. 1058.

163) Margaret Canovan, *op. cit.*, p. 1058.

정부형태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정부의 형태로서는 도시국가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로마가 이러한 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헌법에는 군주제적, 귀족제적 그리고 민주제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가 순수한 형태의 정체가 가질 수 없는 장점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로마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도 로마 시민이 덕성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치체제가 혼합정이었기 때문이다. 즉, 군주와 귀족적인 상원, 그리고 민주적인 민회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1세기에 셸루스트(Sallust)는 당대에 일어난 부패를 개탄하며 오히려 공화정의 초기에서 본받을 것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화정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에서는 정체와 더불어 덕성에 대한 고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민들이 권력을 공유했던 고대의 공화정은 내부의 분열이나 참주,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정복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과 안정을 유지하여 자치를 하였는데, 이는 시민의 연대와 용기, 특히 도시를 위해 개인의 사익과 생명조차도 희생하는 시민의 자발성 덕분이었다. 스파르타의 전사시민은 시민적인 덕성의 모범으로 여겨졌고, 용감하고 강인하며 동료와 전적으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혹독하고 격렬한 기율로 훈련을 받았다. 스파르타가 오랫동안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기풍에 힘입은 바 크다.

고대에는 외부 침략으로부터의 방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덕성은 남성 시민이 가진 특성을 의미했으며, 그것은 전적으로 군사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해 훌륭한 전사와 군대를 만드는 용기, 강인, 충성 그리고 연대를 의미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덕성을 갖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해야 하지만, 부를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였다. 사치스런 생활은 혹독한 군사훈련을 견디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 시민들 간에 불화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물질적인 소유와 사적인 부에 집착하게 되면, 공공선에 대한 인식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중세에 공화주의가 전개된 바를 살펴보면, 12세기까지의 사회정치상황은 공화정이라는 국가 형태에 필요한 구조를 제공하지 못했다. 중세에는 자유롭지 못한 농민들이 봉건적인 소유지에 속하였으며 소규모의 마을들은 사실상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12세기와 13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민족국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에는 왕권과 봉건적인 귀족 및 승려, 그리고 대두하는 시민계급이 서로 정치적인 투쟁을 벌이는 군주제였다.

당시에는 발언권이 없는 대다수의 평민과 달리 공통의 정치적 이해를 가진 소규모의 지방 단위들은 봉건적인 귀족과 왕권으로부터 독립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교역과 상업의 중심이었던 중세의 도시에서는 공화주의 정신이 발현되고, 공화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다. 방어에 적합하거나 육상·해상 교통의 요지였던 이탈리아, 플랑드르 그리고 독일의 중세 도시는 독립적인 도시 국가의 모습을 띠었고, 스스로를 코뮌(commune)이라고 불렀다. 코뮌은 ‘함께 모인다’라는 뜻의 중세 라틴어 ‘communia’를 어원으로 하며, 공동생활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을 의미했다.

코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의 베니스, 제노아, 밀란, 피사 그리고 플로렌스, 플랑더의 겐트, 브루게 그리고 안트워프, 독일의 한자 도시동맹, 햄부르크, 뤼벡 그리고 로스톡크, 러시아의 노브고로드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공화국이 최고의 권력과 번영을 누린 것은 13세기와 16세기 사이였다. 셀루스트, 키케로와 같은 로마의 저술가에 의하면, 중세의 도시국가를 옹호하는 자들은 불편부당한 정의를 구현하는 자유국가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시민 간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¹⁶⁴⁾

164) *Ibid.*, p. 1059.

중세의 공화정 중에서 가장 안정된 곳은 베니스였다. 과두제였던 베니스에서는 효율적인 정부를 유지하고 시민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침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였으며 강력한 함대를 가지고 있어 동부 지중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업과 해운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듯 상업과 제조업의 발달로 도시공화정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봉건사회가 해체되었다. 새로운 경제가 태동하게 되자 코문은 쇠퇴하였다. 게다가 15, 16세기에 일어났던 위대한 발견과 발명으로 해외교역이 확장되었으며, 유럽 전역에 걸쳐 제조업과 산업이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문명의 중심지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정치경제활동에 있어 지방의 중심지는 보다 큰 지역적 단위로 흡수되었다.

16세기 말 무렵 도시공화국은 몇몇은 자유 도시로 존속하였지만 대부분은 내부의 분열로 인해 쇠퇴 과정이 가속화되면서 사실상 독립을 상실하였다. 점차 국민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작은 규모의 공화국만이 지속될 수 있었는데, 스위스 연맹(league)이 바로 그 예이다. 스위스 연맹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였던 관계로 불평등과 이해의 갈등을 보다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고대 말기에서 르네상스기에 이르면서 덕성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은 약화되었다. 로마의 도덕가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도덕적인 사고를 지배한 것은 기독교 교회였다. 기독교는 세속적인 영광보다 내세에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공화주의를 포함한 고대의 문명을 재발견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을 때, 마키아벨리는 기독교가 시민의 덕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였다.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덕성(virtue)은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신의 섭리에 순종하기보다는 운명(fortune)을 거역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세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결단이었다. 그는 저서 『로마사 논고』에서 기독교와

고대 로마의 종교를 대비시키며 로마의 종교는 국가를 지탱하는 시민적인 종교라고 본 반면, 기독교는 국가의 위기에 대처할 어떠한 정책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고대 로마의 종교는 승리를 이끄는 장군과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용맹성을 떨치는 군인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에 의하면 로마 공화정이 자유국가로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적 토대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 제2권 30장에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는 곳에서 운명은 자신의 힘을 거침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 공화국과 국가는 고대의 모범을 터득하고 탁월하게 본받는 지도자가 출현하여 운명이 자신의 영향력이나 권능을 발휘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정도로 운명을 잘 다스리지 않는 한 항상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¹⁶⁵⁾ “로마의 힘은 무장된 인민에 기초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⁶⁶⁾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군대를 갖지 못한 군주나 공화국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현존하는 군주나 오늘날의 공화국이 방어와 공격을 위해 자국민으로 구성된 군대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크게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하며, 만약 사람이 있는 곳에 군인이 없다면 그 원인은 군주의 결함이지 나라의 지리적인 또는 자연적인 결함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호국을 위해서 공공정신이 함양된 시민군의 존재가 필수적임을 역설하고 있다.¹⁶⁷⁾

피렌체 공화국이 약체인 가장 중요한 이유도 피렌체 공화국이 시민들을 무장시키지 않은 데 있었다. 피렌체 공화국은 당시 이탈리아의 여느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시민군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용병대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피렌체 공화국의 힘은 사람이 아니라 돈에 있었고, 도시 경제력의 근거지인 본토가 침공당할 경우 전쟁을 오래 수행할 수 없었다.

165) *Discourses on Livy*, p. 202.; 『로마사 논고』, p. 398.

166) *Discourses on Livy*, p. 201.; 『로마사 논고』, p. 397.

167) *Discourses on Livy*, pp. 54-55.; 『로마사 논고』, pp. 150-151.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논고』 제2권 20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는 『군주론』에서 용병 제도에 관해 이미 상세히 논한 바 있다. 따라서 그는 『로마사 논고』에서는 용병 제도에 관해 비교적 간략하게 다룬다.¹⁶⁸⁾

용병(mercenary soldier)이란 돈으로 고용되는 직업 군인을 의미한다.¹⁶⁹⁾ 이러한 용병들로 이루어진 군대, 즉 용병대가 갖는 첫 번째 문제점은 용병대가 그들을 고용한 군주 혹은 공화국의 정치적 권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권위로부터 독립된 무력이 갖는 위험은 외국 원군(auxiliary army)의 경우에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 제2권 20장에서 외국 원군의 도움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외국 원군은 그것을 파견한 외국 정부의 정치적 권위 아래 있는 반면 그것을 고용한 정부의 정치적 권위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다는 점을 든다.¹⁷⁰⁾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적과 불리한 조건으로 타협하더라도 자국 군대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책이라고 말한다.¹⁷¹⁾ 이와 같이 그것을 고용한 정부의 정치적 권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용병대도 외국 군대와 마찬가지로 다르다. 용병대는 그들을 고용한 정부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경제적 고려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용병대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고용한 정부의 정치적 고려에 반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역시 외국 군대 못지않게 위험한 존재이다.

더욱이 용병대는 기병을 중시하고 보병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진다. 이는 용병대가 이탈리아 각 도시들의 군사력의 전반적인 약화를

168) *Discourses on Livy*, p. 175.; 『로마사 논고』, p. 352

169) 박상섭 교수는 용병으로 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든다. 즉 ‘첫째, 전투를 전문직업으로 하며, 둘째, 전투에의 참가가 어떤 공동체의 성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셋째, 순전히 물질 보상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박상섭, 『근대 국가와 전쟁』 (서울: 나남, 2002), p. 58.

170) *Discourses on Livy*, p. 174.; 『로마사 논고』, p. 353.

171) *Discourses on Livy*, p. 176.; 『로마사 논고』, p. 354.

초래한 원인이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군대에서 전투력의 중심은 보병대에 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제2권 18장에서 소라(Sora)에서 로마군단이 잘 훈련된 보병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이탈리아의 군사전략을 비판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외국 세력의 노예로 만든 이탈리아 군주들의 죄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보병을 경시하고 기병의 운용에만 몰두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은 한편으로는 장군들의 음모와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의 무지 때문에 발생했다.¹⁷²⁾

어떤 군대가 잘 훈련된 보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잘 훈련된 보병을 가지고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군대가 패배하는 것은 명백하다.¹⁷³⁾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로마인들의 권위와 고대 군대의 선례를 따라서, 기병보다도 보병이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기 위해 로마의 보병 훈련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병은 말이 갈 수 없는 많은 장소를 걸어서 갈 수 있다. 보병은 대형을 유지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고, 만약 대형이 흩어지면 다시 진형을 만들도록 훈련받을 수 있다. ... 훌륭한 보병은 쉽게 기병을 물리칠 수 있고 또 기병에서 좀처럼 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견은 고금의 많은 사례는 물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법칙을 발견한 자들의 권위에 의해서도 증명된다.¹⁷⁴⁾

172) *Discourses on Livy*, p. 171.; 『로마사 논고』, p. 341

173) *Discourses on Livy*, p. 171.; 『로마사 논고』, p. 344.

174) *Discourses on Livy*, p. 169.; 『로마사 논고』, p. 340

마키아벨리는 당시 부유한 도시였던 피렌체와 베네치아가 가지고 있었던 부는 전쟁의 관건이라는 신념을 자기기만이라고 지적하며,¹⁷⁵⁾ 자신들의 부유함을 믿고 군사적 약체성을 면치 못하였다고 날카롭게 비판한다.¹⁷⁶⁾ 마키아벨리는 전쟁의 관건은 부(富)가 아니라 군인의 역량이며, 부(富)로는 군인의 역량을 살 수 없지만 부(富)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자국의 인민을 무장시키기 꺼려하는 이탈리아의 군주들과 공화국들을 비판한다. 그들이 자국의 인민을 무장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장하지 않은 인민을 보다 손쉽게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장한 인민은 부당한 통치에 집단적으로 항거할 수 있었고, 이들의 집단행동은 혼란을 초래함과 아울러 군주와 지도자들의 안정적인 지배를 위협할 수 있었다. 이를 두려워한 이탈리아의 군주들과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인민을 무장 해제시켜 둔 상태에서 서슴없이 학정(虐政)을 저질렀던 것이다.¹⁷⁷⁾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이탈리아 각 도시들의 안일한 정치를 용감한 시민군을 양성했던 로마의 훌륭한 정치와 대비시켜 비판하고 있다.

또한 로마의 경우 귀족에 대항하여 평민의 이익을 옹호한 민회(tribune)가 공화정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보았다. 귀족적인 상원과 평민 사이에 균형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화국은 강력할 수 있었으며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평민의 지나친 권력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마키아벨리는 귀족과 평민 사이의 갈등이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하면서 시민의 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175) *Discourses on Livy*, p. 173.; 『로마사 논고』, p. 349.

176) 나아가 이들 도시는 적대적인 인접 도시들에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간신히 평화를 유지하는 비겁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는 영국과 스위스에 금품을 바쳐야만 했던 프랑스 왕국도 마찬가지였다. *Discourses on Livy*, pp. 200-201.; 『로마사 논고』, pp. 394-395.

177) *Discourses on Livy*, pp. 200-201.; 『로마사 논고』, p. 396.

게다가 그토록 많은 명예로운 처신으로 가득 찬 공화국을 놓고 무질서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토록 좋은 모범적 처신은 좋은 교육에, 좋은 교육은 좋은 법률에, 좋은 법률은 많은 이들이 무분별하게 규탄하던 평민의 파벌과 부자의 파벌의 대립과 불화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 결과를 엄밀히 검토한 자라면 누구나 그러한 대립이 공공선에 유해한 추방이나 폭력보다는 공공의 자유에 도움이 되는 법률과 제도를 생산해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⁷⁸⁾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공화정이 성립하려면 시민이 덕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시민 모두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서도 덕성을 찾기 어려웠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외침과 내부의 분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국가를 보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바로 ‘비르투’(virtue)를 갖춘 군주이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비르투’는 운명에 맞서는 군주의 탁월한 능력을 의미하는 동시에 시민의 덕성을 모두 포함한다. 나아가 군주와 인민의 능력이 결합된 상태로서의 국가적 힘과 법률 제도, 그리고 그것이 결과하는 국가적 영광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⁷⁹⁾ 공동체에 닥쳐올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사려 깊은 법률 제도의 정착, 군주가 가진 남성적 결단력, 국가가 보유하는 군사력까지 모두 ‘비르투’라는 하나의 용어로 표현 가능하다.¹⁸⁰⁾

마키아벨리는 주어진 운명에 맞서 군주의 정치적 자질과 인민의 정치적 덕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국가의 덕성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았다.¹⁸¹⁾ 그

178) *Discourses on Livy*, I-4-1, p. 16.; 『로마사 논고』, pp. 85-86.

179) 강용학, “마키아벨리의 혼합정체론과 순환역사관에 기초한 군주정과 공화정의 이중성 검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0), p. 27.

180) 켈턴 스키너 저, 신현승 역, 위의 책, pp. 100-109.

181) 위의 책, pp. 93-94.

의 저서 『군주론』 과 『로마사 논고』 를 살펴보면 마키아벨리가 군주의 ‘비르투’와 인민의 ‘비르투’가 혼합 정치체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국가적 ‘비르투’가 되는지 고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공화주의의 시민적 덕성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공화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중세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르네상스기에 이르러 마키아벨리에 의해 재조명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위기의 이탈리아 정치상황을 타개하는 데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였고, 근·현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의미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시민성(citizenship)은 곧 시민적 덕성(civil virtue)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덕’(virtù)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virtù’, ‘virtuoso’, ‘virtus’¹⁸²⁾를 이은 ‘virtù’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고대 그리스 및 당대의 저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르투’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비르투’는 ‘악덕’(visio, vice)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미덕’(virtue)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사례는 『군주론』 제15장과 제16장에서 발견된다. 복수인 ‘le virtù’는 통상 ‘좋은 성품들’ 또는 ‘미덕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미들, 즉 역량, 능력(ability), 기술(skill), 활력(energy), 결단력(determination), 힘(strength), 기백(spiritedness), 용기(courage), 용감함(prowess)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역자들은 맥락에 따라 ‘비르투’를 각각 다르게 번역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역량’이라고 번역된다.

한편, ‘비르투’는 군사적인 맥락에서 사용될 때 ‘용감함’, ‘용기’, ‘용맹’, 또는 ‘무훈’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지배자는 ‘비르투’가 지칭하는 다양한 성품들을 결여할 때 권위를 잃고 경멸을 받게 된다. ‘비르투’가 지칭하는 대부분의 성품들은 남성이 갖추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비르투’라는 단어가 ‘남성’(man)을 의미하는 ‘vir’에서 유래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대에 이르러 공화주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몇몇 학자들의 대표적 분류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¹⁸³⁾

182) 이 단어는 ‘남성(man)’을 의미하는 vir에서 유래한다.

183) 신로마 공화주의(neo-Roman republicanism)론을 제시하고 있는 공화주의자 필립 페팅은 공

이졸트 호노한(Iseult Honohan)은 공화주의를 크게 도구적 공화주의(instrumental republicanism)와 강한 공화주의(strong republicanism)로 분류한다.¹⁸⁴⁾ 그에 의하면 도구적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성이 주요한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활동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강한 공화주의는 자기 통치(self-government)에의 참여와 시민들에 의한 공공선의 실현이 함축하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한편, 벡손(S. Besson)과 마르티(Jose Luis Marti)는 공화주의 사상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파악한다. 첫째는 로마적 기원의 결과로서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가까운 유형이다. 둘째는 정치참여를 통해 시민의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과 유사한 유형이다. 셋째는 공동체주의와 가까운 유형, 혹은 정치적 평등이라는 핵심 가치를 옹호하는 사회주의와 가까운 유형이다.¹⁸⁵⁾

또한, 곽준혁은 공화주의 내부의 대립은 최소한 두 가지 전통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¹⁸⁶⁾ 첫 번째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 체제를 적용한 시민적 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이다. 여기에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즉 시민적 덕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전통은 로마 공화국으로부터 공화주의 전통을 찾는 자유주의적 공화주의(liberal republicanism)이다. 이는 르네상스 시민적 인문주의(civic humanism)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다른 한편 김리카(W. Kymlicaka)는 현대의 시민적 공화주의에는 두 개의 진영이 있다고 주장한다.¹⁸⁷⁾ 하나는 적극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은 가장 고차원적

화주의의 이상이 다양한 집단과 운동에 따라 주장되면서 역사적·이론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화주의가 발전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Philip Pettit, *Republicanism*(Oxford: Oxford Univ. Press, 1999), pp. 130-146 참고.

184) Iseult Honohan, *Civic Republicanism*(New York: Routledge, 2002), p. 147.

185) 조일수,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연구 - 아테네적 전통과 로마적 전통의 차이를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80호(한국윤리학회, 2009), p. 295에서 재인용; S. Besson & Jose Luis Marti eds., *Legal Republicanism*(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9), pp. 8-9.

186) 곽준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 체제의 두 가지 원칙,” 『한국정치학회보』 39집 1호(2005), pp. 41-42.

인 삶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참여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거부하면서, 민주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요청을 도구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해석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공화주의 이론에 대한 제반 논의는 일반적으로 정치참여와 시민성에 본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유형과, 시민성을 현실 생활과 연관된 수단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고대 아테네와 로마 시대라는 고대 이후의 이상적인 시민성을 논의한 포각의 주장과 비교적 일치한다.¹⁸⁸⁾ 그에 의하면 고대 아테네에서의 이상적 시민성은 정치참여를 통해서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성하게 되며, 고대 로마에서의 이상적 시민성은 물질의 소유와 법률의 실행을 통해 시민성이 발휘되는 정치실천적인 것이다. 이처럼 이상적 시민성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아테네적 전통의 공화주의와 로마적 전통의 공화주의로 분류하는 것도 일견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⁹⁾

187) 김리카 저·장동진 외 3인 역, 『현대 정치 철학의 이해』 (서울: 서광사, 2006), pp. 409-410.

188) 조일수, 앞의 논문, p. 296에서 재인용; J. G. A. Pocock, "The Ideal of Citizenship since Classical Times," in G. Shafir(ed.), *The Citizenship Debates*(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98).

189) 조일수, 앞의 논문, pp. 295-296 참고.

3.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특징과 의의

1) 공화주의 시민성의 특징

공화주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제시하는 요소나 강조점이 다르다. 따라서 공화주의 시민성의 공통된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공화주의 정치 풍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시민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⁹⁰⁾

① 공공선 중시

공화주의에서의 시민은 정치적 삶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시민들은 정치 공동체의 일을 자신의 일과 동일시하고, 정치 공동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최고선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공화주의에서의 시민은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공공선을 중시한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자아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로마사 논고』에서 마키아벨리는 로마 시민의 예를 들며 시민적 덕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공동체에의 참여와 관련된 사익은 법의 지배를 중시하며 언급되는 개인의 이익이다. 그는 결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익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것을 자유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사익이란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이익, 곧 계몽된 사익(enlightened self-interest)이라고 할 수 있다.¹⁹¹⁾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정직하게

190) 이진희, “공화주의 시민성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제75호(2005), pp. 47-48.

추구하되, 항상 공동체의 질서와 규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도시의 위대함이 공공선의 추구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공공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공동체와 분리된 이기적인 태도는 결코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없을뿐더러 공동체의 도덕적·정치적 와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개별적인 선(善)이 아니라 공공선이다. 오늘날 이러한 공공선은 의심할 바 없이 공화국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공화국에서는 공공선을 증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실행하기 때문이다. 공화국은 비록 소수 시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공공선의 추구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인 관계로 소수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다.¹⁹²⁾

마키아벨리가 상정하는 이익은 의무와 동일 선상에 있다. 시민은 법에 따른 삶을 살면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여러 갈등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시민적 삶의 필수조건인 법의 지배와 공공선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공공의 자유를 돕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공선과 조국(patria)이 같다고 주장하였다.¹⁹³⁾ 공공선은 법과 치환가능하며 논리상 법과 조국은 같다는 의미이다.

자유로운 공화국은 시민의 사익을 만족시키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자유로운 법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시민 참여를 필요로 하는 까닭에 적극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의 개념이 요청

191) P. Carrese, "Defending Machiavelli and Opposing Machiavellism," *The Review of Politics*, Vol. 63, No. 3, 2001, p. 605.

192) *Discourses on Livy*, II-2-1, pp. 129-130.; 『로마사 논고』, pp. 271-272.

193) *Discourses on Livy*, p. 156.; 『로마사 논고』, pp. 245-246.

된다.¹⁹⁴⁾

② 법에 의한 통치 중시

고전적 공화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강조한다. 특히 마키아벨리는 자유 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함에 있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임을 로마 건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 그 도시에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로마 공화국이 겪어온 여정이 매우 잘 보여준다. 많은 법률들이 처음에는 로물루스, 나중에는 누마, 툴루스 호스틸리우스, 세르비우스, 더 나아가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10인회에 의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운영을 위해 늘 새로운 요구들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감찰관 제도를 신설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법률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관직은 로마에서 자유가 존속하던 시대에는 로마에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 중 하나였다. 로마의 풍속을 단속하던 감찰관직은 로마에서 부패의 만연을 지연시킨 강력한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¹⁹⁵⁾

마키아벨리는 자유를 누리하고자 한다면 그 다양한 방법만큼이나 다양하고도 철저하며 견고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를 위한 최상의 가치로 법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법과 자유를 하나의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성취하

194) B. Crick,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Vol. 55. No. 3, 2007, pp. 244-247.

195) *Discourses on Livy*, I-49-1, p. 100.; 『로마사 논고』, pp. 221-222.

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시민의 자유가 법에 의존해 있을 때, 그만큼 시민의 자유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⁹⁶⁾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방해하지 않는 간섭은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들은 간섭에 종속될 수 있으나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비임의적인 간섭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지배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목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간섭들은 강한 법, 적합하게 구성된 제도들, 탄력적인 방식에서 구체화하는 이념들을 통해 자유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¹⁹⁷⁾

공화주의의 자유는 ‘보호’를 위한 핵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 보호는 개인들이 비지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려는 목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임의적인 간섭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응하고 반응하고 행동할 때 경험하였던 불가피한 불확실성, 염려, 종속의 공포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⁹⁸⁾ 페티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행위자들은 타인들로부터 어떤 임의적인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한편 스킨너에 의하면 국가가 자유롭지 않고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자유에 관심을 가졌고, 개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행사하는데 제약받지 않을 때 자유롭다. 즉 자유로운 국가는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¹⁹⁹⁾ 마키아벨리도 『로마사 논고』에서 자유도시는 그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지배되는 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⁰⁰⁾

196) 신호재, 앞의 논문, p. 44.

197) Philip Pettit, *op. cit.*, p. 23.

198) *Ibid.*, p. 90.

199) 최준화, “자유 개념에 대한 비판적 연구: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0), p. 114.

아울러 마키아벨리에게 법은 시민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법이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사회화와 교화 및 질서유지 등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법의 사회적 기능은 시민으로 하여금 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었고, 국가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훌륭한 관습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부패를 막고 공익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²⁰⁰⁾

로마는 자유를 법의 수호와 동일시하였다. 키케로에 의하면 대중은 법적 합의를 통해서 조직된 공동체이다.²⁰²⁾ 마키아벨리도 같은 맥락에서 보았다. 법은 시민 개개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자유를 신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부패와 타락을 막아주며 나아가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화주의적 법치주의에 따르면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은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로마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힘이 아닌 법을 따른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잘 정비된 공화국에서는 ...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는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따라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상을 내리고, 동일한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지르면 그의 공적과 상관없이 벌을 내린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잘 준수될 때, 도시는 오랫동안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시는 곧 멸망할 것이다. 자신의 훌륭한 행위가 가져온 명성에 만족하지 않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함부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너무 오만해져 모든 자유로운 정부의 기강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기

200) *Discourses on Livy*, p. 7.; 『로마사 논고』, p. 70.

201) 김종범, “군주론과 로마사논고에 나타난 마키아벨리의 근대국가 개념의 차이성 및 동질성 연구,” 『이탈리아어문학』 제14집(2004), pp. 65-66.

202) 박명림·김상봉, 『다음 국가를 말하다』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1), pp. 23-25.

때문이다.²⁰³⁾

따라서 시민의 평등에 위협을 가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법으로써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가 감찰관 제도에 의해 부패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듯이, 개별 시민의 이기적인 욕망은 공동체에 대단히 해로우므로 제재가 필요하다.

마키아벨리는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는 법은 필연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법은 어느 특정한 인물 혹은 계층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주조차도 이 법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로마 공화정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법을 존중하는 공동체 그 자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고찰할 때 법의 지배에 대한 강조는 필수적이다. 이는 어떤 개인도 법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당하지 않는다는 로마법 이래의 기본 원칙이다. 키케로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자유롭기 위해 법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에 의해서만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자의적인 권력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고전적인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공정한 법 집행이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이러한 신념을 강하게 표출했다. 제1권 29장에서 법집행자들도 두려워하는 시민, 또는 법을 제 멋대로 위반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시민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국가 전체는 더 이상 자유로운 국가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고 기술했다.

203) *Discourses on Livy*, I-24-1, p. 59. 『로마사 논고』, p. 156.

③ 시민적 덕성 함양 중시

시민적 덕성은 공화주의 사상의 핵심 개념으로 로마 초기에는 군인이자 남성의 용맹·능력 등을 지시하는 말이었다가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그리스 철학을 수용하게 되면서 도덕적·윤리적 덕성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웅과 군인의 덕목 외에 정치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²⁰⁴⁾

마키아벨리는 군주국이나 공화국이 번영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시민 모두가 비르투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현명하게 통치하는 1인의 지도자라는 우연적 요소뿐만 아니라 현명한 지도자가 대중의 비르투를 분발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창설한 훌륭한 제도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⁰⁵⁾ 그는 시민적 덕성을 시민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동시에 그러한 참여를 통해 함양되는 양면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²⁰⁶⁾

이처럼 공화주의에서의 시민은 정치 공동체의 유지와 발달을 위해 준법정신, 이기주의 절제 등 시민적 덕목의 함양을 중시한다. 아울러 이러한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마키아벨리 당대의 이탈리아인들은 법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고 시민들 상호간의 약속도 쉽게 배반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시민적 덕성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말해 준다. 마키아벨리는 이와 같이 이탈리아인들이 시민적 덕성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종교에 대한 경외심을 잃었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당시 종교의 우두머리격인 로마 교황청의 부패와 타락은 이탈리아인들로

204) 김경희, 앞의 책, p. 11.

205) *Discourses on Livy*, pp. 29-30.; 『로마사 논고』, pp. 107-108.

206) 이미순, “공화주의 사상의 민주시민 교육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 43.

하여금 종교에 대한 환멸을 부추기기에 충분했다.²⁰⁷⁾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당대의 이탈리아인들이 시민적 덕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단지 기독교와 교회의 부패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차이도 시민적 덕성의 함양과 상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적 덕성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는 ‘부패’(corruption)가 억제되거나 혹은 만연하게 되는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에 대해 논하는데 이것은 그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독일의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에 대해 논평하는 가운데 분명해진다.

마키아벨리는 인민의 정신이 부패한 곳에서는 자유로운 공화국이 성립되고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았다. 그는 ‘부패’의 개념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인 언급들을 통해 추론해 볼 때, 자유에 대한 의지의 상실 혹은 약화, 또는 자유보다는 다른 가치, 예컨대 부나 쾌락 등을 우선시하기에 후자가 충족되면 전자가 억압되더라도 만족하는 정신적 상태를 부패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⁸⁾

마카아벨리는 시민이 부패한 사례로 10인회(Decemvirate)의 지도자로서 로마 공화국의 참주가 되고자 했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매수된 로마 청년들을 들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아피우스를 따르던 청년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10인회 사건에서 인간이란 아무리 훌륭한 양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우 쉽게 매수되어 전적으로 다른 성격을 보여주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이

207) *Discourses on Livy*, pp. 129-133.; 『로마사 논고』 pp. 273-279.

208)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식민지 근대화론’ 또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정신적 부패의 소치가 아닐까 한다. 사회경제적 근대화라는 결과가 정치적 자유가 철저히 박탈된 과정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를 강조하며 후자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피우스를 따르던 로마 청년들의 가치우선순위와 동일한 것이다. 이영재, 위의 학위 논문에서 재인용; 김홍우, “한국사회과학의 위기와 정치적 사유의 재발견,” 『서양 정치사상 강의(고대 편)』(서울: 서울대학교 강의 교재, 2001), pp. 7-10.

는 아피우스가 자신의 주위로 끌어들이는 일단의 젊은 추종자들이 약간의 이득을 얻게 되자 참주정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데서 ... 확인된다.²⁰⁹⁾

즉 이들은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법의 지배 하에서 모두가 함께 누릴 자유(liberty)를 포기했던 것이다. 이것은 시민적 덕성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패한 인민은 자유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예속 상태를 받아들인다. 이들은 법을 어기는 특권층에 대해서도 분개할 줄 모르며 외국의 내정 간섭이나 지배에 대해서도 저항할 줄 모른다. 또한 공공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사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법을 어기고자 한다. 이들은 군주국의 예속적인 신민이 될 수는 있어도 공화국의 자율적인 시민은 될 수 없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부패가 당시 이탈리아에 만연해있다고 보았다. 특히 나폴리 왕국, 로마 지방, 로마냐, 그리고 롬바르디아가 그렇다가 보았다.²¹⁰⁾ 이에 비해 피렌체, 시에나, 록카 공화국이 위치한 토스카나와 베네치아 공화국은 인민의 부패의 정도가 덜하다고 보았다. 이탈리아 내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원인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에 있다고 마키아벨리는 지적한다. 이 때 사회경제적 조건이란 ‘특권 계급’과 ‘영주’의 존재 여부를 의미한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특권 계급’이란 ‘자신이 소유한 토지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으로 하는 일 없이 매일을 보내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농사를 짓거나 혹은 그 밖의 일에 부지런히 종사해야 할 걱정거리가 없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영주’란 특권 계급이 가진 바와 같은 많은 재산에 덧붙여 ‘성곽을 지배하며 자기에게 예속하는 농민을 거느리고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²¹¹⁾ 이와 같은 특권 계급과 영주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자유로운 공화국이 성립되거나

209) *Discourses on Livy*, pp. 90-91.; 『로마사 논고』, p. 208.

210) *Discourses on Livy*, pp. 109-113.; 『로마사 논고』, pp. 238-243.

211) *Discourses on Livy*, p. 111.; 『로마사 논고』, p. 241.

유지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자들은 자유로운 시민의 정치에는 정면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이다.²¹²⁾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특권 계급과 영주들이 토스카나에는 거의 없거나 희소하게 발견되는 한편, 나폴리 왕국, 로마 지방, 로마냐 및 롬바르디아는 이들로 충만하다고 지적한다.²¹³⁾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주변 국가 인민들의 부패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는 당시 프랑스와 스페인 왕국의 인민들도 이탈리아의 인민들과 마찬가지로 부패해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왕국에서 이탈리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무질서와 혼란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들 두 왕국에 일찍이 성립된 강력한 절대 왕권이 왕국의 법률과 제도가 지켜지도록 인민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들 두 왕국들과는 달리, 다수의 도시 공화국들이 존재하는 독일 지방에서는 인민이 아직 부패하지 않고 지극히 높은 선의와 종교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선량함과 종교심이 인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품성으로 인해 거기서는 많은 공화국들이 저마다 자유를 누리면서 공존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을 매우 잘 준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도시의 안팎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감히 그들을 정복하려는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
²¹⁴⁾

독일의 공화국들은 공공 재정을 위해 일정한 양의 돈을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행정관이나 의회가 도시의 모든 주민에게 각자가 소유한 재산의 1퍼

212) *Discourses on Livy*, pp. 111-112.; 『로마사 논고』, pp. 241-242.

213) *Discourses on Livy*, p. 278.; 『로마사 논고』, p. 526.

214) *Discourses on Livy*, I-55-2, p. 110.; 『로마사 논고』, p. 239.

센트 또는 2퍼센트를 사정하여 조세로 부과한다.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후, 그곳의 법률에 따라 각자는 징세관 앞에 출두한다. 먼저 적정한 양을 납부할 것을 맹세한 이후, 각자는 납세를 위해 준비된 상자에 양심에 따라 자신이 마땅히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한 양을 던져 넣는다. 이러한 납부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목격자도 없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량함과 신앙심이 아직도 이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215)

이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독일 지방 도시 공화국들의 인민이 부패에 물들지 않고 공공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시민적 덕목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곧 교육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공화주의자 이졸트 호노한(Iseult Honohan)에 따르면 자유와 공공선을 인식하는 것은 상호 의무와 지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민적 덕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민적 덕목과 관련된 교육이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마키아벨리가 언급한 독일 사례에서와 같은 법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준법은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자유와 공공선의 실현 또한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법은 단순한 의무감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점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215) *Discourses on Livy*, I-55-2, pp. 110-111. 『로마사 논고』, pp. 239-240.

2)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의의

권리 담론에 익숙한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공공선에 관심을 갖고 그 실현에 개인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²¹⁶⁾ 이러한 시민적 덕성은 공화주의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주제이다.

공화주의에서 시민의 덕성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은 다소 보수적이며 시간에 대하여 비관적인 태도를 취한다. 변화하는 것은 부패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공화정을 건설한 영웅이 살았던 과거에서 덕성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진보를 꾀하기보다는 과거를 보존하는 데에 관심이 더 많았다. 스파르타가 추앙을 받는 이유는 스파르타는 변함이 없었으며 매우 오랫동안 부패를 막았기 때문이다.²¹⁷⁾

덕성이 있는 시민의 이상형으로 흔히 꼽히는 이가 로마의 영웅 킨킨나투스(Quintius Cincinnatus)이다. 로마의 원로원은 기원전 431년에 농사를 짓고 있는 그를 소환하였다. 그는 독재관에 임명되어 외침을 막아낸 후 미련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농사를 지으며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였다.²¹⁸⁾ 킨킨나투스는 덕성을 갖춘 시민이 공공선을 우선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에서 도시국가에서의 시민 생활은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개인의 이익과 폴리스(polis)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일반적인 고대의 공화주의자는 공공의 선이 사적인 이익의 희생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브루투스의 사례를 설명한 장에서 잘 드러난다.²¹⁹⁾

216) 조일수, 앞의 논문, p. 292.

217) Margaret Canovan, "Civic Virtue," in Lipset(ed.), *op cit.*, Vol. IV. pp. 1341-42.

218) 인드로몬타넬리 저·김정하 역, 『로마제국사』(서울: 까치, 1998), pp. 62-89에서 재인용; Montanelli, Indro. *Storia Di Roma*(Milan: R. C. S. Rizzoli Libri S. p. A., 1988).

219) 브루투스는 왕정을 복고하려는 음모에 가담한 자신의 아들을 처형하였다. 마키아벨리는 이

그렇다면 우리가 경탄하는 로마인의 시민적 덕성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가? 시민적 덕성이 저절로 나타난다고 생각한 공화주의자는 아무도 없다.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의 기풍을 진작시킴으로써 덕성을 가진 시민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면 외부 침략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 태도나 습성이 고대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고대의 공화주의자는 청교도적인 경향을 강하게 띠어 소비와 과시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시민적 덕성을 유지하고자 로마의 공화정은 감찰관(censor)을 두었으며, 연회의 하객 수를 제한하고 의복이나 식단의 세부사항까지 통제하기도 하였다. 기원전 2세기에 카토(Marcus Porcius Cato)는 보석류에 과세를 할 정도로 엄격하였으며 감찰관으로서 명성을 얻었다.

그런데 공화정의 말기에 이르러 난제에 직면하였다.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덕성이 쇠잔하였기 때문이다. 검소하고 강인한 로마의 군인은 더 부유한 사회를 정복하고, 사치와 탐욕에 빠져 군사적인 덕성과 공공정신을 상실하게 되었다. 로마가 제정으로 들어가자, 1세기의 작가 주베날(Juvenal)과 셸루스트(Sallust)는 제정에 복종하게 된 이유를 로마인의 유약성과 탐욕에서 찾았다.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의 시민성을 결합하려는 오랜 학문적 논의²²⁰⁾인만큼, 정치 공동체의 공공선 실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시민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오늘날 자유주의 정치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²²¹⁾

와 같은 그의 헌신적인 행동이 로마에 자유와 위대함을 가져다주었다고 보았다.

220) 광준혁, “공화주의와 한국사회: 필립 페릿 교수와의 대담,” 『아세아연구』, 52권 1호 (2009), p. 138.

221) 조일수, 앞의 논문, p. 293에서 재인용; Iseul Honohan, *Civic Republicanism* (New York: Routledge, 2002), p. 147; S. Besson & Jose Luis Marti(eds.), *Legal Republicanism*(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9), p. 3.

4. 공화주의 시민성 담론의 한계

현대 사회에서 공화주의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학자의 관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와 강조점이 다양한 까닭에 공화주의와 공화주의 시민성에 대한 개념 정립에 어려움이 있다. 공화주의의 스펙트럼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공화주의는 정치 생활을 최선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국가의 권위를 강조하며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준법정신을 중시하면서 시민적 덕목의 함양에 강조점을 두기도 한다. 또한 시민의 자유, 정치적 평등, 법의 지배에 강조점을 두기도 한다. 따라서 공화주의 시민성 담론을 전개하면서 특정 사상가의 공화주의 사상을 아무런 수식어 없이 부르는 것은 그것이 마치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사상가의 공통된 견해인 양 오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공화주의 담론에서 막연하게 공화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누구’의 공화주의라고 언급하거나, 공화주의의 ‘무엇’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²²²⁾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화주의가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만능도구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향도 문제이다. 공화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법치와 참여를 통해서 조화와 화합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한 신문의 논설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사회의 실현이 가능한 근거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애국심 또는 시민적 미덕 이외에 아무것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공화주의의 정치적 원칙이나 제도적 구상에 대한 고민보다 수단적 가치나 수사적 표현이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화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화주의는 정치 공동체 내부에 있는 각각의 사회 부문들이 정치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제도, 또는 개인이나

222) 이진희, 앞의 논문, pp. 37-62.

가족적 유대를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 전통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공화주의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논쟁적으로 등장한 지금에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존재했던 정치제도나 시민적 덕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으로는 공화주의를 설명할 수 없다.

종종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마키아벨리로 이어지는 정치사상적 흐름을 공화주의의 정의를 대신해서 언급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사상가가 언급한 개념 하나하나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듯이, 특정한 지배적 견해에 비추어 공화주의의 범위와 내용을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화주의에 여러 수식어가 붙게 되었고, 이미 한국 학계에도 여러 종류의 공화주의가 규범적, 이념적 색채로 채색되어 등장하면서 공화주의 내부의 이념적 대립과 분화가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공화주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했고, 지금도 그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정치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내부의 다양성이 곧 공화주의의 내재적 원칙이나 인식론적 토대를 살펴보는 작업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축적된 경험과 정치적 고민의 결합으로 제도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정치적 원칙을 삶을 해석하고 영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바라 볼 때, 한국 사회에는 선부른 공화주의의 이념적 운색보다 공화주의의 정치적 원칙과 제도적 표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²²³⁾

223) 세실 라보르드·존 메이너 저, 앞의 책, pp. 11-12.

IV.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한국정치적 함의

1. 공화주의 시민성의 필요성

1) 한국의 정치상황적 한계

마키아벨리는 한 개인과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변화를 운명(*fortuna*)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 운명이 변덕스러운 여신이며, 인간의 역사에서 시련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인간은 이러한 위기를 과감한 덕(*virtu*)으로 극복해야 한다. 또한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운명의 신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군주정과 공화정 모두 그 내재적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로마공화국과 같이 두 정치체제가 혼합된 정치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에 시련을 주는 운명에 맞서 인간의 비르투를 행사해야 함을 강조했던 마키아벨리의 주장과 로마 공화정이라는 혼합 정치체 안에서 어떻게 군주정의 요소와 공화정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그의 논의는 현대 한국 정치 상황에서도 적실성을 갖는다.²²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혼합정체를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입헌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뿐만 아니라 시민덕성의 내면화를 통해 공화주의의 원리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224) 강용학, 앞의 논문, p. 20 참고.

위 요소들의 선순환 구조는 오늘날 민주공화국 실현의 핵심 요체라 할 수 있다.²²⁵⁾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오늘날까지의 정치사적 변화를 고찰하고, 그 과정에 나타난 정치상황적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는 군주의 권한과 신하의 권한이 상호 대립하며, 실학·서학·동학이라는 사상의 성장을 통해 시민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져가던 시기였다. 당시 새로운 정치개혁을 꿈꾸던 개화파들은 군주라는 벽을 넘기 위해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에 기대어 개혁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국 군주국가 조선은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말았고, 당시 지식인·통치자·민중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은 해방과 독립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얻는데 집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9년에는 대한민국을 근대적 공화국이라 천명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3.1운동은 이전의 갑신정변(1884)이나 그 후 민족운동의 흐름이 기존의 조선왕조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서 진일보하여 획기적으로 근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였다.²²⁶⁾ 하지만, 독립을 향한 열렬한 의지와 조직화된 독립운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해방은 일본의 패망이라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었다.

해방정국 초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복수주권의 현상을 보였다. 주권 국가 형성을 위한 힘과 자원, 정당성의 결집과 투쟁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 과정에서 폭력적 대응이 잇따랐고 기본적 합의 조차 힘든 상황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지배권을 이양 받을 만큼 강력한 정치세력이 있어야 했고, 그에 따른 제도도 필요했기에 미군정은

225) 유미자, “로마 혼합정체의 현대 정치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 p. 77.

226) 김용직, “대한민국 건국의 정치외교사적 소고: 1919년 3·1운동에서 1948년 건국까지,” 이인호·김영호·강규형 편,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서울: 기파랑, 2009).

1946년 하반기에 입법위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담긴 헌정체제를 수립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 제도화를 위한 단계적 국가형성 과정에 있어 당시 남한의 국가제도의 형성과정이 하향식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8년에는 미국식 헌법체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제헌헌법에서 대의민주주의제를 채택하였다. 당시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입헌주의적 대의민주주의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헌법적 질서를 갖춘 국가체제 아래 시민적 자유를 중시하는 체제이면서²²⁷⁾ 국민이 통치하는 체제이다.²²⁸⁾

1960년대까지 한국은 큰 무리 없이 자유주의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삼선개헌으로 집권한 직후,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1972년 10월)으로 개발독재체제를 겪은 바 있다. 하지만 10.26사태 이후의 5공화국 헌법에서는 대의민주주의제를 상당부분 복원하였다. 그리고 1987년 6.29 선언으로 타협에 의한 민주주의화를 이루었다.²²⁹⁾ 집권세력과 저항세력간의 힘겨루기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으나 1987년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수 주간에 걸친 6월 항쟁 끝에 서로한 걸음씩 양보하여 독특한 민주주의를 달성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제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함으로써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완전히 복원되었다.²³⁰⁾

227) 자유주의에서 법은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자 공동체 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용해야 할 필요악이나, 공화주의의 원리에서 법은 자유를 보장하는 존재로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 김동훈, 『한국헌법과 공화주의』 (서울: 경인문화사, 2011), p. 160.

228) 한국의 제헌헌법이 대의민주제를 택한 이유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임정이래로 공화정적 체제를 가장 모범적인 근대국민국가체제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불완전하고 중앙집권주의적 요소가 강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김용직,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민주화 이후의 쟁점과 전망』 (서울: 시대정신, 2007) 참고.

229) 일반적으로 한국 민주정치는 1987년을 계기로 제도적 정착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장동진, “심의민주주의와 한국 정치,” 『연세행정논총』 제29집(2006), p. 2.

230) 이인호·김영호·강규형 편, 앞의 책 참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복 이후 도입되어 독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을 통해 성장하였다. 하지만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속히 민주화를 이룬 관계로 복잡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고, 국민적 합의나 결정과정에 있어 시민의식이 성숙할만한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국민의 공동 가치였던 민주화라는 쟁점이 사라지자 1988년 4월의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로 나타난 지역화 성향이 강화되면서 지역주의와 파벌정치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력의 오용, 남용 현상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위기와 퇴보의 국면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도 수십 년 이상이 걸리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²³¹⁾ 이러한 한국의 정치상황적 한계를 환경적 요소, 즉 포르투나(fortuna)로 인식하고 시민적 자유를 최고의 정치적 이상으로 추구하였던 마키아벨리의 현실적 정치 전략을 살펴보면 유용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부패한 정체란 힘 있는 자들만이 공공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체제라고 정의하는 한편, 의심이 많고 부패하기 쉬운 인민들을 법률과 지도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위에 둘 수 있도록 공공의 자유에 부응하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를 보면 분배의 양극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고, 사회정치적 갈등이 근본적 이념과 가치를 둘러싼 감정대립으

231) 윤진표·제대식,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연구: 군부와 이슬람세력 간의 동화” 『국제정치학회』 제40집 3호(2000), p. 319.

로 치닫는 한편 각기의 집단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집단이기주의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공유해야 할 정당, 언론, 종교, 대학, 조합, 경제·사회단체와 같은 중간기제들에서 갈등과 대립이 더욱 격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²³²⁾

사적 이익이 극대화 될수록 공공선에 대한 합의는 어려워지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과 기업의 논리가 국가와 사회 전체로 확대되기 쉽다. 오늘날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종종 공적 성격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공화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화주의의 원리를 정치적 원칙으로 다시 세우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공화주의적 대안의 효용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정치사회는 민주화 이후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사회의 공공선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학계 및 현실정치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논의하고, 지도자와 공직자의 자질과 덕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 시민의 능력과 자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들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공공선을 강조하는 공화주의 논의와 연결된다. 공화주의는 시민의 정치참여와 공적 심의를 강조한다.²³³⁾

232)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왜 공화국 논의가 필요한가(下),” 『경향신문』 (2009년 1월 11일자) 참고.

233) 키피카는 공화주의 논의를 정치참여와 공적 심의를 본질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해석의 공화주의(the Aristotelian interpretation of republicanism)와 정치참여를 수단적 의미에서 중요시하는 수단적 해석의 공화주의(the instrumental interpretation of republicanism)로 구분한다. Will Kymlicka,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Oxford: Clarendon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치 사회는 공공선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이므로 이와 같은 한계점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는다면 사회적 응집력이 약화되어 결국 비인간적인 사회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는 공공성이 강화된 공화국을 재정립하는 것이다.²³⁴⁾

현대사회는 공공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에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 내기가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헌법에 나타난 공화주의 원리는 가치중립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공통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면 제도가 정치적 원칙을 성공적으로 구체화하는 한 갈등하는 쌍방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치적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상해임시정부 임시헌장(1919년 4월 11일)과 제헌헌법(1948년 7월 17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1961년 6월 6일)과 3공화국 헌법(1962년 12월 26일), 유신헌법(1972년 12월 27일)과 5공화국 헌법(1980년 10월 27일), 그리고 현행 헌법(1987년 10월 29일)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은 헌정체제가 기초해야 할 기본적 원칙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적 흥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헌법학계에서도 헌법 제1조 1항은 헌법 개정 절차를 따르더라도 개정할 수 없는 헌법의 핵심원리로, 헌정질서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지도원리이자 근본규범으로, 국민주권 이념을 표현한 구조적 원리로, 그리고 국가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²³⁵⁾

대한민국 시민은 각자 스스로 대표를 선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삶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이다.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

Press, 2002), pp. 294-302.

234) 최장집 교수는 그의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초판(2002)에서 위기의 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공화주의를 재조명한 바 있다. 비록 2005년 개정판에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대의제를 옹호하는 헌정주의로 단순 귀결된다는 태도 변화를 보였지만 공화주의의 가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35) 박준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 체제의 두 가지 원칙,” 앞의 논문, pp. 33-57.

화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인 참여와 숙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등 여러 가지 실천적 과제들이 있다.

정부는 헌법의 첫 번째 조항을 정치 원칙으로 삼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공화주의적 시민 덕성을 계발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시민들이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²³⁶⁾ 온전한 공동체는 궁극적인 주권적 권위를 보유 유지해야 하며, 공동체의 통치자들이나 최고 행정관들에게 선출된 공직자로서의 지위 이상의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자유와 자치는 적극적 시민의식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화주의자들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통치와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이 반드시 공공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공선의 실현에 개인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비롤리에 의하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화국은 시민적 덕성 즉 공공선에 기여하려는 의지와 능력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²³⁷⁾

오늘날 공화주의는 원자화된 자유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해 줄 대안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공화주의의 유형이 다양하여 혼란스러운 것도 또한 사실이다.²³⁸⁾ 하지만 공통적으로 상호의존성을 지닌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나 사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정치 공동체의 공공선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과 공공선의 실현을 통해 진정한 자아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개체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시민적 덕성과 연대성에 기초한 정치 공동체의 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 사회에서 효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36) 김경희, “서구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전개,”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2007), p. 125.

237) 조일수, 앞의 논문, p. 310.

238) 이명순, “공화주의의 유형과 그 비판: 강한 유형과 약한 유형,” 『철학사상』 제26호(2007), pp. 271-280.

2. 다문화주의 사회에서의 공화주의적 대안

1) 열린 사회와 시민적 합리성

오늘날은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언론 매체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지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동 대처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생명장(場)으로서의 지구의 유기체적 속성이 강조되고 있다.²³⁹⁾ 하지만 주어진 환경이 전례 없이 급변하고 있는 관계로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공감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인종과 문화, 성과 종교를 기준으로 끊임없이 분절되는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의 의미에 대한 합의를 이를 필요가 절실했다.

오늘날 전지구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처럼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와 낮은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경우이고, 둘째는 캐나다 미국처럼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였던 경우로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이들 나라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는 심각한 주제이다.²⁴⁰⁾

우리나라는 첫 번째 유형에 가까우며, 최근 조선일보의 한 사설은 급변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한국 시민이 가진 정체성이 충돌하는 상황을 잘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필리핀 출신 결혼 이주여성 이자스민 씨에 대한 인종차별성 인신공격에

239) 최민자, 『생명에 관한 81개조 테제』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8), p. 526.

240) 김남국, “다문화 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학회』 제45집 4호(2005), p. 98.

대한 우려 섞인 비판이 그것이다.²⁴¹⁾ 필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같은 혈통과 역사를 공유했다는 오래된 단일민족의 신화가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며, 바로 이러한 문제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객관적 현실과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다. 아울러 이런 분열상을 초래한 한국 국민의 정체성이 순혈주의적 파시즘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적 상식과 민주적 이성을 갖춘 시민적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처방을 내리고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새터민이라는 사회 불안의 요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²⁴²⁾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등의 각종 지원제도와 정책을 통해 새터민들의 적응을 돕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시민들의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은 여전히 심각한 편이다. 이에 새터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 겪고 있다. 시민사회의 무관심과 차별로 인해 새터민들은 극심한 경계심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자살이나 사회적 물의로 번지고 있다.

정보사회학의 기수로 알려진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는 그의 『정보화시대 *The Information Age*』 3부작²⁴³⁾을 통하여 산업 사회의 정치·경제 논리와 문화적 정체성이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구심력을 상실하고 네트워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고 본다. 그는 경제, 기술, 정보, 권

241) “인종적 순혈주의는 파시즘을 부른다,” 『조선일보』 (2012년 4월 19일자) 참고.

242) 1997년 876명에 불과했던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2002년 3,128명으로 증가했고, 이후 매년 1천명 이상의 탈북자가 입국해 2007년에는 12,248명을 기록했다. 특히 2006년부터는 연도별 입국 탈북자가 2천명을 넘어섰고 2008년 이후에는 3천명에 육박했다. 그 결과 1만 명을 돌파한지 3년 만에 2만 명에 도달했다. “탈북자 2만 명 시대, 의미와 과제,” 『연합뉴스』 (2010년 11월 15일자) 참고.

243)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1(1996); *The Power of Identity,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2(1997); *The End of the Millenium,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3(1997).

력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적 변화를 ‘네트’(The Net)라고 하고,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의 대응을 ‘셀프’(The Self)라고 정의하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희망을 이 양자 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서 찾고 있다.²⁴⁴⁾

따라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열린사회’(open society)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열린사회에서는 개방, 자유, 사랑, 포용의 긍정적인 의식이 지배하므로 소유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요시하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연대성을 강조한다. 오늘날 공화주의 이념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또한 ‘다원주의 세계’로 규정되는 현대 세계에 대처하는 자세와 관련되어 있다.

공화주의가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다문화주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우선 공화주의 전통의 맥락에서 그 연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 전통이 다름과 다양성에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시민적 덕성 형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고전적 공화주의가 절대적인 시민적 덕성과 시민권을 강조한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공화주의에 대한 단순한 고전적인 해석에 해당된다. 현대 공화주의는 개인 및 집단 간의 상호의존성과 행위자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 또한, 공화주의 국가는 시민적 덕을 증진시키고, 시민권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를 이루게 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비지배적 상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공화주의의 개념은 토머스 힐 그린(Thomas Hill Green) 이래로 언급된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그것은 단순히 자유방임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권리를 바탕으로 사회 및 정치 영역에 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²⁴⁵⁾

244) 최민자, 『생태정치학』, pp. 655-657.

245) 최민자, 『동서양의 사상에 나타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공화주의는 인간본성이 정치적 행위 속에서 가장 완전하게 실현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정치적 정체성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공화주의적 접근방법은 단순히 공동체주의자들이 구체화하는 공공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며, 정치적 정체성을 결정적인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비지배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시민권은 공개적으로 인정된 사회적 지위로서 그것은 타인들에 대한 임의적인 의지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자존감을 갖게 해 주며, 발언권을 평등하게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모든 시민이 공적 제도와 정책의 보편적 수혜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적 시민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시민적 또는 정치적 정체성은 자율적인 시민이 공통된 삶의 조건에 관한 합의과정에 정치적으로 참여할 때 획득된다. 정치적 활동이 정체성 구성의 요소인 것이다.²⁴⁶⁾ 따라서 시민들이 이와 같은 공화주의적 원리에 기초한 시민권을 인정하고, 시민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주의 한국 사회의 갈등 완화에 기여할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다문화주의 이론가 윌 킴리카(Will Kimlicka)는 그의 저서 『다문화주의 시민권』에서 다문화주의와 시민권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다문화주의 정치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 자유와 문화, 소수자집단의 목소리 보장, 사회의 유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킴리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이론이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화에 대한 진단과 향후 갈등 양상에 대한 예측과 함께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공화주의를 보완하는 또 다른 의미 있는 단서들

2011), p. 735-748.

246) 김상현, “현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p. 170.

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²⁴⁷⁾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상이한 문화에 대한 공적 인정과 관용으로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실현 하는 데에 있다.²⁴⁸⁾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이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게 된 외국인들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과 다문화민족 사회통합 관련 정책을 개발 중에 있다.

오늘날 한국은 다문화사회 전개에 있어 과도기적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이주민 및 새터민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 문제가 본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이들의 후세에 대한 법적 지위의 문제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새터민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이 개인적 역량, 사회적 자원으로 발전되어 관련자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생산적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²⁴⁹⁾

247)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론적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 저서를 참고. 윌 김리카 저, 황민혁·송경호 역,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서울: 동명사, 2010).

248) 장동진, 앞의 논문, p. 7.

249) 김이선,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4』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pp. ix-x.

2) 공화주의적 제도 구축

우리나라는 점점 다양하게 분화되는 인종과 문화, 지역과 종교 등의 도전으로 사회통합의 과제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42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체류관리와 인권보장사이의 갈등, 농촌 총각의 27.4퍼센트가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2세들이 늘어가는 현실, 양심적 병역 거부나 동성 결혼 문제가 점점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 등은 우리 사회가 정치권력이나 경제적 분배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다수 중심의 전통적인 갈등 이외에도 사회적 소수의 문제제기를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통계청의 자료(2005)에 의하면 2004년 우리나라의 총 결혼 건수는 319,440건이고, 그 가운데 11.4퍼센트인 35,447건이 외국인과의 결혼이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는 약 16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자녀와 이주 노동자를 합친다면 우리 사회의 소수인종은 전체인구의 2퍼센트인 최대 90만 명에 이를 수 있고, 이는 소수인종의 숫자가 사회적 문제화되기 시작하던 1960년대 말의 유럽과 비슷한 수준이다.²⁵⁰⁾

이처럼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사회적 다수와 사회적 소수, 또는 기존의 시민들과 새로운 이주자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구성의 원칙을 찾는 일은 우리 사회가 광범위한 토론과 성찰을 통해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²⁵¹⁾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다른 나라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추진체계를 평가하며, 여러 나라의 정책을 비교 고찰하는 것은 한국의 다문화 가족 정책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작업

250) 김남국, 위의 논문, pp. 99-100.

251) 가치다원화 되어 가는 사회에서의 정책입안과 입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동의에 기반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공정한 절차와 정치과정은 가장 일차적인 공동선이라고 할 수 있다. 김비환, “가치다원화와 공동선 그리고 한국의 경우,” 『법철학연구』 제2권(1999), p. 176.

이다.²⁵²⁾ 이러한 과정에서 공화주의적 제도 디자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호노한(I. Honohan) 등이 주장하는 현대 공화주의는 이탈리아의 시민 공화주의와는 달리 정치적 평등과 같은 가치에 대한 강조를 통해 제도적 틀을 변환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²⁵³⁾

정책 방안의 모색과 동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요소가 더 있다. 객관적 준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여전히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고, 순혈주의 과시증적 경향을 보인다면 제도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화주의 국가는 시민적 덕을 증진시키고 시민권에 대한 합의를 이룸으로써 시민이 그들 자신의 비지배적 상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 공화주의 시민권에 기초한 시민교육은 시민적 덕성을 기르고, 비지배적 자유에 입각한 삶의 방식을 가르친다. 시민은 동료 시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배워야만 한다.

대거(R. Dagger)에 의하면 공화주의적 덕성 함양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소수자를 억누르거나 소외시키는 지배적인 문화에 우선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책임성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회적 상황, 성, 능력, 문화, 종교, 사회적 물질적 불평등에 대한 지각력이 확장되어야 한다. 즉, 상호의존성의 증

252)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 개발에 관해서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대만의 거주사증·영주권·시민권,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를 비교 고찰한 여성가족부의 연구보고서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2011)” 참고.

253) 주성수·정상호 저,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서울: 아르케, 2006), p. 58.

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은 자기절제력을 길러야 한다. 오늘날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벗어나 공통된 이해관계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기이익의 부정이 아니라 이익의 균형을 재고하는 것이다. 셋째,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관점을 고려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심의하는 능력과 기질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관용이라기보다는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²⁵⁴⁾

즉, 현대 공화주의 국가에서는 공화주의적 시민이 그들의 문제를 대화의 방법 속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 이론에서는 개인들이 대안적인 관점을 수용하거나 동의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임의적인 간섭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서로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듣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비지배적 상호의존성은 차이에 근거하여 타인을 지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시민적 공화주의 이론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에 참여하는 동시에 크고 작은 다른 여러 공동체에도 참여하는 다중적 정체성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이클 샌들은 효과적인 자주적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덕성을 지닌 시민들을 국가 차원에서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자치’(self-government)의 희망은 주권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에 있지 않고, 오히려 주권을 작은 단위로 분산하는 데에 있다. 주권이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들과 정치적 단위에서의 정치를 통해서 공적 생활에 필요한 분별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심의민주주의 이론가들이 강조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갖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과도 맞닿아 있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성의 본질은 공적 토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덕성을 전제로 한다. 민주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시민의 덕목은 굿만(Amy Gutmaan)

254) 김상현, 앞의 논문, pp. 159-160에서 재인용; R. Dagger, *Civic Virtue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이 제시하듯이 단순히 읽고, 쓰고,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 관용, 인종 및 성적 비차별, 개인적 권리와 정당한 법에 대한 존중, 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용기, 타인들과 함께 숙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연계된 문제에 대하여 개방적인 마음을 지닐 수 있는 능력, 공직자들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²⁵⁵⁾

따라서 공화주의적 시민성과 현대 심의 민주주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민성은 시민사회 내에서 상호 존중과 인정을 가능케 하는 자유를 가진 시민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더욱이 공화주의의 비지배적 상호성은 개인의 자율성과 시민적 덕성을 조화시키는 한편,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와 갈등의 민주적 해결을 동시에 촉진시킬 수 있는 정치적, 도덕적 판단의 근거이자 민주적 심의의 조정원칙²⁵⁶⁾으로 제시될 수 있다.²⁵⁷⁾

이와 같은 공화주의적 시민성 교육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다문화의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매개할 바람직한 시민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시민들과 이주민들 모두 상호존중과 합리적 대화, 그리고 정치적 권리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정치적 참여를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²⁵⁸⁾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많은데 반해 성급하게 개발된 경향이 있고, 이민자통합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그 포괄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에

255) Amy Gutmann, *Democratic Education*(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p. 298.

256) 광준혁, “심의 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 『국가전략』 제11권 2호(2005), p. 141.

257) 마키아벨리가 끝까지 수호하고자 하였던 것도 바로 비지배로서의 자유(freedom as non-domination), 곧 공화주의적 자유였다. 다른 국가 밑에서 노예처럼 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 그는 자유로운 공동체의 이상을 위하여 공화주의를 지지하였던 것이다. M. L. Colish, “The Idea of Liberty in Machiavelli,”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32, No. 3, 1971, p. 327.

258) 김남국, 앞의 논문, p. 117.

서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확대 및 적실성 평가를 통한 재편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자들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위한 상담 전문 인력의 공급이 부족한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역량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²⁵⁹⁾ 이러한 개선 과정에서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적용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59) 여성가족부, 앞의 보고서, pp. 213-215.

3. 공화주의적 시민 교육으로의 전환

1)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한계

오늘날 시민교육에 대한 자유주의 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념과 가치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존속에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즉, 모든 시민이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관용의 정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⁶⁰⁾ 하지만 이러한 이상의 실현은 시민정신의 약화와 프라이버티즘(privatism)의 팽배로 인해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의 사적 이익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왜곡된 개인주의로 이어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공동체 의식의 부재를 초래한 것이다.

하버마스(J. Habermas)가 말한 것처럼 시민적 개인주의의 신드롬(syndrome of civic privatism)은 시민적 덕성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²⁶¹⁾ 또한 개인주의로 인하여 시민들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피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²⁶²⁾ 우리의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 및 문화에서 권리에 대한 주장은 넘쳐나게 되었다.²⁶³⁾

이러한 개인주의에는 보완이 필요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그 분열적인 성격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²⁶⁴⁾ 분열적인 성격은 크게 권리 만능주의와 공익에의 무관심으로 나타난다. 권리 중심의 개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특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 자

260) 김상현, 앞의 논문, p. 147.

261) Will Kymlicka,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Oxford: Oxford University, 2002), p. 294.

262) J.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Cambridge: Polity, 1996), p. 78.

263) R. J. Arneson, "Against Rights," *Nous*, Vol. 35, No. 1, 2001, p. 172.

264) 임재진, "헤겔의 개인주의 비판," 『범한철학』 제37집(2005), p. 311.

체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모든 주장의 선두에 ‘권리’를 내세우는 경향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회에 필요한 법규와 규정을 무시하며 연대성을 파괴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권리’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권리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특정 단체 혹은 성인 일반에만 만연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권리 담론에는 공동체라는 울타리는 없고, 오로지 ‘나’만 존재한다. 사회의 공공선을 유지할 의무를 경시하고 개인적 자유에 대한 권리만 주장한다.²⁶⁵⁾ 나를 비롯하여 다른 여러 사람까지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은 공동체에의 귀속감이 있어야 하고, 권리의 평등을 향유해야 하며, 자의적인 사람의 지배가 아닌 비자의적인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 중 어느 한 가지 특징이라도 결핍되거나 약화되면 우리는 시민성의 영역이 아닌 그저 어떠한 주관적인 형태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²⁶⁶⁾

이러한 오늘날의 시민성 위기의 핵심은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시민성과 공공재를 강조하는 시민성 사이의 긴장과 갈등에 있다. 자유를 최고의 목표로 강조하는 시장 사회는 시민 사회를 꿈꾸는 공화주의의 비전과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이다.²⁶⁷⁾

이러한 시점에서 시민성에 대한 관심은 정의와 공동체에 대한 담론과정에서 등장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을 통합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급증하였다. 자유주의가 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고 공동체주의가 특정한 공동체에의 헌신과 의무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성은 두 가지

265) Will Kymlicka, *op. cit.*, p. 212.

266) Y. Peled, "Towards a Post-Citizenship Society? A Report from the Front," *Citizenship Studies*, Vol. 11, No. 1, 2007, p. 103.

267) 조주현, "심의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 민주 시민 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p. 20.

측면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²⁶⁸⁾

어떤 특정의 이념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타당성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특정의 이념이 만능의 이념이 될 수도 없다.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강조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 변할 수도 있다.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초기 자유주의를 단순히 재생시키기보다는 변화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적합하게 창조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공화주의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갈등으로 좀처럼 사회통합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우리 사회에 ‘민주’의 토대를 보완하는 ‘공화’의 의미를 되새겨 민주공화국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²⁶⁹⁾

공화주의는 공화주의의 이념에 부응하는 시민적 교육시스템에 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통된 교육이 국가 구성에 본질적인 일체감과 연대감을 고취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교육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선에 대한 편협한 정의를 보완하며 행복 또는 인간 번영의 구체적인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들이 그들의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 입장에서 시민적 교육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한 교육적 노력이 공화주의를 적합하게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는 부패한 도시를 개인들에게 어떠한 선도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이 없는 것과 동일시하였다.²⁷⁰⁾ 만약 공화국이 부패를 피하고자 한다면, 국가가 충분한 수준의 교육으로 그리고 덕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교육과 덕은 국가의 법과 제

268) Will Kymlicka & Wayne Norman, “Return of the Citizenship: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Ethics*, Vol. 104, 1994, p 352.

269) 이동수, 위의 논문, pp. 5-17.

270) *Discourses on Livy*, p. 259.; 『로마사 논고』, p. 496.

도를 지지하는 것이다.²⁷¹⁾

공화국에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권에 대한 공화주의적 해석을 지지하는 교육에 있으며, 충분한 수준의 교육과 덕이 없다면 공화국의 법과 제도는 병들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즉, 현대공화주의에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유지하려면 시민적 덕성과 관련된 충분한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공화주의의 시민적 교육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 현대공화주의의 시민권은 두 개의 독립된 차원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차원은 지위나 법적인 것으로, 그것은 본성상 정치적이거나 시민적일 수 있는 권리들을 수여하는 것이고 헌정이나 권리장전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두 번째 차원은 타인들과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와 관계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에서 시민적 덕과 시민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적 덕은 타인들에게 임의적인 간섭이 없이 자신의 목적을 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전체 사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된다. 즉, 타인들을 시민성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공화주의 국가는 개인들이 타인들에 대해 어떻게 관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필수적인 덕을 반복하여 가르칠 수 있는 공립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이다.²⁷²⁾ 그것은 개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이해관계를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화주의는 대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된 토대를 찾는 노력을 강조한다. 즉, 대화와 타협은 시민교육과정의 일부분이다.²⁷³⁾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공화주의 제도는 사회에서 타인들의 임의적인 간섭으로부터 그리고 국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다. 높은 수준의 심의와

271) *Discourses on Livy*, p. 86.; 『로마사 논고』, p. 202.

272) 김상현, 앞의 논문, p. 152.

273) Pettit, *op. cit.*, p. 189.

참여의 논쟁은 국가 그 자체가 지배자가 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논쟁의 주체는 공화주의적 시민교육을 받은 시민으로 구성됨으로써 공화주의가 목표로 하는 비지배로서의 사회, 지배가 최소화되는 공화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공화주의적 시민성 함양 교육

인간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공화주의에서 중시하는 준법정신을 교육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 체계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공공선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무엇보다도 법체계 안에서의 자유를 따르는 시민성을 강조했다. 이는 『로마사 논고』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바람직한 시민의 특성이 법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가 법을 중시했다고 해서 공동체에 함몰되는 개인을 상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고전적 공화주의의 전통에 따라 개인이 누리는 자유에 주목했다.²⁷⁴⁾

이러한 시민성은 법체계 안에서의 자유를 따르되, 공동체의 활동에 무관심한 시민이 아니라 자유를 중시하며 활발하게 참여하는 시민을 의미한다. 자신의 자유 혹은 다른 시민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억압받게 되면 그것은 법에 따르는 생활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공동체의 영역에 참여하고 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며, 시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의로

274) 곽준혁, “시민적 책임성: 고전적 공화주의와 시민성,” 『대한정치학회보』 제16집 2호(2008), pp. 9-21.

운 감정이다. 이것이야말로 부패를 막는 고귀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시민이 지켜야 할 법을 우주 보편의 질서 혹은 변하지 않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비인격적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법의 의미를 공동체 안으로 제한시켰으며 그 공동체의 여러 성질과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관습, 문화 그리고 전통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공동체의 정신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준법의 동기는 공동체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역사의식이었다. 이러한 역사의식을 교육함으로써 시민들은 자신이 특정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준법에 있어서 역사 공동체를 의식하는 것은 준법 행위를 위한 강력한 하나의 동기가 되고 시민들 간 통합도 이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로써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인이 법 이면의 정신을 존중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준법 자체만이 아닌 준법의 정신을 칭송하였다는 점에서 그는 준법정신의 가치를 교육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했다. 공동체의 기억과 역사를 함유하고 있는 법의 정신을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개개 시민과 그 시민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민족정신의 외연을 확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마키아벨리가 상정하는 민족은 편협한 민족정신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로마를 통해서 민족정신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혈통, 국적, 피부색과 같은 외부적 조건들이 아닌 법을 중심으로 시민을 구성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준법의 불편부당함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가문이나 권력은 법의 힘을 능가할 수 없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가 다양한 시민을 인정하고 그 힘을 사용함으로써 번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시민 개념은 타고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⁷⁵⁾

오늘날의 한국 교육제도에는 시장주의 원리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정부시책 중의 하나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허용을 들 수 있다. 이 학교의 설치 목적은 하향평준화에 불만을 느껴 교육이민을 떠나는 중산층 이상의 욕구를 해소하고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들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서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준별 수업의 문제와 학교선택 자율권의 문제이다.²⁷⁶⁾

하지만 교육의 자율주의, 시장주의로써는 결코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교육 개혁이 항상 부작용을 초래한 것은 기본 방향에 대한 설정 없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임시변통으로 고치려 했기 때문이다.²⁷⁷⁾ 공동체적 가치와 공공선이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에 의해 침해되는 현대 사회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교육정책의 부작용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공화주의적 시민성, 즉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성을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개인은 결코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개인 스스로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마련이다. 또한 공익에의 무관심은 개인과 공동체를 부패시키기 마련이고, 법이 효과적으로 지배를 할 수 없게 만든다. 법의 목적 중 하나는 공익의 증진과 질서를 통한 사회 유지이지만, 사익만을 추구하고 공익에 대하여 무관심한 시민들이 많다면 그들이 법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부당한 일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²⁷⁸⁾ 더욱이 다문화 사회의 성격이 짙어져 가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주민과 새터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부정적 편견 등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함에 있어 준법정신

275) 신호재, 앞의 논문, pp.137-141.

276) 안재오, 『교육공화국』 (서울: 열과알, 2003), pp. 187-189.

277) 위의 책, p. 186.

278) 신호재, 앞의 논문, pp. 20-21.

과 법의 정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족정신의 외연을 확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²⁷⁹⁾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시민적 덕목을 함양하기 위해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교육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적 의무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고, 시민들 간 통합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279) 시장주의 원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제도에 공화주의적 원리를 적용하여 복선형 학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안재오, 위의 책, pp. 187-199.

V. 결 론

공화주의는 그리스 도시국가의 정치철학을 지배했던 정치관념이다. 카이사르 시저(Gaius Julius Caesar) 이후 한동안 세력이 약해졌다가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 도시국가를 풍미하였으며 그 후로 유럽 북부의 군주, 귀족정치체제를 잠식하면서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변혁과 18세기 프랑스의 구체제 전복을 주도하였다. 미국의 독립 혁명과 건국 시에 연방헌법 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화주의는 국가원수인 1인, 귀족인 소수, 평민인 다수가 공존하는 사회이며 이들 각자가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다수는 다수의 횡포를 부리지 않고 소수는 그들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으며 국가원수는 독재의 전횡을 휘두르지 않는 공존에서 출발한다.²⁸⁰⁾

공화주의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폴리비우스(Polybius),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해링턴(John Harrington), 그리고 해링턴 사상을 미국에 전수한 신해링턴주의자들의 사상을 살펴볼 때 공화주의 사상은 대체로 다섯 개의 기본 관념을 축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법에 의한 지배이다. 둘째는 재산, 즉 토지와 무기를 가진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공공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공화주의적 의미의 자유이다. 셋째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정치체인 공공복지(Common Wealth)의 관념이다. 넷째는 인민에 의한 정부사상이다. 그리고 다섯째는 혼합정체사상이다. 이와 같은 공화주의 사상의 핵심적 정치 관념들은 공익을 우선시하는 공화주의적 덕성(republican citizenship)과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부패간의 긴장 및 대립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전개된 것들이다.

280) 임채원, 『공화주의적 국정운영』 (서울: 한울, 2008), p. 155.

현대 정치학자 켄틴 스키너(Quentin Skinner)가 말했듯이 마키아벨리에 의해 발전된 정치에 관한 고전적 공화주의 관념은 공공선을 확고하게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적 담론을 형성해 왔다.²⁸¹⁾ 그런 의미에서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통해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고찰하는 것은 공화주의에 대한 인문학적·철학적·사회학적 논의들에 비해 보다 정치실천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회복하는 것은 연대와 참여를 통해 공동의 이익이 실현되는 공화국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전 지구적 수준의 양극화에 직면한 현 시대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⁸²⁾

공화주의 학자 켄틴 스키너는 이에 관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자유주의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면서 공동체주의의 극단에 이르지 않는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데 공화주의가 일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했다. 그리고 시민적 휴머니즘의 신로마적 기원을 추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외부의 간섭과 강제로부터의 해방은 분명히 개인의 자유에 중요한 조건임에는 틀림없으나 결코 유일한 조건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스키너는 쉬운 예로 ‘너그러운 주인을 가진 노예가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행운을 누린다고 해서 과연 그를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 아래의 평등이 곧 정치참여적 평등과 동일시되는 공화주의적 자유론이 유토피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고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스키너에 따르면 결국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시민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앞세움으로써, 공동체의 선을 갉아먹는 부패한 세력에 대항함으로써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며, 이러한 자유 없이는 개인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

또 다른 대표적인 학자로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선을 결합하려는 노력

281) 양해림, 앞의 책, p. 12.

282) 조승래, 앞의 책, pp. 8-9.

을 기울였던 필립 페티(Philip Pettit)을 들 수 있다. 페티는 공화주의적 자유를 ‘지배의 부재’로 규정하여 ‘간섭의 부재’로 정의되는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와 뚜렷이 구분하면서도, 동시에 평등한 시민의 정치참여를 최고선으로 보는 적극적 자유와도 일정한 거리를 둬으로써, 양 극단을 배제하고 현대의 민주주의적 상황에 접목 가능한 개념으로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시민의 정치참여 자체를 선으로 본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이른바 목적론적 공화주의에서 그것을 단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도구적 공화주의로의 변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공화주의 담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공화주의의 특성으로 그것은 시민에게 늘 깨어있을 것을 요구한다. 철학자 바뤼흐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가 이에 대해 언급했듯이 소아병적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대의가 우리를 선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자기 확신을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는 그러한 대의를 침해하는 세력에 맞설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함을 뜻한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사회는 민주화 이후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집단이기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주민과 새터민 유입의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시민들의 극단적 개인주의는 권리 만능주의와 공익에의 무관심 현상을 초래하고, 모든 주장의 선두에 자기중심적 권리를 내세워 연대성을 파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다문화사회의 과도기적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민과 새터민 그리고 그들의 2세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학계 및 현실정치계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정치상황적 한계를 인식하고 공공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 및 지도자와 공직자의 정치리더십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의 덕목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에 나타난 공화주의

원리를 정치 원칙으로 세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공화주의적 시민 덕성을 계발하는 것을 정치실천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참여하고 심의하는 인간의 공적 영역을 최대한 확보하려 함으로써 시민실천적 차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공적 심의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는 일은 정치사회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 간의 소통과 공감을 원활하게 하는 열린사회 구축에 도움이 된다. 즉, 개인의 자유를 개체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시민적 덕성과 연대성에 기초한 정치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회에서 효용성을 갖는다. 공공선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과 구분되는 정부의 고유한 역할이다. 공화주의적 사회정책 수용에 대한 활발한 담론 생산을 통해 공화주의가 목표로 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즉 공화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인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적 시민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대 공화주의는 정치적 평등과 같은 가치에 대한 강조를 통해 제도적 틀을 변환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 준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여전히 극단적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순혈주의 파시즘적 경향 등을 견지하고 있다면 제도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화주의 국가는 공화주의 원리에 입각한 정책과 시민교육제도를 통해 시민의 덕을 증진시키고, 시민권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를 이루게 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비지배적 자유의 상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화주의의 비지배적 상호성은 차이에 근거하여 타인을 지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로 개인의 자율

성과 시민적 덕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와 갈등의 민주적 해결을 동시에 촉진시킬 수 있는 정치적·도덕적 판단의 근거이자 민주적 심의의 조정원칙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대 공화주의 논의에 따르면 자유와 자치는 적극적 시민의식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다. 자유와 자기 지배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공공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공선의 실현에 개인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또한 현대 공화주의는 개인 및 집단 간의 상호의존성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강조한다. 시민의 정체성은 자율적인 시민이 공통된 삶의 조건에 관한 합의과정에 정치적으로 참여할 때 획득된다. 따라서 시민들이 공화주의적 원리에 기초한 시민권을 인정하고, 시민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사회는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그리고 새터민과 이들 이주민의 후손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적 자원으로 발전되어 관련자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생산적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확립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은 사회통합과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정치사회적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민주’의 토대를 보완하는 ‘공화’의 의미를 되새겨 민주공화국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들이 타인들에 대해 어떻게 관용을 베풀고 존중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시민의 필수 덕목을 반복하여 가르칠 수 있는 공립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개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은 결코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개인 스스로에게도 악영향을 미치지 마련이다. 또한 공익에의 무관심은 개인과 공동체를 부패시키고, 법이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든다. 법의 목적 중 하나는 공익의 증진과 질서를 통한 사회 유지이다. 하지만 사익만을 추구하고 공익에는 무관심한 시민들이 많다면 법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다문화 사회의 성격을 띠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주민과 새터민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 대한 차별대우와 부정적 편견 등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함에 있어 준법정신과 법의 정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족정신의 외연을 확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시민적 덕목을 함양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적 의무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고, 시민들 간 통합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사회에 만연한 권리 만능주의 풍조와 공공선 및 정치에의 무관심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개인들은 물론 정치공동체를 부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논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민의 덕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시민성과 그것에 대한 교육이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참 고 문 헌

1. 마키아벨리 저작

Machiavelli, Niccolo, tr. by Harvey C. Mansfield and Nathan Tarcov. 1996.

Discourses on Liv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 강정인·안선재 역. 2003. 『로마사 논고』. 서울: 한길사.

_____, 강정인 역. 1994. 『군주론』. 서울: 까치.

2. 국내 문헌

1) 학위 논문

강용학. 2010. “마키아벨리의 혼합정체론과 순환역사관에 기초한 군주정과 공화정의 이중성 검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현. 2009. “현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소영. 2008. “마키아벨리의 로마공화정에 대한 평가: 리비우스의 『로마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영. 2000.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호재. 2008. “마키아벨리의 준법에 근거한 공화주의적 시민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미자. 2011. “로마 혼합정체의 현대 정치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순. 2010. “공화주의 사상의 민주시민 교육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재. 2003. “마키아벨리의 정치평론: 리비우스 논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주현. 2006. “심의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 민주 시민 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준화. 2010. “자유 개념에 대한 비판적 연구: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단행본

- 김경희. 2009. 『공화주의』. 서울: 책세상.
- 김동훈. 2011. 『한국헌법과 공화주의』. 서울: 경인문화사.
- 김용직. 2007.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 민주화 이후의 쟁점과 전망』. 서울: 시대정신.
- 김이선. 2010.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4』.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명림·김상봉. 2011. 『다음 국가를 말하다』.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박상섭. 2002. 『국가와 폭력: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상섭. 2002. 『근대 국가와 전쟁』. 서울: 나남.
- 안재오. 2003. 『교육공화국』. 서울: 얼과알.
- 이인호·김영호·강규형 편. 2009.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서울: 기파랑.
- 이진우. 1993. 『마키아벨리의 부정적 인간관과 정치기술』. 서울: 민음사.
- 임채원. 2008. 『공화주의적 국정운영』. 서울: 한울.

- 조승래. 2010. 『공화국을 위하여: 공화주의의 형성과정과 핵심사상』. 서울: 길.
- 주성수, 정상호 저. 2006.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서울: 아르케.
- 진원숙. 1996. 『마키아벨리와 국가 이성』. 서울: 신서원.
- 최민자. 2007. 『생태정치학: 근대의 초극을 위한 생태정치학적 대응』.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 _____. 2008. 『생명에 관한 81개조 테제』.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 _____. 2011. 『동서양의 사상에 나타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3) 번역서

- 레오 스트라우스 저, 함규진 역. 2006. 『마키아벨리』. 서울: 구운몽.
- 로베르토 리돌피 저, 광차섭 역. 2000. 『마키아벨리 평전』. 서울: 아카넷.
- 모리치오 비롤리 저, 김경희·김동규 역. 2006. 『공화주의』. 서울: 인간사랑.
- 부이 알튀세르 저, 오덕근·김정한 역. 2001. 『마키아벨리의 가면』. 서울: 이후.
- 세실 라보르드·존 메이너 저, 광준혁·조계원·홍승헌 역. 2009.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서울: 까치.
-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저, 지봉도 역. 2011.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야기』. 서울: 동서문화사.
- 월 킴리카 저, 황민혁 · 송경호 역. 2010.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서울: 동명사.

- 인드로 몬타넬리 저. 김정하 역. 1998. 『로마제국사』. 서울: 까치.
- 퀸틴 스키너, 신현승 역. 2001. 『마키아벨리: 강권 정치론을 주장한 인문주의자』. 서울: 시공사.
- _____, 조승래 역. 2007. 『퀸틴 스키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서울: 푸른역사.
- 김리카 저. 장동진 외 역. 2006. 『현대 정치 철학의 이해』. 서울: 서광사.
- 테렌스 볼·리처드 대거 저. 정승현 외 역. 2011. 『현대 정치사상의 파노라마』. 서울: 아카넷.

4) 논문

- 강정인. 2001.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로마사 논고를 중심으로,” 『계간사상』 (여름호).
- 곽준혁. 2003. “갈등, 혼합정체, 그리고 리더십: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9집 2호.
- _____. 2005.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 체제의 두 가지 원칙,” 『한국정치학회보』 39집 1호.
- _____. 2005. “심의 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 『국가전략』 제11권 2호.
- _____. 2008. “시민적 책임성: 고전적 공화주의와 시민성,” 『대한정치학회보』 제16집 2호.
- _____. 2009. “공화주의와 한국사회: 필립 페터 교수와의 대담,” 『아세아연구』. 52권 1호.
- 곽차섭. 2011. “공화주의와 우리의 마키아벨리언 모멘트,” 『철학과 현실』 제 89호.
- 김경희. 2005. “비르투 로마나를 중심으로 본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한국

- 정치학회보』 제39집 1호.
- _____. 2007. “서구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전개,”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
- _____. 2011. “자유의 정치학으로서 마키아벨리적 공화주의: 포카의 마키아벨리언 모멘트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회』 제210호.
- 김남국. 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학회』 제45집 4호.
- 김비환. 1986. “마키아벨리 정치사상의 르네상스적 성격,” 『수선논집』 제10호.
- _____. 1999. “가치다원화와 공동선 그리고 한국의 경우,” 『법철학연구』 제2권.
- 김용직. 2002. “신국가혁신론과 정치개혁-이론과 과제,” 『사회과학논총』 제15집.
- 김종범. 2004. “군주론과 로마사논고에 나타난 마키아벨리의 근대국가 개념의 차이성 및 동질성 연구,” 『이탈리아어문학』 제14집.
- 박상섭. 1998. “Virtú(비르투)의 개념을 중심으로 본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세계정치』 제22권 1호.
- 안정석. 2009. “마키아벨리와 리비우스의 사이에서: 근대성의 정치철학,”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4호.
- 양해림. 2008. “한국사회에서 공화주의의 이념은 부활할 수 있는가?,” 『시대와 철학』 . 제19권 1호.
- 윤진표·제대식. 2000.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연구: 군부와 이슬람세력 간의 동화,” 『국제정치학회』 제40집 3호.
- 이동수. 2005. “민주화 이후 공화민주주의의 재발견,” 『동양정치사상사』 제6권 2호.
- 이명순. 2007. “공화주의의 유형과 그 비판: 강한 유형과 약한 유형,” 『철학사

상』 제26호.

- 이진희. 2005. “공화주의 시민성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제75호.
- 장동진. 2006. “심의민주주의와 한국 정치,” 『연세행정논총』 제29집.
- 정승현. 1987. “정치질서를 통한 인간본성의 馴致: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현대사회』 제28호.
- 조일수. 2009. “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연구: 아테네적 전통과 로마적 전통의 차이를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80호.
- 홍성구. 2011.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보완: 공화주의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9권 2호.

3. 국외 문헌

- Strauss, D. F. M. 2007. “The Transition from Greco-Roman and Medieval to Modern Political Theories,” *Politikon*. Vol. 34, No. 1.
- B. Crick. 2007.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Vol. 55. No. 3.
- Canovan, Margaret. 1995. “Republicanism.” in Seymour Lipset(ed.). *The Encyclopedia of Democracy*.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Vol. IV.
- Canovan, Margaret. 1995. “Republicanism,” in Seymour Lipset(ed.). *The Encyclopedia of Democracy*.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Vol. III.
- Colish, M. L. 1971. “The Idea of Liberty in Machiavelli,”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32, No. 3.
- Gutmann, Amy. 1987. *Democratic Educ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onohan, Iseult , 2002. *Civic Republicanism*. New York: Routledge.

Kymlicka, Will. & Norman, Wayne. 1994. “Return of the Citizenship: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Ethics*, Vol. 104.

Kymlicka, Will.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 Carrese. 2001. “Defending Machiavelli and Opposing Machiavellism,” *The Review of Politics*, Vol. 63, No. 3.

Pettit, Philip. 1999. *Republicanism*. Oxford: Oxford Univ. Press.

Y. Peled. 2007. “Towards a Post-Citizenship Society? A Report from the Front,” *Citizenship Studies*. Vol. 11. No. 1.

4. 기타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25518>) 참고.

“시민적 공화주의를 위하여,” 『한겨레』 (2007년 2월 13일자) 참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90406.html>.

“인종적 순혈주의는 파시즘을 부른다,” 『조선일보』 (2012년 4월 19일자) 참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9/2012041901752.html.

“공화주의, 제3의 길인가,” 『동아일보』 (2006년 9월 12일자) 참고; <http://news.donga.com/3//20060912/8349770/1>.

“20, 30대 절반이 이민 가겠다니,” 『한국일보』 (2003년 4월 24일자)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0609949>.

“생각의 전환점들,” 『아시아투데이』 (2011년 6월 22일자) 참고; <http://www.asi>

atoday.co.kr/news/view.asp?seq=493612.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왜 공화국 논의가 필요한가(下),” 『경향신문』 (2009년 1월 11일자) 참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111718125&code=210000

“탈북자 2만명 시대, 의미와 과제,” 『연합뉴스』 (2010년 11월 15일자)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64442>

한국이민학회. 201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 여성가족부

ABSTRACT

A study on Republican Citizenship of Niccolo Machiavelli's Discourses on Livy

Yoosun Im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Niccolo Machiavelli's concept of republican citizenship, centered on his book, *Discourses on Livy* (1531) and to explore its politico-philosophical implications in politics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emporary Korean society faces acute inner conflicts due to its ill effect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Self-centered individualism and political apathy resulting from the notion of negative freedom of classical liberalism are also prevalent among the Korean citizens. Such social phenomena not only deepen socioeconomic polarization and weaken the communitarian base of society but also deter Korean politics from its revitalization.

Currently, Korean society is in agony of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and is devoting itself to its actualization. Now is the very time for the Korean citizen to be required to have a mature citizenship which is the condition of a certain driving force and support base of actual development of democracy. Therefore, this thesis lays emphasis on the classical republicanism, particularly Machiavelli's citizenship that mainly aims for the common good b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itizens.

Niccolo Machiavelli, a modern political philosopher, is referred to as the founder of republicanism and his literary masterpiece, *Discourses on Livy* is widely considered to be the origins of republicanism. In this book, he argues to build the political order that practices citizenship by the rule of law in which the common good is secured for civil liberty. In other words, he highlights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of all citizens to recover social obligations and communal solidarity of the members of society.

Therefore, in this thesis, I try to propose an idea about how Korean society can overcome its current political crisis, eventually aiming for making up for the limitation of liberal democracy through Machiavelli's *Discourses on Livy* in which he mainly discusses the condition of political rise and fall by comparing the 15th century's Italian realpolitik with that of the Roman Republic.

These days, the concept of Machiavelli's citizenship is actively discussed in both academia and political discourses on citizenship. A Republican citizen attaches a great importance to the rule of law. Particularly, Machiavelli explains that the legislation is valuable and difficult job for the building and maintenance of a free nation through analyzing the building history of the Roman Republic. Machiavelli also insists that both a leader and a citizen should be equipped with "virtue" as defined by himself for the continuous prosperity of a nation. He regards citizenship as a twofold thing, that is, civil virtue is a necessary condition that enables sou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at the same time such citizenship is a unique one that can be cultivated through participation.

To put it briefly, republican citizenship implies the civil virtue that sings the praises of liberty in the rule of law and enables citizens to take an active part in

community, regarding their liberties as indispensable. When individual freedom is unfairly infringed or oppressed, the citizen should be able to play an appropriate role to defend freedom.

In conclusion, through Machiavelli's concept of republican citizenship this thesis attempts to provide a useful clue to solve problems such as inner conflicts of Korean society, extreme individualism, and difficulties in reaching public agreement for the common good.